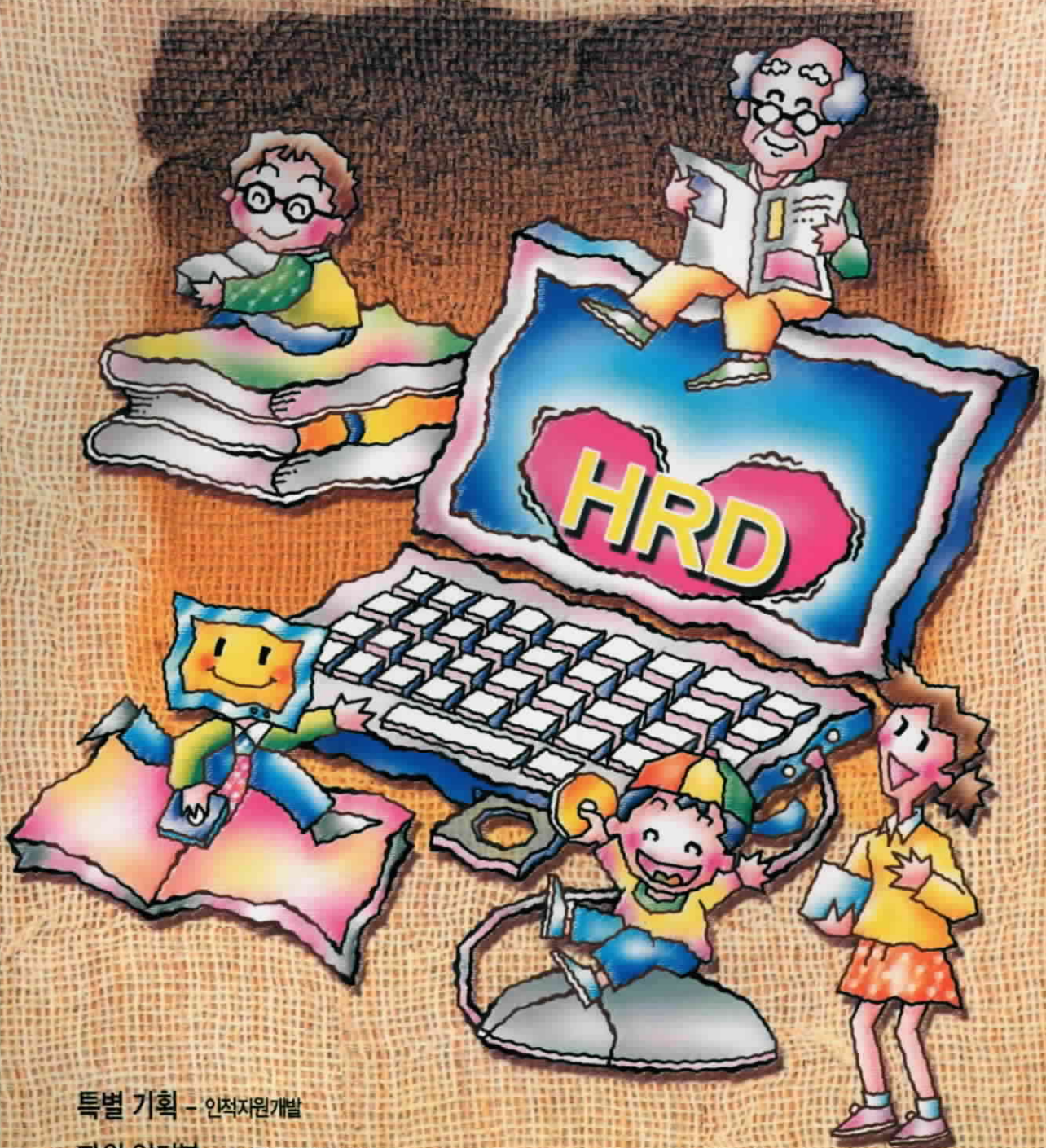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2001 9·10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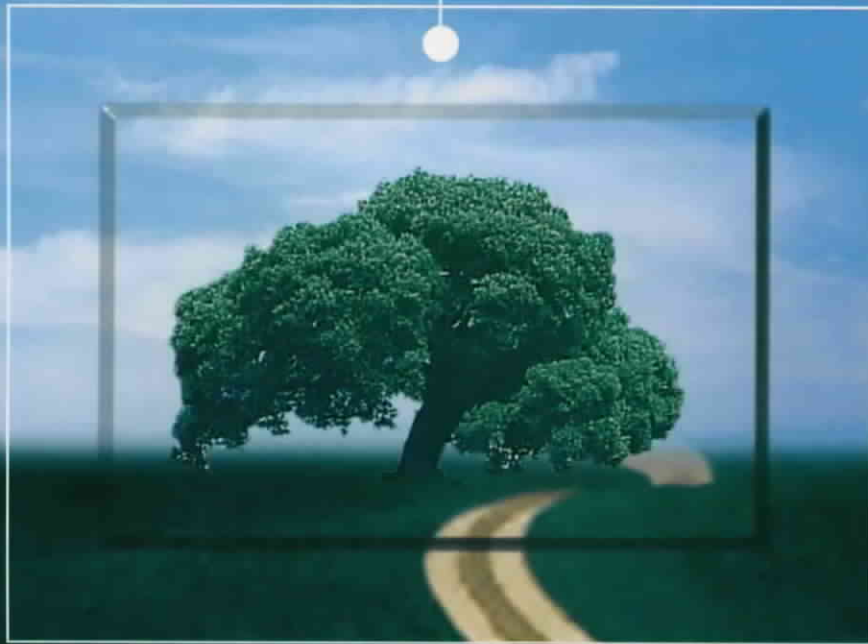
www.kedi.re.kr



특별 기획 - 인적자원개발

파워 인터뷰 - 한명숙 여성부 장관

한국 교육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정도만을 걷겠습니다



1972년 8월에 설립되어 29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Tel : 3460-0114 Home-Page: www.kedi.re.kr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인적자원 자격체계 구축이 급하다

곽병선 | 본지 발행인,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kwak@ns.chedi.re.kr

경 제활동과 지식·기술과 같은 문화자본의 유통에 있어서 국경과 국가의 통제가 힘을 잃게 된 세계 시장구조에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 이 경쟁의 열쇠는 인적자원의 질에 달려있다. 바로 이 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인적자원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해 놓았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또는 사회 공동체로서 자기 주도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성원을 길러내야 할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과제에 있어서 우리가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는 여러 가지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다가오는 새 천년 미래 사회의 인적자원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인간적 소양과 역량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탐색하고 이 결과를 인적자원개발의 실제에 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적자원의 요소인가를 밝히는 일은 매우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할 지난한 과제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일도 못된다. 이미 영국은 국가자격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자격체계를 기초로 학교교육, 직업훈련교육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자격체계의 영역을 크게 학력, 일반 직업능력, 취업능력별로 대별하여 각 영역별 성취 수준을 5단계로 통일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상세화하여 놓았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을 6대 핵심기능으로 구체화하여 놓았다는 점이다. 6대 핵심기능을 보면 커뮤니케이션 기능, 수리 기능, 정보화기능, 평생학습기능, 문제해결기능, 업무 협동기능으로서 21세기를 내다본 매우 미래지향적인 입장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인적자원의 자격 체계가 구축되면, 개인의 경우는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학습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고, 조직의 경우는 인적자원의 채용 기준이나 능력 개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는 미래에 요구되는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목표 설정 및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적자원의 자격 기준 설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통로가 제공됨으로써, 특히 학벌 위주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력 사회의 폐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인적자원이 구비해야 할 질적 지표의 설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질적 위상 파악 및 점검이 가능함으로써 지속적인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질적 향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인적자원의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일이다. 구호성 방향만을 바라보고 막연하게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할 일은 아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국가인적자원 자격체계를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참여와 합의를 도출하여 마련하는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이러한 점에서 국가인적자원의 자격체계에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과 정책당국의 정책의지를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



6 파워 인터뷰 - 한명숙 여성부 장관
 여성인력은 인적자원개발의 보고
 여성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양날개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양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 수 있는 것
 과 같은 이치입니다.



14 특별기고 - 한국교육개발원에 바란다
 - 창립 29주년을 맞이하여 -

이돈희 / 본원 제10대 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16 현안칼럼 - 교육에 대한 경제분위 접근을 경계한다

강태중 / 중앙대학교 교수

21 특별기획 - 인적자원개발

59 세계의 교육

22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과제

김태기 / 단국대학교 교수

60 미국 : 미국의 탁아(Daycare)와 유아원 교육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영주 / 시카고 통신원

28 국제기구의 인적자원개발 방향과 권고

한승희 / 서울대학교 교수

65 중국 : 기숙제 유치원

강영민 / 북경 통신원

34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교교육의 기능

유현숙 / 한국교육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장

69 독일 : 독일 학제에서의 낙제

장은희 / 베를린 통신원

40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최돈민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73 영국 : 영국의 교육민영화 실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태욱 / 런던 통신원

47 국가교육통계로 본 인적자원의 잠재력, 학교교육

이만희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77 일본 : 오사카의 아동살상사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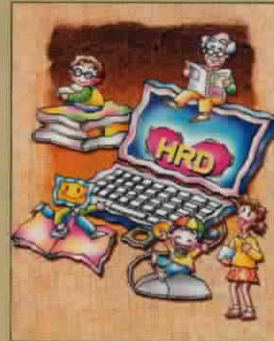
일본의 '열린학교운동'의 항방

53 인적자원으로서의 인간자본과 사회적 자본

김태준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정미 / 동경 통신원

표지 이야기



배움이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다. 시대가 변하면서 하루하루 늘어나는 지식과 정보의 양, 나이를 초월하여 그 모든 것을 습득하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21세기의 학습 형태이다. 인적자원개발, 그 기초를 다지는 일에 교육개발이 함께 한다.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곽병선

홍보출판심의위원회

현 주(위원장), 공은배, 구자익, 김정래, 김홍주, 이종태, 정박희, 최든민, 최상근, 한관길, 한유경

홍보출판팀장

김정래

홍보출판팀

채경은 정재기 이경희 이순희

디자인

광고회사 신하기획(02-2277-6507)

미술팀장

신석주

에디터

조애란

편집디자인

김혜진 이혜영

일러스트

강 원

사진

채경은

시스템출력

맥커뮤니케이션

인쇄

디앤피테크(02-462-9501)

Home-Page : www.kedi.re.kr

교육개발 웹진 : www.kedizine.kedi.re.kr

E-mail : keditor@ns.kedi.re.kr

ISSN 1228-291X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인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01년 8월 20일 발행/격일간

등록번호 문화비02718, 등록변경/2001년 4월 11일

값 4,500원

82 발언대 - 인적자원개발에 대해서

82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사의 역할

김진성 / 구정고등학교 교장

86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략

윤여각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전문위원

92 학교 성교육4 - 우리 나라편

- 생식적 성에서 양성평등의 성으로

박효정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98 Research Findings

교육관련 세계의 연구

김정자 / 한국교육개발원 전산정보팀장

100 KEDI 연구 보고서

107 신간 소개

110 독자의 소리

세계는 물리적 힘이 지배하던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섬세함과 창의성이 지배하는 지식정보화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와 인식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응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도와 국가경쟁력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인력은 인적자원개발의 보고(寶庫)

한 명 속 여성부 장관



대담 / 김정래 (한국교육개발원 홍보출판팀장, jkim77@ns.kedi.re.kr)

장관님께서 여성부의 초대 장관으로 취임하신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설부처로서 여성부가 지닌 위상과 수행해야 할 역할 등을 과거 여성특위와 견주어 소개해 주시지요.

우선, 설치근거규정으로 볼 때, 여성특위는 정부조직법상 설치된 대통령 소속기관이었고, 여성부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즉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부는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여성부에는 각 부처의 정책이 남녀평등적 관점에서 입안,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노동부의 일하는 「여성의 집」(현재는 여성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개칭)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문제, 그리고 중군위안부문제 및 사회교육업무 등에 관한 집행기능이 부가되었습니다. 즉 여성부는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 외에 자체적인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면모를 갖추

게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국무회의 배석만 했던 여성특위 위원장에 비하여 여성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법률안 제출권 및 부령 제정 권한이 부여되는 등 일반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여성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관 취임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장관님의 업적 중에서 꼽을 수 있는 것은 오는 11월 1일 시행을 앞둔 '모성보호법'의 개정입니다. 이 법 개정의 의미와 개정된 법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던 모성보호관련 개정법률이 7월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의 개정은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과 육아 문제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출산휴가 연장 30일분에 대한 비용은 국가재정

과 고용보험에서, 그리고 육아휴직시 소득보전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실현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의 시간 외 야간 휴일근로 및 갱내근로의 제한 등을 ILO의 조약 및 권고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여성고용기회 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한편,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간접차별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일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녀고용평등기반을 확충한 것은 커다란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으로 전반적으로 모성보호가 강화되고, 그 비용의 국가적·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으로써, 근로여건을 확보하여 여성인력개발이 보다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은 모성보호법 개정의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여성부의 두 가지 핵심 축은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여성권익보장'입니다. 그만큼 여성인력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을 공포하고 올해를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언하였습니다. 헌장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장관님이 가지고 계신 '전략'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녀평등헌장」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로의 진입이라는 변화를 반영하여 한 마디로 남녀가 평등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할 수 있

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이 법 개정의 대표 발의를 하셨고, 여성부 초대 장관으로 오시면서 국정 수행에 전념하시기 위해 의원직도 용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법 개정에서 숨겨진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모성보호관련 법안의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강도 있게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갑자기 행정부로 오는 바람에, 말하자면 선수가 없어진 것 같이, 법안이 표류를 했지만, 여기 와서도 원력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했지요. 그 중에서 노동계, 여성계, 재계 등 많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성을 제외한 많은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성보호 관련법안이 여성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다' 이렇게 머리 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편견 때문에 법 개정을 하는 데에 많은 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모성이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커야 건강한 노동력이 재생산된다.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했지만 이 문제를 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설득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지난 7월 3일 여성부는 「남녀평등헌장」

습니다. 과거보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성차별적인 언어와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평등헌장」의 제정은 남녀의 인권을 존중하고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저희는 헌장에 담겨있는 정신, 세부적인 실천을 포함한 해설서를 발간하고, 6개 부처의 여성담당관 회의를 소집하여, 보다 구체적인 「헌장」의 활용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중·고등학교의 자율학습 시간에 남녀평등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보조교재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여성권익보장의 차원에서 보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성차별적인 법제도, 의식 및 관행의 개선작업도 필요하며, 아울러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고급 여성인력은 적잖게 배출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국가와 사회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특히 남성만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지만, 남성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의 영역을 개척하고 넓히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성 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향후 전망과 장난님께서 펼치고자 하는 시책 등을 소개해 주십시오.

흔히,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 타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악화되어 L자형 타입을 보이고 있다는 다소 우려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 고학력의 취업률이 대학 졸업자 이상은 10% 정도 되고, 전문대학까지 합치면 17.8% 정도입니다. 그런데 취업한 여성들이 다 그대로 취업이 유지되면 상관 없는데 중간에 또 M자 곡선으로 되거든요. 즉 그만두었다가 다시 취업하는 형태로서 처음에는 정규직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출산기인 20~30대에 취업률이 쭉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 나라 고학력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의 경우 54%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93%예요. 54%와 93%라는 수치가 뜻하는 바는 뭐냐하면, 93%라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자원 금광맥은 다 캐다는 거예요. 포화 상태예요. 더 캐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54%라는 것은 절반이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절반 남아있는 여성의 인적자원을 어떻게 캐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적자원을 캐야 되는데, 그것을 잘 캐서 제대로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우리 나라 전체가 경제 발전과 사회발전을 이룩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처럼 여성 고학력이 많고 교육열이 높은 상황에서 여성들의 인적자원을 제대로 캐내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육아시설을 확충하여 어린아이를 개인의 부담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관여해서 키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 그리고 다음 세 번째가 교육훈련입니다. 여성들도 직장에 가서도, 그리고 직장 가기 전에도 전문교육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런데 현재 직장에 가서 여성들이 교육받는 비율이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요. 훈련도 떨어지고 외국연수는 더욱 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성들의 평생교육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부의 두 가지 핵심 축은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여성권익보장'입니다. 그만

큼 여성인력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진입한 이후,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성도 남성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일구어가는 당연한 한 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모성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성근로자들에게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의 총체적 준비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면, 여성권익보장의 차원에서 보면, 여성들



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성차별적인 법제도, 의식 및 관행의 개선작업도 필요하며, 아울러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직장을 가진 여성인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현재 전문학적 숫자의 전업주부가 가진 능력이 잠재되어 있고 사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부가 직장여성을 위하여 모성보호법을 통과시켰다든지 또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린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여성부가 기울어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전업주부들이 실체가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힘을 좀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동력화 하느냐가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주부들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부들의 제1희망이 취업이에요. 전업주부들도 취업을 바라요.

그러나 이 경우 취업이라는 것이 일반보통사람들의 취업과는 다르죠. 파트타임이라든지 재택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업주부에 맞는 형태의 취업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우리 여성부에서 하고 있어요. 46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특히 IT 여성재취업 훈련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보통신부와 연계해서 정보통신부가 200만 주부들에게 IT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의 기획은 여성부가 하고, 재취업을 돕는

훈련프로그램같은 것도 여성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활동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경제활동이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여성부가 가지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 소비, 교육문제 등의 효과적인 해결을 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봉사를 한 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될 때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별로 1,000명씩, 16,000명을 선정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월드컵과 관련지어서 월드컵 행사 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주부인력을

조직화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주부들이 자원봉사에 활발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성부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적 평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가 없기 때문에 주부들이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보험료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일용직 노동자 수준으로 되거든요. 이때 가사노동 가치를 우선계정을 하도록 하는데, 보험료, 손해배상청구, 또 경우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권 등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제대로 가치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을 사회적 가치로서 환산을 하는 일의 일환으로 '아줌마를 키우는 아줌마'를 줄인 '아기야'라는 민간단체와 여성부가 공동협력사업도 하고 지원도 합니다.

여성 인력이 남성 인력보다 규모면에서나 성과면에서나 월등하게 우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교직사회일 것입니다.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성 인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직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무엇보다도 교육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여성교사분들에게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계에 여성인력이 많은 것은 교원의 수급구조가 갖는 이점도 있겠지만, 섬세함, 유연성이 강조되는 교육이라는 특성상 여성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여성인력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여성교

교육분야에서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어린 학생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원들께서 교육철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더욱 높여서 교육계에서 훌륭한 여성교원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여성교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일부 부정적 견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앞장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육분야에서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어린 학생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남녀평등적 관점에 대한 교육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져 미래의 여성인력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여성교원들께서 앞장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중등교원은 여성인력이 많지만 대학 교수의 여성 인력 비율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 고등교육에서 교수를 포함한 여성전문인력확충 등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각 대학에 여성교수의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부는 이의 해소를 위해 우선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의 평가시에 여교수의 비율이 평가지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연구소 등 사적 부분도 여성인력이 미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여성박사가 1,500여명씩 배출되고 있으나, 사회적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부는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고학력여성

의 진로정보망을 구축하여 고학력 여성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고학력 여성인력의 특정분야 편중 현상도 문제입니다. 즉 여성고학력의 대부분이 인문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공계통에는 여성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조치로서 어려서부터 과학분야에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여학생 과학친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큼니다. 전통적인 여성관과 새로운 세기를 맞아 요구되는 여성관 사이의 괴리와 갈등도 적지 않은 파장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여성교육에 대한 방향과 과제 등 장관님의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세계는 물리적 힘이 지배하던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섬세함과 창의성이 지배하는 지식정보화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와 인식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응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도와 국가경쟁력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계가 산업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 등을 여전히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1세기 정보화



'여성부'가 영어로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이니까 '양성평등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에서 남성이 불이익을 당할 때는 남성도 그 권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남성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양날개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양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대에 부합하도록 여성도 남성과 사회발전을 이룩하는 데 당당히 한 축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겸허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학생들에게는 '21세기는 남녀가 함께'라는 슬로건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교육계에서 각별히 노력해주셔야 미래의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의 주요 연구사업 중의 하나가 '한국관시정연구사업'입니다만, 최근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하여 종군위안부 문제 등 여성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장관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 우리 여성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종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삭제된 부분입니다. 1930년대 초부터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제가 자행한 종군위안부제도는 정부와 군대가 조직적으로 엄청난 수의 여성을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강제로 끌어들여 성을 유린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비인도적 행위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제대로

기술하고 교육하는 것은 개인과 인류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비인도적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이와 같은 야만적 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권 및 평화의 중요성을 후대에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우선 우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다 자세히 기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교과서가 수정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한·중·일 동북아여성고위지도자 회의의를 개최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려의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세계 23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인여성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한민족네트워크 출범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각자가 거주하는 해외로 돌아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31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에서 개최되는 세계인종철폐회의에 제가 정부대표자격으로 참석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부분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여성부는 일본정부와 국민들이 일본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세대들에게 과거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가르침으로써, 장차 이들이 주변 제국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일본은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사려 깊게 대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여자들은 말하네/ 우리에게 하느님은 너무 멀리 있고/ 남자는 너무나 가까이 있다”(김승희 작, '사랑')라는 시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은 여성에게 너무 멀리 있고, 사랑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수탈자인 남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 여성에게 고통이 된다는 메시지가 담긴 시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남성의 위상과 역할이 여성의 위상 정립과 역할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우리 나라의 남성들은 가정의 책임에 대해 그 동안 과도한 부담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물리력이 지배하던 산업사회의 가치관과 유교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가부장제적 문화의 굴레가 혼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제 저녁 늦은 퇴근에도 불구하고, 일찍 출근하는 남편, 그 남편을 위해 〇〇〇을 준비했습니다”라는 제약회사의 광고가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로 이와 같았다고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이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를 위해 노력한 반면, 가정적으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육아, 가사 등의 문제에 있어서 남성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스스



로도 외부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는 단 2명에 불과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생각해도 여성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남성들을 동반자로 생각해서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부'가 영어로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이니까 '양성평등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에서 남성이 불이익을 당할 때는 남성도 그 권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남성들이 모든 부문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책이 관철되고 파급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성정책은 문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남성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양날개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양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남성에게 과도하게 지워져 있었던 가정에 대한 책임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맡아야 합니다. 사회적 역할도 그렇거니와 가정에 있어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남녀평등은 절대 여성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남녀가 함께 할 때에만 남녀평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남성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은 금년으로 창립 29주년을 맞는 국내 최장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또 자랑같습니다만, 저희 기관은 남녀 직원의 비율이 50대 50이며, 주요 보직자 중에도 상당수의 여성 인력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교육전문 연구기관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교육개발원의 남녀평등 실천은 익

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 비율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남자가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이러한 성과가 한국교육개발원에만 머물지 말고, 모든 연구기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육개발원 안에 직제 자체가 남녀평등교육을 그런 정책을 개발해 낼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는 몰라도,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남녀평등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는 연구 업무 중에서, 예를 들면, 교육조사통계의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통계나 조사사업이 성별 분리사업이 안 되어 있어서 성별분리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별체계 구축을 할 수 있는 조사통계를 저희가 정부 각 부처에다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자료에다가 성별분리 구축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성정책, 특히 남녀평등정책을 이러한 통계와 사실 위에서 피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연구업무와 영재교육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학교평가사업도 수행하신다고 했는데 평가사업의 평가지침 속에 여성인력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 분포되어 있는가를 평가준거로 넣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도 세심하게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구사업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남녀 평등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느냐를 좀더 세심하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교육개발원에 바란다

- 창립 29주년을 맞이하여 -

글 / 이돈희 (본원 제10대 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dhlee@plaza.snu.ac.kr)

한 국교육개발원은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완전한 성년기에 이르렀다고 할 만큼 역사와 전통을 지닌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교육부문 종합연구기관으로 그 위세와 공신력을 자랑하는 위치를 차지해 온 지도 이미 오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창립된 이래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교육의 발전에 요구되는 정책연구, 프로그램개발, 문제분석, 현장평가 등에 걸친 광범한 영역의 중요한 과제들은 거의 이 기관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해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 교육이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한국교육의 발전을 선망하는 나라의 교육자들 중에는 그 발전의 배경에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종합적인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UNESCO, OECD 등의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교육개발원은 세계적 연구기관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고, 실제로 우수연구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다.

이러한 한국교육개발원이 1900년대의 말기에 이르러 정부의 교육개혁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연구기관의 기능적 분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해야만 했다. 교육방송을 필두로 해서 교육과정, 직업교육, 교육정보화 등을 담당하던 부서들이 그 자체로서 혹은 다른 기관과의 통합에 의해서 새로운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한 것이 그것이다.

연구기관의 분업화 혹은 전문화는 교육발전에 요구되는 연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서 나타나는 어찌면 필연적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불행으로 다가온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의 진행 속에서 이루

어졌기 때문에 모체인 한국교육개발원도 그렇거니와 신생 연구기관들도 좋은 조건으로 출발 혹은 재출발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은 정책연구 기관이라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동안 중심사업으로 여겨왔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개발을 대신하는 중핵적인 목적사업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기능적 모호성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약속한 학교평가의 지원이 지금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며, 균형 있는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장단기적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의 개발과 인력의 확충이 아직은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평생교육, 유아교육, 통일교육, 영재교육 등의 특수관심분야도 유사기능을 가진 연구기관과의 기능적 마찰을 다소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과제 수탁의 경쟁상태에 놓이면 연구진 규모의 기준에 의해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내면적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한국교육개발원은 그 면모를 별로 훼손된 기색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자리잡은 전통의 저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연구기관의 기능적 분업과 재편성은 1995년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되면서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나, 개혁의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운영의 자율성을 소유했던 정부지원의 조직은 개혁을 주도하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자율성은 반드시 외부의 통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존재방식을 특징짓는 내부의 활력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기관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발전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전략적 과제를 재개발하며, 행정적 체제를 재조정하고, 인력적 구조를 재충원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밖의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산출물을 통하여 정부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급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교육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교육현장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청되는 전문적 조언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손이 작용하여 진행되면 기관의 위기는 언제나 남게 된다.

그러나 교육관련 연구기관의 기능적 분업이 반드시 한국 교육개발원의 기능적 위축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은 지금까지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생존을 위한 노력, 특히 다른 기관과의 치열한 경쟁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기관 자체가 얼마나 자생적 역량을 지니느냐이다. 물론 연구기관의 자생력은 정부출연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법령과 정부의 통제방식이 변화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기관은 언제나 그 성장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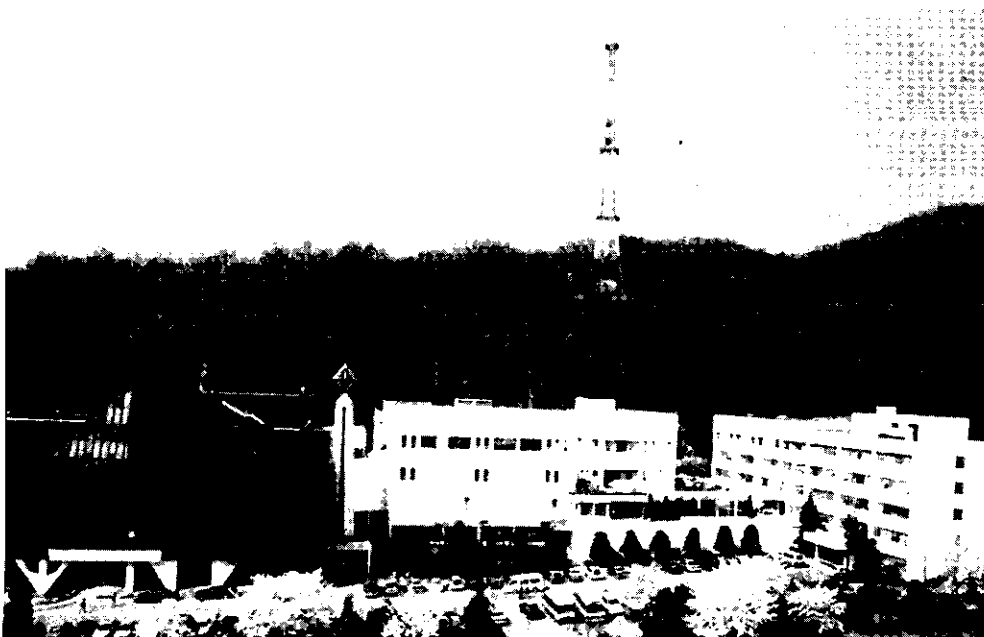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생존과 발전을 위한 자생적 노력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부과된 과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체의 존속을 정당화할 만큼의 비중과 가치를 지닌 사명과 과업을 스스로 천명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계획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제 일차적으로 정책연구기관이라는 것으로 그 정체성을 내세우고 그것에 충실해야 할 역사적 단

계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자체의 생존을 위하여 우선 여러 가지의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연구수요를 충족시키는 일도 해야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교육의 역사적 배경의 이해, 현실적 상황의 분석, 미래적 향방의 전망을 위한 권위 있는 '등잡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산출물을 통하여 정부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급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교육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교육현장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청되는 전문적 조언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연구는 현안문제에 집중적 관심을 두는 협의의 미시적 정책연구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거시적 관점을 요하는 광의의 정책연구로서 역사적, 철학적, 사회과학적 연구역량을 보강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격의 정책연구에 대한 사회일반과 정부요원의 관심은 그 필요성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지원과 투자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는 것도 연구기관의 사명에 속하고 그 성과는 기관의 역량에 속한다. 이러한 사명과 역량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절대적인 것이며, 어떤 다른 기관의 것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우리에게 한국교육개발원이 없는 한국교육의 발전을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기능과 역할은 절실한 것이다. **교육**



교육에 대한 경제본위 접근을 경계한다

글 /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수, tjgahng@cau.ac.kr)

최 근 우리 공교육에 대한 논란이 부쩍 달궜다. 무엇보다도 공교육을 성토하는 언사들이 열기를 띠고 있다. 공교육이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시각에서 제기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지면서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교육을 보는 입장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교육을 걱정하고 걱정을 풀어갈 방안을 내놓지만, 일상적으로는 그 걱정이나 방안들이 대체로 한 목소리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 누구나 비슷한 걱정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여러 이야기들을 곰곰이 따지며 들어보면 그것들이 한 가지 소리가 아님을 곧 알게 된다. 아니 이제는 곰곰이 음미하지 않더라도 입장이 다른 이야기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될 만큼 갑론을박의 양상이 흔하게 보인다.

어느 한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논란하게 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도 불행한 일도 아니다. 다양한 입장이 생겨나고 서로의 타당성을 점검하게 되는 일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시각에서의 진단이나 처방은 좀 더 타당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보편타당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시비가 분명하도록 설명을 구성해내는 일이 매우 어렵다. 사회과학이 다루는 현상 가운데서도 특히 교육은 이러한 어려움을 크게 안고 있는 영역이다. 교육에서는 그 성과가 밖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성과가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성과(결과)와 그것에 관련된 과정(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그려내기가 여간 어렵다. 그래서 교육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한 처방을 내릴 때 두루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노릇이다. 다양한 견해의 와중에서 지혜로운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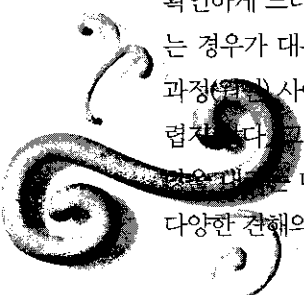
것이 당연한 형국이다. 바로 이 점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교육을 논의하는 데 활발하게 참여하는 게 자연스럽고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여러 갈래 논란이 생산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리는 없다. 다른 입장들은 일관되지 않게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을 이끌고 결과적으로 교육상의 낭비를 초래하곤 한다. 우리 교육정책사에서 이리러니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요새에도 이 점과 관련하여 시사적인 예는 찾아볼 수 있다. 얼마 전 주요 신문들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가 학교 교육에 투자하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며 '대결'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내용은 이렇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003년까지 35명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당연히 소요 예산도 추정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1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하고 나섰다. 학급당 학생수 4~5명 줄이려고 12조원이나 쏟아 붓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 사이의 이견(異見)에는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들어 있다. 적어도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두 부서는 학교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른 '이론'(상식)을 견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선진 교육'을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본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유지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는 학급 규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수조 원을 투입해 학급 인원을 줄이는 것은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식 교육개혁'을 시도하는 꼴이라고 비판한다. 그러



학교 교육의 목적은 사회적인 연대와 질서를 존중하며 생업도 꾸러나갈 수 있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행위와 다른 교육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구성원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투자는 효율이 낮다고 본다.

예산 문제를 두고 부처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는 털 주려고 하고 정책을 펴는 부서는 조금이라도 더 따내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늘 듣는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 사이의 공방도 이런 맥락에서 보고 흘릴 수 있는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공방이 정부 관료들 사이에 일어난 집단이기적 합리화의 싸움을 넘어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관점)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삼을 만하다.

사실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은 입장 대립은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도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과 주장에 동조하는 논설은 교육계나 교육학자들 사이에서 주로 나오는 반면에 재정경제부의 비판에 동조하는 논설은 기업계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주로 나온다. 이와 같이 집단을 나누어 입장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 편견을 키울 수 있는 위험한 일기는 하다. 개인의 의견이나 관점이 반드시 그가 속한 집단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을 테니까 집단을 단위로 의견이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굳이 의견의 무리를 갈라보는 것은 교육에 대한 의견 차이가 학문이나 삶의 배경을 반영하는 점이 작지 않고 그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 데 각각의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계와 경제계가 교육 문제를 두고 서로 대립되는 입장에 서는 것은 우연한 일만은 아니다. 경제에 치중하여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는 경향은 역사와 함께 점차 강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이해(흔히, 교육학적인 이해)를 대체하거나 그 일반적 신빙성을 삭감하여 온 대안적인 견해에는 적지 않게 경제(학)적인 것들이 있다. 앞에서 든 두 부(部) 사이의 입장 대립은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의 이해에서 경제적 측면이 중시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인류사(人類史)의 흐름은

세속화의 흐름인 점이 있다. 신비(神秘)와 신화(神話)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해명으로 인해 점차 그 위상을 잃어왔고, 전통적인 문화와 규범은 타산적인 사고와 행위에 부딪쳐 그 당위적인 힘을 잃어 왔다. 사회 속의 개인에게는 그가 세속적인 득(부, 권력, 명예 등)을 추구해 나가는 데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제도적)으로 제동을 걸만한 요소들이 점차 제거되어 왔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전반적으로 세속적인 가치가 이끌도록 하였고, 결국 경제적인 행위(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득을 노리는 행위)가 상식적인(합리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만들었다. 따라서 교육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행위를 경제의 시각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타당한 구석이 있다.

어쨌거나 경제를 보는 시각으로 교육을 보는 입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서도 교육을 설명하고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경제학적인 안목을 빌려보자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 사실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경제 분야 연구소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와 발언의 빈도를 부쩍 늘리게 되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타는 것이다.

이 추세는 더 일반적인 정책 노선과 관련하여 보면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최근 우리 나라 교육 정책을 이끌고 있다고 흔히 말한다. 이 말은 교육 정책이 경제적 관점에서 입안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길고 상세한 주석이 붙여져야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이 경제적(정치·경제적) 노선임에는 틀림없다. 사회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경제의 시각에서 교육을 보는 것이 상식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계가 견지해 온 전통적인 시각은 정책 논의에서 지양(忌)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학자들이나 경제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교육 부문

에서도 커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주도하는 교육 논의가 과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경제 본위 교육론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상식이 되다시피 했지만 그 논점이 지니고 있는 본질은 종종 간과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지금 그 본질을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경제 본위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인적 자원의 수준, 지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21세기 국가 발전 전략의 제1과제가 되어야 한다. ... 인적 자원의 수준을 높이는 제1차적 임무는 그 나라의 교육에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 전략으로서 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나라 교육의 현황과 현실은 어떠한가? ... 오늘날 우리 교육이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가? 결론은 대단히 미흡하다. ...

우리 나라 교육 개혁의 기본 방향은 ... 두 가지 대원칙 위에서 있어야 한다. 첫째, 교육 자유의 확대이다. ... '관료적 교육가' 대신에 '기업가적 교육가' 들을 대량 등장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이들이 앞장서 우리 교육을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하고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 주권의 확대이다. ... 교육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동시에 생산자 사이에 자유·공정 경쟁을 확대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 소비자의 선호와 선택이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 주장은 교육 개혁이 강력하게 발진되던 때인 1995년에 그 개혁을 이끌던 유력 인사의 기고에서 따온 것이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교육 개혁의 주류(主流) 생각을 잘 보여주는 글이어서 무리를 무릅쓰고 다소 길게 인용하였다. 주장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도 사용된 용어들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위의 같은 주장의 핵심은 교육행위와 경제행위를 동질적으로 보는 데 있다. 경제행위의 원칙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소득을 얻으려는 데 있다. 이 원칙이 교육행위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 주장에 깔린 기본 가정이다. 즉, '교육 소비자의 선택이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교육은 상품이다.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에서 아마도 용역의 상품이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서비스는 팔리는 상품으로 남고 그렇지 않은 서비스는 시장에서 사라져 마땅하다. 교육가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제때에 제대로 파악하여 민첩하게 교육 서비스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업가형'이 되어야 한다.

'선택과 경쟁'이 경제적 교육론에서 핵심적인 슬로건이 되는 이유도 교육 소비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이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의 부문에서 어떤 행위 원칙을 유지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최대의 득이 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가격 대비 품질이 교육 시장에서 최고가 되도록 교육 상품을 만들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이 때에 비로소 교육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위 주장의 핵심이다.

이러한 철학은 교육 개혁의 과정에서 많은 방안 속에 녹아 들어 갔다. 학교나 대학 그리고 교원들이 교육 공급자로서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러 수준에서의 '평가 정책'에 스며 들어갔다. 경쟁력이 없는 공급자들을 도태시키는 과정에는 '교원 정년 단축'과 같은 정책들이 한 몫을 했다. 수요자들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뚜렷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차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자율 학교' 같이 선택 가능한 학교를 도입하는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오고 있다. 수요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이른바 평준화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경제론의 입장에서는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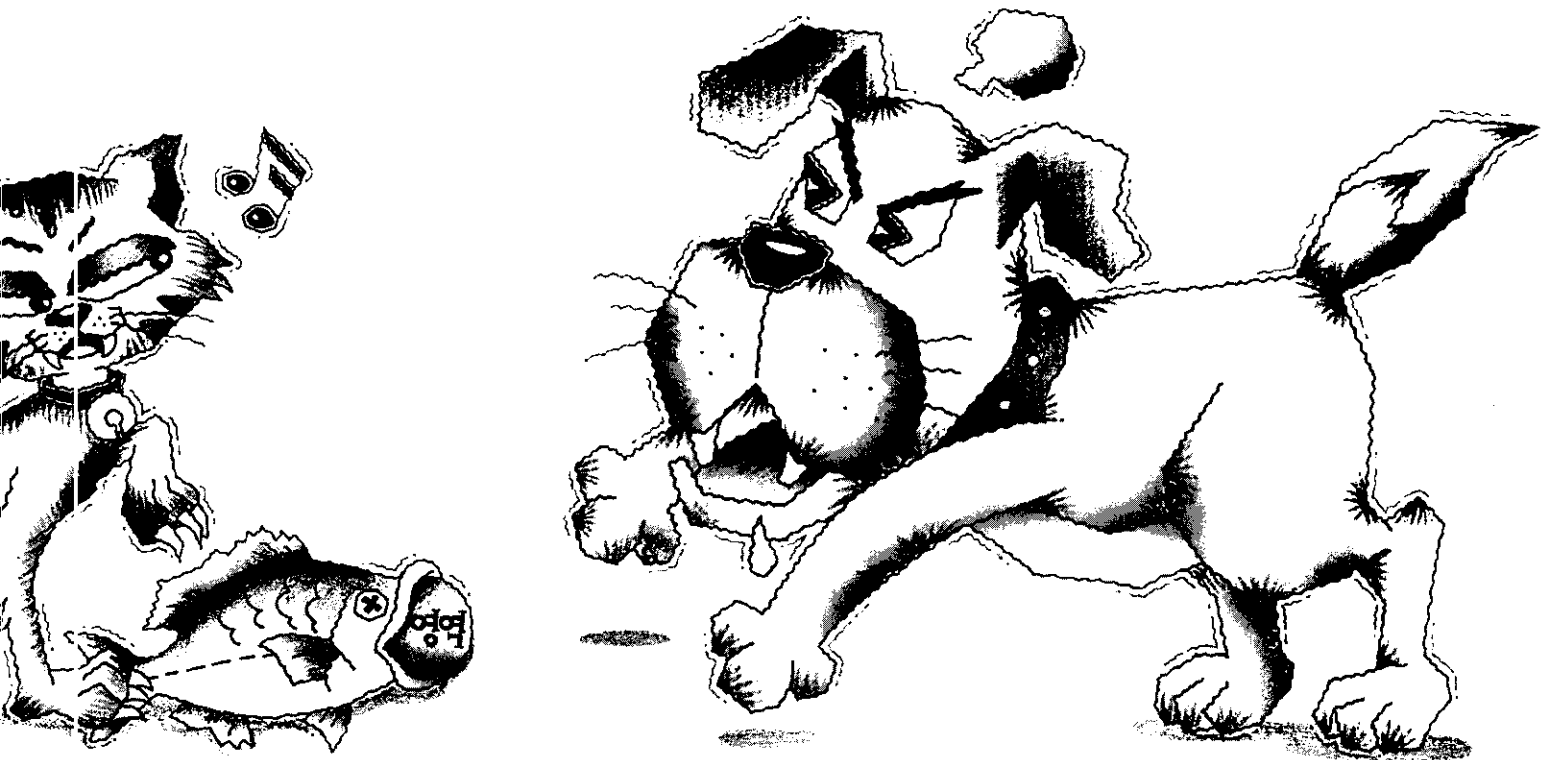
경제 본위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대로 교육 행위가 경제적인 선택 행위나 마찬가지로 된다면 바로 이러한 속성을 품게될 터인데 과연 그러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품을 지닌 창의적인 인간을 키울 수 있을까?

요즈음도 경제 본위 교육론은 정책 논의에서 여전히 큰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최근 교육 예산 문제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가 의견을 달리하는 사례와 관련하여, 경제학적 접근을 취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원들은 재정경제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투자는 '저효율의 투자'이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지금의 교육체제는 돈이 투입돼봐야 누수(漏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컨대, 공급자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구조를 고치는 것이 급선무이지 돈을 더 투자하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라는 뜻인 듯하다. 아니면, 그 돈을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데가 아닌 다른 곳(예컨대,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원격교육 기제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이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만큼 영향력을 지닌 주장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경제 본위 시각은 과연 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어떤 부분 발전을 가져오기도 할 것이다. 예컨대 대학의 교육 환경이나 교수들의 업적에서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는 것은 경제론적 처방이 먹혀들어 간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찮다. 대학에서는 기초학문 분야가 시들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전공) 선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제'라는 교육 시장을 열었더니 기초 분야 교육은 수요가 없는 상품이 되어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초·중등 학교에서는 추락하는 교권과 함께 수업의 기강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러한 성과나 부작용이 모두 경제 위주의 교육 개혁론 탓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은 실로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경제 위주의 관점은 교육을 근본적으로 그르칠 수 있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어쩌면 그러한 결함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교육을 상당한 정도 그르쳤을지도 모른다.

경제적인 시각에서는 효율이 중요하다. 투입된 것에 비해 많은 소출을 볼수록 효율적인 것이며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확인한 바이다. 그런데 이 때 효율은 무엇을 산출하기 위한 효율인가?

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는 앞에서 인용되었던 경제학자들도 교육학자들과 크게 다른 없는 이야기를 한다. 즉, 창의적이고 고등 사고력을 지닌 사람을 키울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적·사회적으로 바른 가치와 태도 그리고 행위를 견지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키우는 데 효율적인 교육이 바로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것이 경제학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의 주장인 셈이다. 논리적으로는 이 주장 자체에 큰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주장이 실제적으로는 모순이라는 데 있다. 경제 원리에 따라 조성된 교육의 과정으로는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창의적인 인간을 키울 수 없다. 앞에서 거듭 확인하였듯이, 경제적인 시각의 주장에서는 경제적인 행위와 동질인 행위로 교육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을 높인다는 것(즉, 교육 목표를 쉽게 달성한다는 것)이 요체인데, 교육을 경제적인 행위로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인간은 키워질 수 없다는

경제 행위는 본질적으로 사적(私的)이고 세속적인 것이다.

세속적인 타산에 맞는 개인의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가장 탁월한(즉,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서 공동체의 선(善)을 우선 감안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행위 목적이 물질적이므로 인본적(人本的)인 배려도 있을 리 없다. 경제 본위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대로 교육 행위가 경제적인 선택 행위나 마찬가지로 된다면 바로 이러한 속성을 품게될 터인데 과연 그러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품을 지닌 창의적인 인간을 키울 수 있을까?

학교 교육의 목적은(적어도 초·중등 교육의 목적은) 사회적인 연대와 질서를 존중하며 생업도 꾸려나갈 수 있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행위와 다른 없는 교육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구성원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늘 접해서 이제는 이상할 것도 없이 여겨지는 교육 행위가 하나 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하는 질문이다. "이거 시험에 나오나요?" 이 질문 행위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제적 행위이다. 시험 성적(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공부하겠다는(즉, 효율을 따지는) 지극히 경제적 행위이다.

타산적 판단을 기초로 하는 수요자의 선택에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맡기겠다는 경제 위주의 주장(앞의 인용문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은 실제로 보면 바로 이러한 질문 행위를 교육의 근본으로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과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창의성 없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오늘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단연코 어렵다. 필자의 대답이 미덥지 못하다면, 위대한 학자(Habermas)의 혜안을 빌려 대답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경제적 행위 양식이 인격적 행위 양식을 함몰시키는 이른바 '생활세계의 식민화'(colonization of life-world)만 초래할 것이다. **교육**

인적자원개발

특별기획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과제

김태기 / 단국대학교 교수

국제기구의 인적자원개발 방향과 권고

한송희 / 서울대학교 교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교교육의 기능

유현숙 / 한국교육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장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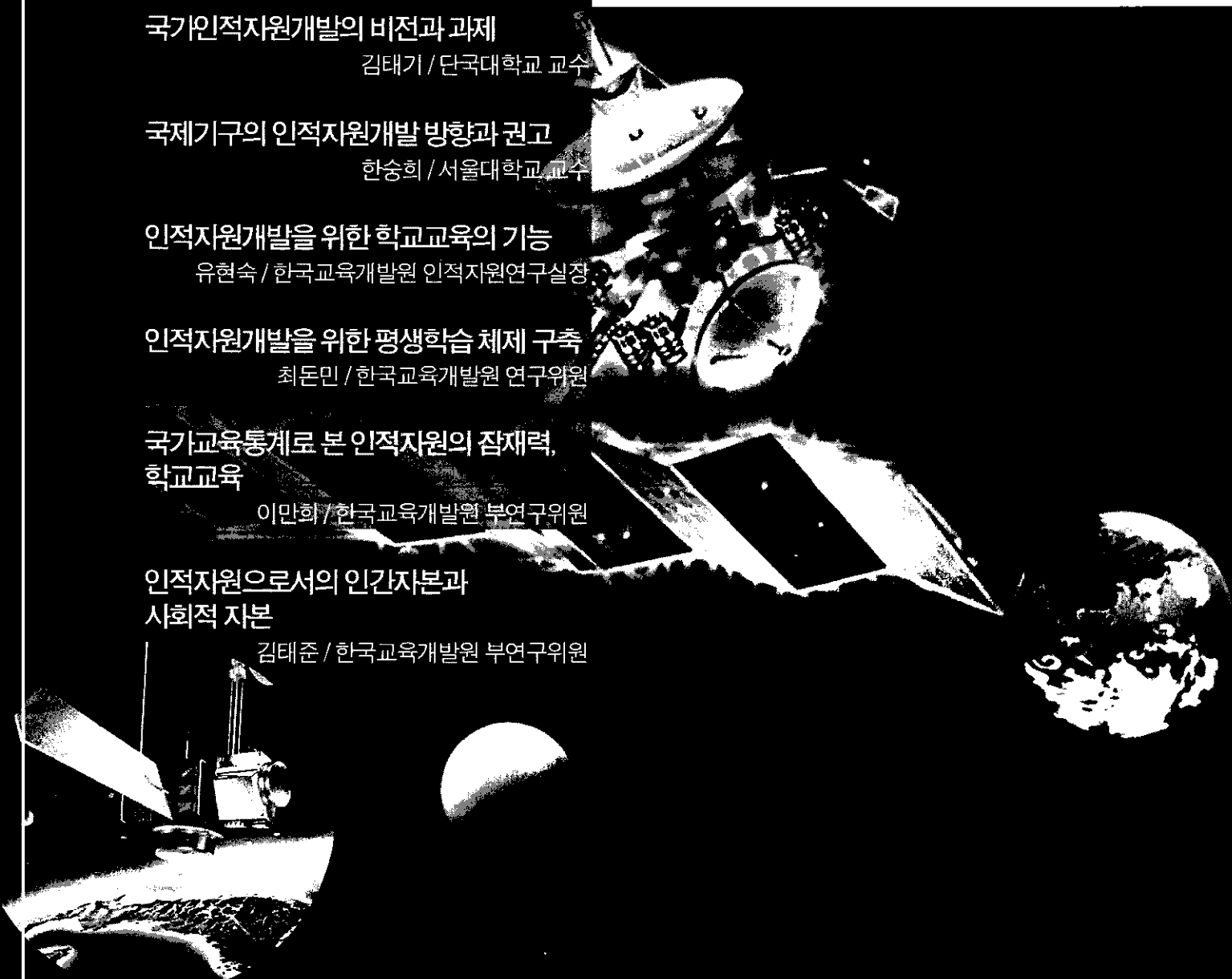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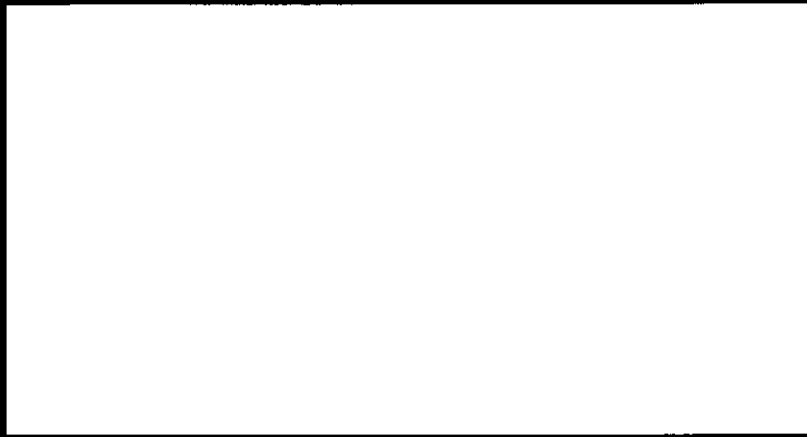
최돈민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국가교육통계로 본 인적자원의 잠재력,
학교교육

이만희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인적자원으로서의 인간자본과
사회적 자본

김태준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과제

글 / 김태기 (단국대학교 교수, HONKOREA@chollian.net)



우리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진학률은 70%수준에 육박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이미 대중교육이 되었고, 최근에는 대학원 진학률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하면서 인적자원은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노동시장에서 신분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고,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의 핵심을 이루는 지식이나 기술의 혁신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국가는 더욱 빠른 속도로 보다 많은 인적자원을 획득하게 되어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지식기반사회가 될수록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수준이 올라가고 반면 개인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은 「성장과 통합의 선순환」과 「쇠락과 균열의 악순환」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국마다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보고, 경제정책과 복지정책뿐 아니라 안보정책 차원에서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미국은 일본과 비교해 경쟁력의 위기를 걱정하였지만, 오늘날은 정반대로 일본이 경쟁력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미국의 우수한 교육시스템과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로 독일이 꼽혔지만 최근에 들어와 핀란드가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핀란드가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하면서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갈등뿐 아니라 잘 사는 계층과 못 사는 계층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인적자원개발의 격차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한편으로는 교육수준에 따라 개인간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자원의 활용에 따라 국가간의 경제력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미국경제의 독주에 대한 각국의 우려나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인종간의 갈등도 따지고 보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인적자원개발이 경제·사회발전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98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평균 -6.7%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은 4.1%를 기록했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지식기반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이 보유한 인적자원에 따라 소득과 노동시장에서 신분이 달라지는 모습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소득과 실업률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실업률의 경우 1998년에는 고졸자의 경우 8.2%인 반면 대졸자는 5.7%에 그쳤다. 또한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의 경우 취업자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해, 최근의 실업난이 상대적으로 볼 때 학력수준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개발은 어떤 상황에서 있는가? 우리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진학률은 70%수준에 육박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이미 대중교육이 되었고, 최근에는 대학원 진학률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가 될수록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기는 장점으로 더 돋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그 성과는 매우 낮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입과 산출을 우리 나라와 미국, 일본 등 선진 5개국과 비교할 때, 투입은 90%정도인데 반해 산출은 3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는 권위 있는 국제기관의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IMD는 인적자원의 경쟁

력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우리 나라가 최하위 수준에 가깝다는 충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 나라가 교육의 열기를 장점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크게 보면 교육이나 고용 등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낮은 의식 및 관행과 잘못된 법·제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서로 얽혀 있어서 어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바로 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 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된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식 및 관행과 법·제도의 문제점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기인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지배는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학교는 기술이나 경제·사회의 변화보다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더 크게 의식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직장생활이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내용과 동떨어지게 된다. 교육과 노동시장이 단절되다 보니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찾고 창의력을 키우는 노력보다는 시험을 위한 공부에 매달리게 되고 반면 학교는 암기력을 시험하는 입시제도에 급급하게 된다.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질적인 입시위주의 교육 관행은 바뀔 줄 모르고 있으며, 대학은 학벌을 보여주는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대학 교육이 부실하고 반면 졸업생인 지원자의 능



인적자원 형성의 주체인 개인은 투자 가치가 높은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개인이 교육을 받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취업이나 연구개발과 교육의 연계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게 된다.

력을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학벌중심의 고용관행에 매달리게 된다. 또한 고용 관행도 경제·사회·기술변화와 동떨어져 있으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며 폐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 때문에 채용이나 승진에 있어서 학연이나 지연 등이 강하게 작용해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의 자기개발 의욕이 감퇴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은 인력수급의 양적 불일치뿐 아니라 질적 불일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할 때 공고 졸업생의 비중은 감소했고, 반면 1990년대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할 때 공고 졸업생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 결과 공고를 졸업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적어 교육의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 들어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양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고급 수준의 정보·통신 인력은 부족하지만, 중급·초급 수준의 인력은 이미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이라는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기업은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은 없다고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계층의 실업률이 높다는 사실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청년계층의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한창 일을 배워야 할 나이에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실업률 통계를 보면 2000년도의 경우 평균 실업률은 4.1%인데, 15~19세 계층의 실업률은 13.7%로 평균의 세 배를 넘고, 20~24세 계층의 실업률은 두 배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개발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 나라에서 교육 부문이 노동 등 타 부문과 단절되어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그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는 데 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만 교육의 개선 방향뿐 아니라 고용 및 연구개발 등의 개선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원은 지식이나 기술뿐 아니라 숙련이나 경험, 태도나 가치관 등 인간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

사나 사회봉사 등 비경제활동에 있어서 한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그 사람의 자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인적자원은 크게 보면 인간의 태도나 가치관과 같은 기초소양과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 등 전문소양으로 나눌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지식과 기술이 복합화 되고 융합화 되면서 지식과 기술의 혁신이 가속화된다. 새로운 직업의 등장 속도가 빨라지고, 개인은 평생동안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개의 직장에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기초소양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보다 커지게 된다. 또한 지식기반사회가 될수록 명시적인 지식, 사실적인 지식에 의존한 인적자원만으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암묵적인 지식이나 방법적인 지식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다.

인적자원개발은 형성된 인적자원이 활용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의 형성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인적자원의 형성은 주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적자원의 활용은 취업이나 연구개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때 인적자원의 가치가 실현된다.

인적자원개발은 이러한 가치창출의 과정이기 때문에 투자의 성격이 강조된다. 지식기반사회가 될수록 인적자원이 개인에게는 자신의 소득은 물론 신분이나 지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 형성의 주체인 개인은

투자 가치가 높은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개인이 교육을 받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취업이나 연구개발과 교육의 연계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지식기반사회가 될수록 취업·연구개발 등 인적자원의 활용 부문이 교육 등 인적자원의 형성 부문을 주도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 교육 등 인적자원의 형성 부문에 있어서도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동시에 인적자원개발이 지향하는 바도 바뀌게 된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기회의 공정성 문제와 결과의 수월성 문제가 강조된다. 즉 교육을 받을 기회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부여하되, 각자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면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핵심은 인적자원개발이 「성장과 통합의 선순환」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에 대한 높은 열기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의 질이 낮다는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인적자원의 질을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연이나 지연, 성차별 등 잘못된 고용관행을 개선해야 한

다. 이것은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능력을 키우기 어려운 계층을 사회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슨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에 보다 개입을 많이 해야 하는가? 오히려 정반대로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치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잘못된 역할을 바로 잡고, 위축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기능 조정 작업이다.

인적자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고급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문직의 양성 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국제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종 국가고시제도는 「先교육, 後선발」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은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나 질적으로는 담보상태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지만, 직장생활에 필요한 전문소양은 물론 기초소양마저 제대로 습득

하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가 될수록 전문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진다. 전문성이 높은 직종일수록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파생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특히 초·중등 교육의 경우 기초소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방법적 지식과 논리적 지식의 습득을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사회가 될수록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내용이 빠르게 바뀌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학제간 관점뿐 아니라 실생활의 통합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단위 학교의 권한을 확대해, 교육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학교장의 리더십을 강화해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이 자리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을 통합하고, 학생들이 가진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일반 국민이 직장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이버 교육, 주말 및 야간 수업제, 파트 타임제 등으로 언제라도 필요한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일반 국민들이 지식·기술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을 학습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교육비용을 투자로 인정하고, 종업원이 가

진 무형의 자산을 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정하면서도 개방적인 고용관행을 확립하고, 능력중심의 고용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며, 인력수급에 대한 동향 및 정보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정하면서도 개방적인 고용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번 자격을 취득하면 그 효력이 평생 지속되는 국가자격제도 등 기득권 보호적인 고용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채용·승진 등이 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개방적인 고용관행이 확립되도록 직종 중심의 외부 노동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의 가치를 보다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학위 제도는 물론, 자격이나 능력인증 제도의 질 관리를 통해 인적자원의 신호기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의 능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또한 먼저 정부의 재정 지원 원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재정 지원을 백화점식으로 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볼 때 지원이 필요 없는 계층이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하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은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을 한 결과 그 효과가 작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저소득·저학력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이 처해 있는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취업으로 결실을 맺도록 진로 및 심리상담 등과 연계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출산율의 저하로 노동력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기술변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용이해지고 있는데 비해서 여성의 인적자원의 활용도가 낮다.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사회관행과 남녀 차별적인 고용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등으로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성차별 관행을 금지하는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에게 맞는 직업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유망 전공분야에 대한 여학생의 교육기회를 늘려 취업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인적자원개발 부문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인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낭비를 초래하는 인적자원 수급의 양적 불일치뿐만 아니라 질적 불일치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뿐 아니라 민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자원개발의 현상이 활력을 갖도록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정보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통계 및 자료를 확충하고 이러한 정보를 학생·학부모뿐 아니라 학교나 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질 높은 정보가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보, 노동시장 정보 등 관련 정보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 콘텐츠(contents)개발 사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자원을 평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부문의 매개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재정 투입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자원개발사업을 목적별·지원대상별로 분류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연결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도입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사회적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투입·산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인적자원의 형성 부문과 노동 등 인적자원의 활용 부문에 관련된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행정체계는 학교나 기업 등 인적자원개발의 현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리구조를 단순화시키고, 단위학교의 권한을 확대해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의

구조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교육위원회 등으로 복잡하고, 반면 지역주민의 압력을 직접 받고 종합행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는 통제의 대상이 되고 기업이나 지역 사회와 단절된 채 활력을 잃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배와 개입은 순기능을 억제했고 역기능을 초래하여 왔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하고, 세제상의 유인책을 마련해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기능은 관리·감독이 아니라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동시에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정부의 부처는 기능별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이 명령·지시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학생, 교원, 기업 등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당사자들간의 계약관계를 강화하고,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을 지식·기술의 변화에

발맞추어 보다 탄력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의 여건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 특수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는 학교나 기업 등 인적자원개발의 현장이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산업체, 연구소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세구조 개편 등으로 재정기반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담당자의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가 될수록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은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한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가 확대되고, 창의성이 인적자원개발 전반에 유입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배와 개입은 이러한 순기능을 억제했고 역기능을 초래하여 왔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하고, 세제상의 유인책을 마련해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부문내 인적자원개발 주체들간의 경쟁원칙과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

국제기구의 인적자원개발 방향과 권고

글 / 한승희 (서울대학교 교수, learn@snu.ac.kr)

국제기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free lunch)”

국제기구의 본질과 역할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국제기구가 제공한 소위 원조의 실체를 분석해보면, 실제로 원조금의 대부분이 원조를 행한 국가 혹은 기구로 되돌아오는 환류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경제 위기 속에서 IMF 금융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날 국제기구들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은 그들이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지구경제(global economy)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본질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지구경제를 이끄는 축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이다. 이들은 분명히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윤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자본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한편에서 일종의 세계금융관리 조직으로서의 국제관료 체제이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기능하면서 주요한 경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절기구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초스토포스키는 “IMF와 세계은행, WTO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개

도국의 경제정책을 감독하는 새로운 삼두권력 체제가 등장한 것이다”라고 표현하였다.

지구화 시대의 세계 자유무역이라는 가치 아래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하면서 지구 전체를 상대로 하여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을 진화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OECD, APEC, NAFTA 등의 국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들이 만들어 내는 정치·경제 블록은 직접적으로 국제금융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 외곽에서 동일한 목적달성을 위해 활약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들 1차적 국제금융관리기구들 및 2차적 경제블록들이 깔아놓은 명석 위에서 다국적 민간기업들은 지구화 시대의 이윤창출을 위한 게임의 법칙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 법칙 아래에서 각국의 경제가 서로 맞물려 있고 세계 도처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과 금융시장은 컴퓨터 연결망을 통해 하나가 되어 있다. 소비 대중의 입맛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시애틀의 WTO 반대 시위를 포함한 각종 지구화 반대 투쟁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끊임 없는 적대적 혹은 비적대적 합병과 연

대를 통하여 그들만의 독점적 이익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요컨대 그 안에서 기업들은 제임스 무어가 언명한 바와 같이 일종의 특이한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라는 밀림시대를 구축함으로써 그로부터 배제되거나 혹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생존할 경쟁력을 갖지 못한 기업과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환경을 절묘하게 구사해낸다.

지구경제 논리는 과거의 산업경제로부터 지식경제를 분리하여 보다 많은 자본창출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지구적 정치·경제생태계의 핵심은 지식이다. 특히 미국과 서유럽이 마치 구 공산권의 붕괴를 통하여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는 계기를 획득한 것처럼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최근 제3세계 전반을 휩쓴 대불황은 일부 리더 국가 그룹으로 하여금 그들만의 천하통일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불황이 심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소수의 국제 은행과 지구적 독점기업에 의해 좌우되었고, 이들을 통제하는 국가들이 다름 아닌 미국과 유럽의 소수 국가들이었던 것이다. G8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정책은 실제로 중소기업의 계획적인 도산뿐만 아니라 기업간 인수합병을 조장하였고, 세계 경제를 노

세계적 흐름 가운데에서 유독 우리 나라만이 인적자원개발의 또 다른 얼굴인 평생학습체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적자원개발·관리가 그것을 시행하는 공급자적 입장을 대표하는 개념이라면, 또 다른 한편에서 평생학습은 그 대상으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경력을 개발해 가는 학습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동집약형 산업구조와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양분함에 있어서 후자가 전자에 대하여 비교 우위를 유지하도록 조장하였다. 이른바 “지식산업에 대한 선점”이 그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대 기업들의 힘을 강화시켜주었던 것이 바로 지식관리 시스템이었다. 실리콘밸리의 신화, 헐리우드와 월가의 세계 쟁패도 결국 지식의 선점을 통한 독점적 지식기업생태계를 구축해 갈 수 있었던 발빠름에 있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인력수급에 관한 것이다. 글로벌 기업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자국의 인력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 도처에 건설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고용하는 인력은 대체로 해당 국가의 인력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다양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글로벌 기업이 전제로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오히려 좀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들이 관여하는 각국의 교육 시스템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종류의 인력을 처음부터 공급해줄 것을 원하며, 이러한 점에서 세계교육의 개혁 동향

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다고 할 때 아무리 중국의 노동임금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반도체 산업에서 기능할 수 있는 직업 기초소양이 부족하다면 그 곳에 현지 공장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 진출하는 반도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교육제도와 운영이 그들 기업에 맞는 지식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되기를 바랄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간의 이동, 예컨대 미국의 자회사에 속한 인력과 인도의 자회사에 속한 인력간의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혹은 말레이시아에서 선발한 인력을 필요에 따라 재훈련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싱가포르로 이동할 필요성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았을 때 오늘날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한정된 지역과 국가, 문화 안에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경계를 뛰어 넘은 지구적 차원에서의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대다수 집단의 시각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집단이 아마도 글로벌 경제체제 구축의 선두에서 있는 국제기구들이라고 보는 것이다.

국제기구들의 권고 : 학습경쟁의 인적자원개발

최근 주요 국제기구들, 예컨대 세계은행, OECD, UNESCO 등은 거의 예외 없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기구 중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많은 권고를 주고 있는 기구들이 결국 위에서 설명한 지구경제구축 및 지식기반산업의 선점 논리 안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이며, 그들의 인적자원정책이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OECD가 1996년 교육부장관 회의의 결과로 내놓아 세인의 시선을 끈 보고서,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All)>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과거 산업경제체제에 맞게 조율되어 있는 공교육체제를 지식기반경제에 맞게 개혁하는 것에서 찾고 있다. 이 문건 안에 제시된 권고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에서 시작하는 강력한 평생학습체제를 국가가 나서서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계층(social weak)이 교육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학교 학습과 노동의 연결고리를 보다 확고히 다질 것을 요구한다. 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학교-직장 연계, 직장 내에서 다양한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직장 내 학습-일 연계, 그리고 유급학습휴가를 통하여 취업 중이라도 학교로 되돌아와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장-학교 연계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셋째, 기업-연구소-정부-대학의 연계성이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될 것을 강조한다. 일종의 산학연관(産學研官)의 파트너십(partnership)이 지식-학습 클러스터 안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 개혁과 관련하여 대학이 산업의 요구를 보다 융통성 있게 반영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개별 학습/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교육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조한다. 요컨대 한 국가내의 학습총량을 극대화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준비된 인력풀이 상존하기를 희망한다.

언뜻 보아서는 사실 그리 새로운 것이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권고들은 과거에도 이미 상식처럼 존재하였던 것들이었다. 필자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세세한 권고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배경에 '묵묵히' 제시되고 있는 '학습경제(learning economy)'라는 이데올로기라고 본다.

OECD는 애초에 순환교육(re-

current educ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학교교육을 통한 노동현장으로 배출된 인력의 지속적인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촉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OECD는 순환교육을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으로 전환하는 한편, 과거 학교교육과 계속교육으로 이원화 되어왔던 교육의 두 장면을 평생학습이라는 개념 안에서 통합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평생학습의 배경에는 이른바 학습경제라는 개념이 포진해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바라볼 때 평생학습은 바로 그 자체가 인적자원개발, 관리, 회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학습경제는 지식경제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경제라고 할 때의 지식이 자본 혹은 재화의 새로운 표현물이라면(예컨대 산업경제에서의 상품에 비유할 만한 것), 학습이란 지식을 생산하는 노동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소위 굴뚝 경제에서의 상품 생산의 핵심이 육체 노동이었다면 지식경제에서의 핵심은 바로 학습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 학습이란 사적인(private) 활동이며 그 안에 본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라고 할 만한 것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학습이란 인간의 지적 호홉이며 생명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 중의 하나이다. 학습의 경제적 가치는 학습의 결과가 교환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도출된 것이지 학습의 사용가치 안에 내재적으로 불박혀 있는 것은 아니다. 학습이 인간자본(human capital), 지적자본

(intellectual capital) 혹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등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은 학습하는 개인이 모종의 사회·경제적 관계 속에 편입이 되면서부터이다. 물질 자본과 노동에 덧붙여 지식이 가치창출의 주요 자원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학습은 그러한 지식을 노동력 속에 축적하고 생산을 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제로 변화되었다.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 학습의 결과는 양화된 화폐적 형태, 즉 학위, 졸업장, 이수증, 성적표 등으로 표현되며, 개인은 이러한 학습 화폐들을 관리하고 축적하게 된다.

기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 학습의 결과로 표현된 학습 화폐들이 기업의 생산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인간자본론에 의하면 학습의 생산성을 표현하는 지표가 바로 임금의 높고 낮음이라는 것이다. 사적 행위로서의 학습이 양화되어 화폐적 형태로 표현되고 그것이 소득과의 상관관계로 표현되는 순간 이미 학습은 더 이상 사적 행위가 아니다. 일종의 경제적 교환관계 안으로 편입된 계약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 학습의 내용도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competency) 혹은 수행성(performance)이 요청하는 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표준화 되어가게 된다. 기업은 이러한 계약적 행위로서의 학습을 개발하고 관리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이 바로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및 인적자원

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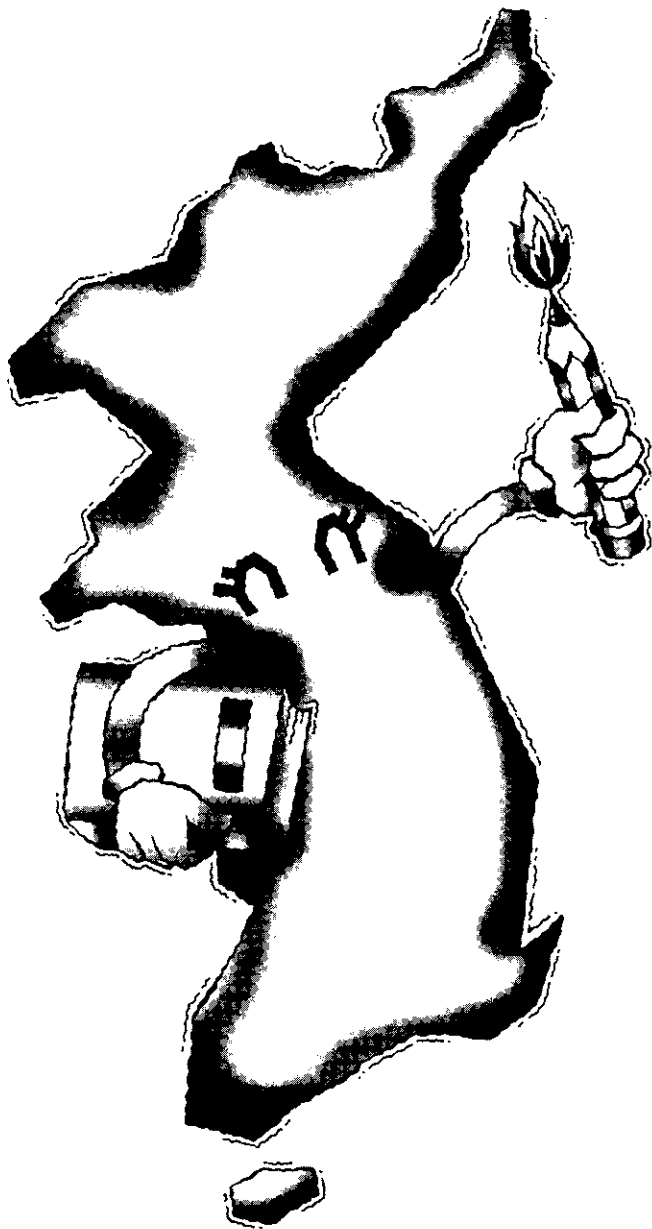
최근의 동향은 개인과 기업의 차원을 넘어 학습 혹은 그 표현과정으로서의 인적자원을 국가 단위에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미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국가인적자

원개발(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 NHRD)이라고 부른다. 국가단위에서 학습을 개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개인 차원 및 기업 차원과는 또 다른 측면을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기업이 자본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전통적 자본주의 비판론에 비추어 볼 때, 혹은 그 수정주의적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반면 기업은 사적 영역을, 그리고 국가는 공적 이익을 대변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결국 국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의 학습경제학적 시각은 서로 중층적임과 동시에 상충될 수도 있다. 결국, 모든 학습의 과정을 경제적 효율성 혹은 비용효과라는 측면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으며, 전통

적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성인교육도 일종의 공공부문(public sector)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 부문으로서의 교육은 그 지식과 능력이라고 하는 학습결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윤 극대화보다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보다 큰 비중을 두게 된다. 국가단위의 인적자원개발의 임무가 강조되기 시작한 또 다른 이유는 인적자원과 관련된 일들이 부담하게 될 시장실패(market failure) 가능성 때문이다. 과거 인적자원관리, 특히 국가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관리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 하였으며 부문간 다양성과 예측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인력수요와 질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인적자원의 개발, 관리, 회계를 단순히 시장에 맡겨둘 수도 없으며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력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를 전제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리·회계 전략(Human Resource Development, Management and Accounting)은 과거 국가단위의 인력개발(manpower development)과 상당한 차별성을 가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의 지구화(globalization) 경향은 이러한 국가단위의 교육체제를 글로벌화하는 한편, 학습 결과에 대한 관리를 국제표준의 인적자원관리로까지 일반화 및 확장하려고 시도한다. 초기 일국 경제에 기초한 인력양성 개념은 인간자본



론(human capital theory)이라는 고전적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다. 지금이야 누구나 인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1960년대 미국 경제학회장이었던 슐츠가 인간의 자본적 가치에 대하여 논의하였을 때만 해도 그의 생각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당시의 인간자본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에 터하고 있었다.

첫째, 사람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생산력을 더욱 향상시키게 된다. 둘째, 향상된 경제적 생산력은 그의 임금 상승으로 나타난다. 셋째, 개별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그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생산력이 향상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라는 차원에서 과거의 인간자본론을 이해할 경우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최근 국제기구들이 권고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론은 과거의 인간자본론을 글로벌 경제에 맞추어 개편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경제가 요청하는 인적자원개발 전략

첫째, 글로벌 경제가 요청하는 인적자원개발은 과거의 인간자본론이 간과했던 한 가지 큰 한계, 즉 학교교육과 직무 생산성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양자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접근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점차 학교교육과 직업 생산성과

의 연관성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의심되면서 직업세계의 요구에 맞추어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커리큘럼 및 평가인증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고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직업생산성의 문제는 한 국가 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제 전 세계적인 표준에 맞추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OECD, UNESCO 등이 주기적으로 제기하는 학교교육의 혁신 프로그램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커리큘럼을 지식기반산업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개혁작업으로 풀이될 수 있다.

미래학교 프로젝트 혹은 학습내용, 학습계획, 그리고 학습방법에 있어서의 근본적 변화 등은 지식경제가 요구하는 '지식을 생산해 내는 근로자'의 사고모형과 병행할 수 있는 지식생산 학습자 상을 학교교육을 통하여 실현해 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 직업 생산성의 연계를 시도한 최근의 사례로서 최근 영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NVQ)과 일반 중등교육 자격(GCSE) 간의 연계작업을 들 수 있다.

둘째, 국제간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하는 지구경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교육'의 결과를 국제 표준(흔히 쓰는 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통용될 수 있는 자격으로 환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유럽국가간의 자유로운 자본, 금융, 인력 교류를 전제로 했을 경우, 예컨대 영국에서 취득한 중등교육 졸업장이 스웨덴에서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통용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독일에서 취득한 간호사 자격이 핀란드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OECD의 INES(indicators of national education system)은 개별 국가단위의 교육시스템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들간의 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서로 유통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시도였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불고 있는 공학교육인증제 역시 공학 전문가 교육의 모듈을 표준화함으로써 그 질의 평가결과가 세계 어디에서고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표준화된 교육계량단위들을 적용한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 인력을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잣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에도 이러한 표준화된 계량단위들은 그 국가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이 해당 기업의 노동력을 질적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셋째, 교육훈련의 결과를 지구적 표준계량단위로 표현하려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지금까지 숨겨져 온 암묵적 지식 및 현장 경험 잠재적·암묵적 지식과 인적 자원의 명시적 자산화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인간자본론이 주목한 교육의 총량은 공식적인 학교교육을 이수한 년수의 총합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현장에서 습득한 비공식적 암묵적 지식의 총량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계정되기 어려웠다. 노나카의 SECI 모델로 유명해진 지식의 공동

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라고 하는 지식생산과정은 바로 이 점과 관련하여 지식기업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현장의 암묵적 지식을 표출화해 내려는 지식생산과 관리 방식은 현장에서 획득된 지식을 공식적인 학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요청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획득된 직무경험을 일정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공식적인 학점으로 환산해 주는 인정경험 학습인증 제도가 바로 이 목적에 부합하여 개발되고 있는 장치 중의 하나이다. 기업 내 총 지식자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암묵적 지식의 표출화 및 인증 과정은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한 지식관리방법 중의 하나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공식적 교육 지표에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지식 자산을 발굴하게 해줌으로써 헛되이 투자될 수도 있었던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 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에서 볼 때 끊임없이 기업 내부에서 지식이 산출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식관리기제가기 때문이다.

넷째,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였다. 인적자원 회계(human resource accounting: HRA)라는 개념은 1960년대 인적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들에 의해 회계 문헌들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인적자원회계란 기업에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업원들의 가치/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고, 측정하며,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를

회계처리 원칙들의 연장선에서 투자 또는 비용지출과 수익을 상응시키고 관련 정보를 재무적 용어로서 조직, 보고, 전달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새로운 회계제도는 특히 지식집약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업의 외형적 총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에 분명하며, 글로벌 인적



OECD의 INES(indicators of national education system)은 개별 국가단위의 교육시스템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들간의 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서로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였다.

자원개발과 관리라는 과정이 완성되는 종착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돌아보며

결론적으로 말해서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이란 지구적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개발, 관리, 회계를 표준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 물적 상품과 서비스, 금융의 분야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의 적용을 이끌어왔던 국제기구들은 이제 인적자원과 교

육 부문에 있어서도 그 시장을 통일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계임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논리가 되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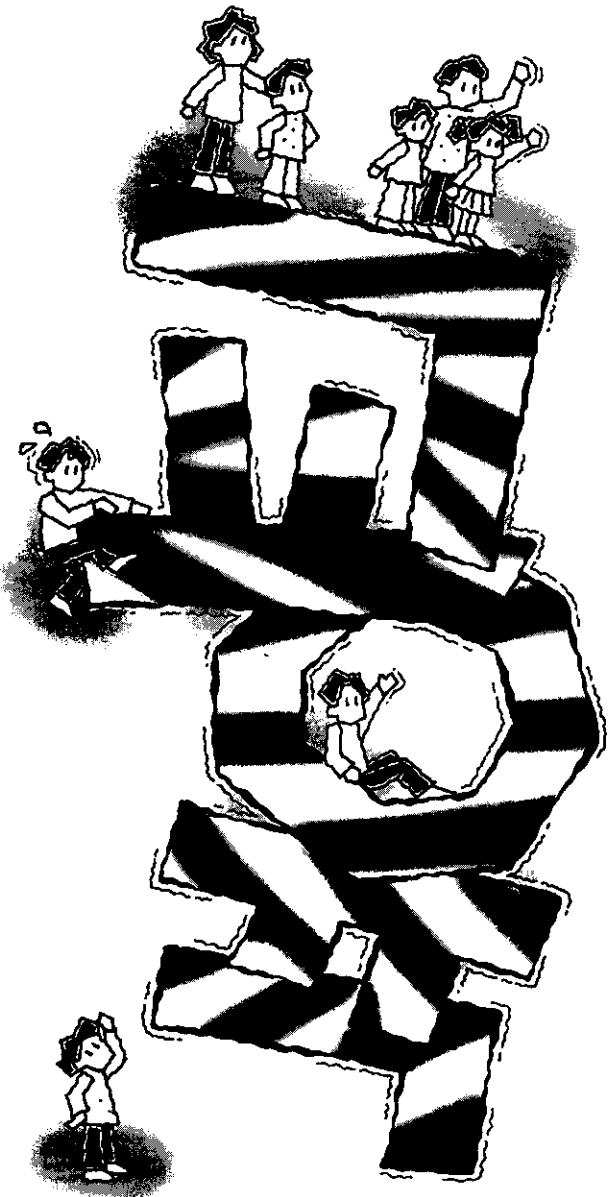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 가운데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이 인적자원개발의 또 다른 얼굴인 평생학습체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적자원개발·관리가 그것을 시행하는 공급자적 입장을 대표하는 개념이라면, 또 다른 한편에서 평생학습은 그 대상으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경력을 개발해 가는 학습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점을 국제기구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내놓는 인적자원개발의 대부분이 이미 평생학습의 논리로 번역되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관계에 관한 한 비문해(illiteracy)의 수준에 가깝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논의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국가평생학습체제에 대한 논의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말하자면 아직까지 인적자원개발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뿐, 그 수혜자이자 지식 담지자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국제기구가 주는 권고안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간파하고 있는 이 부분, 즉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의 이중적 특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본다. **교육**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교교육의 기능

글 /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장, yhs@ns.kedi.re.kr)

학교교육은 개인의 생애능력 개발을 위한 준비과정이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이 단절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 질 때 그 효용성은 떨어지게 된다.
 평생학습 사회에서는 제한된 시점에서의 교육으로는 일생을 살아가기 어렵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지속적인 현직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들어가서 말

“인적자원개발”은 근래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믿을 것은 인적자원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가가 나서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농경사회 이후 약 300여 년 동안 인류의 문명을 지배해 온 산업사회가 물리력 주도의 사회였다면, 21세기를 특징 지우는 지식기반사회는 지력 주도형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여러 미래 학자들은 산업사회는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대신 지식, 정보통신, 기술 등의 무형 자원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지력 주도형의 사회가 산업사회를 대체하고 있음을 예견한

바 있다(Drucker, 1995 : Toffler, 1994). 물리력 주도의 산업사회에서는 유형의 부존자원 즉, 토지, 자본, 노동 등의 요소를 기초로 한 대량 생산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이 생산, 교환, 분배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 부문을 지배하는 기반이 되고 나아가서는 지식 그 자체가 집중 투입되는 중간재이자 재화와 서



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에 압도적으로 기여하는 생산요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지구촌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 기술 등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OECD는 국가의 경쟁력은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소화 흡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전제하에 회원국들에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 권고하고, 특히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과, 고등교육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며, 평생교육의 확충에 주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OECD, 1996 : 2000). 같은 맥락에서 EU의 경우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생존 전략의 하나가 인적자원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EU, 2000).

우리 나라의 경우도 교육부를 교육 인적자원부로 그 이름을 바꾸고,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직으로 격상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은 그 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한국교육은 그 체질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기회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적자원의 경쟁력은 세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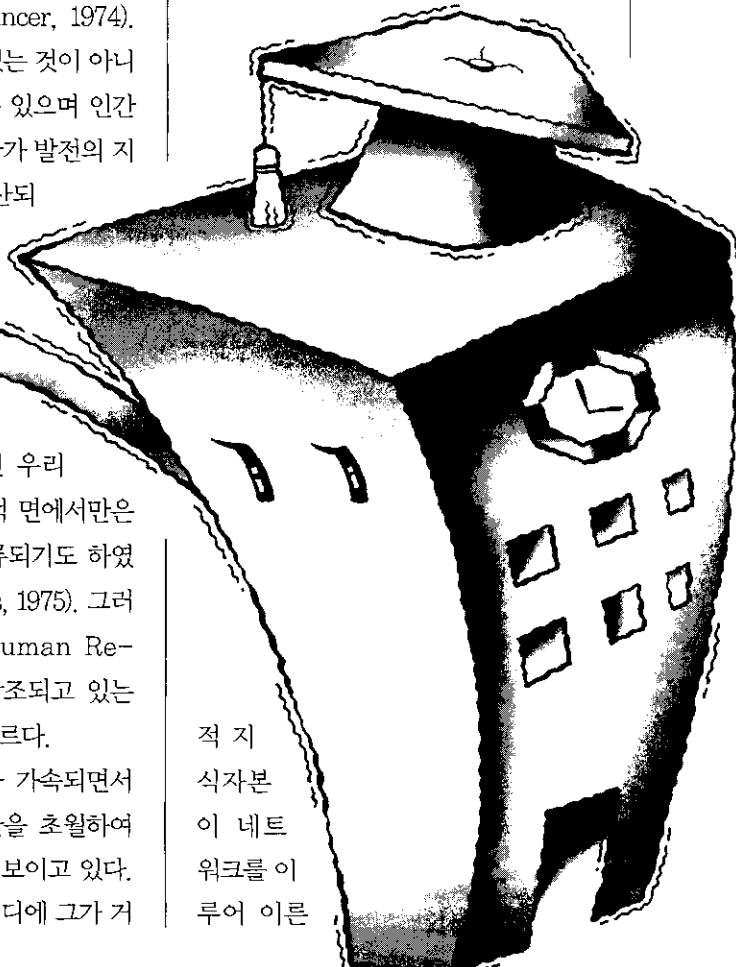
나타났다. 초·중등 교육의 취학률과 대학교육 이수율은 각각 세계 1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시스템 전체의 효율성과 대학교육 체제의 효율성은 각각 44위와 47위로 나타났다(IMD, 2001). 배출된 인적자원의 규모는 선진국 수준이나 그 질적 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적자원의 규모는 풍부하나 인제는 부족한 것이 우리 나라 인적자원개발의 현주소다.

II. 인적자원개발 시각에서 본 교육의 새움미

인간 자본(Human Capital)의 중요성은 이른바 신 고전 경제학자들에 의해 이미 1960~70년대부터 강조된 바 있다(Schultz, 1961, Mincer, 1974). 자본에는 물질 자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자본이 될 수 있으며 인간 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60년대에는 개

주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보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국경과 기관을 초월하여 자신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고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적자원의 흐름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들은 고용 기능성의 증진을 위한 노동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에 걸쳐 역량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한편 1960~70년대와는 다르게 사회 통합이 중요한 국가의 기능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야기된 소득의 불균형과 삶의 질 격차 해소는 모든 국가에서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



R D 과 큰 차이가 있다.

2001년 스위스의 국제경영 대학원(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경쟁력은 비교대상 49개국 중 28위로 나타났고, 그 중 교육/인적자원 개발의 경쟁력은 32위로

발도상국으로 분류되던 우리나라가 인간 자본의 축적 면에서만은 선진국의 범주에 분류되기도 하였다(Harbrison and Myers, 1975). 그러나 오늘날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은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

세계화 정보화 추세가 가속되면서 인적자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높은 유동성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개인의 소득은 어디에 그가 거

적 지
식자본
이 네트
워크를 이
루어 이른

인간이 성장하면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기초 능력은 가정에서도 일부 담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배양시켜 주어야 할 능력들이다. 그런데 학교가 담당하는 기초 능력 배양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기초 능력의 개념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합한 개념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용어가 강조되면서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인적자원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 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의 의미를 “사회적 자본과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적 능력개발을 통해 전 국민의 개인적 성장과 총체적 역량 개발을 도모하며, 관리 지원체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개발된 인적자원의 사회적 효용성과 공익성을 극대화하려는 국가적 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규정은 국가가 교육을 통해 담당해야 할 역할 규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의 관계를 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우선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을 분리하여 보는 입장으로 교육은 인적자원개발의 한 영역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입장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교육 뿐 아니라, 양성된 인력을 활용하는 각종 훈련 및 자격제도의 정비 그리

고 교육과 훈련 및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은 교육보다 훨씬 광범위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인적자원개발은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교육은 이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의 장을 통해 생애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평생교육의 이념이다. 또한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볼 때, 교육과 일의 세계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자격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평생학습의 주요과제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에서 강조하는 과업들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또 다른 시각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것은 교육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통적으로 교육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도 교육의 한 기능으로 강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적자원개발의 시각에서 교육을 강조할 경우 교육은 개인의 노동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그 초점이 두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핵심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관계를 어

떻게 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교육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은 영역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인적자원개발은 교육을 보는 하나의 프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시각에서 교육을 본다면 그것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개인의 생애능력 개발을 위해 기능해야 함을 일차적인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이라는 용어는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능력을 체득해 나가는 “학습”의 의미로 전환되어야 하고, 그것은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생애학습”(life-long learning)으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OECD는 인적자원 형성을 위한 학습의 장을 정규학교, 일의 세계, 다양한 관심 집단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가정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III.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교교육의 기능

학교는 인적자원 형성을 위한 중요한 학습의 장 중의 하나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의 기능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정체성의 위기, 학습 내용과 교육 프로그램의 편협에 따른 획일성

및 타성의 위기, 그리고 삶의 실재와 유리된 효용성의 위기 등이 그것이다. 혹자는 미래사회에서 학교교육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 하는 회의론 보이기도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학교는 더 이상 인재양성을 위한 독점적 기관이 되고 있지 못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학교, 직장,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 모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학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과 구별되는 인적자원개발의 기능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의 일차적인 기능은 국민의 기초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목적에 대한 회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어떠한 시대적 변화가 수반되든지 간에 인간은 발달 단계에 따라 필수적으로 배양되어야 할 능력이 있다.

예컨대, 유아기에는 언어·신체 발달·정서 안정 등이, 소년기와 청소년기는 사고력, 사물에 대한 이해, 자기 정체성 확립 등 기초적인 삶의 능력이 요구된다. 한편 성인이 되어서는 직업 수행과 관련된 기술은 물론 시민으로서의 자질 등이 요구된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기초 능력은 가정에서도 일부 담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배양시켜 주어야 할 능력들이다.

그런데 학교가 담당하는 기초 능력 배양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기초 능력의 개념이 점차 변화되

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 시각에서 본 읽기, 쓰기, 셈하기 이외에도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초 능력들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 해결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 능력 등이 새롭게 기초능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능력(Key Skill)의 규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규명된 핵심 능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문제는 더욱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이다. 학교교육을 통해 국민 기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길러주어야 할 기초 능력에 대한 지속적 규명과 이의 교육과정 반영은 새로운 사회에서 학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교육은 개인의 생애 능력 개발을 위한 준비과정이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이 단절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용성은 떨어지게 된다. 평생학습 사회에서는 제한된 시점에서의 교육으로는 일생을 살아가기 어렵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지속적인 현직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은 삶의 실재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제도 및 운영의 실재가 평생교육이 가능한 형태로 재편되어야 한다. 일정한 연령층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학교는 결국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목적의 학습자를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 예컨대 대학교육은 더 이상 18세~21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이미지가 아니라, 성인 학습자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학

교교육의 내용도 일의 세계 및 삶의 실재를 반영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학교가 생애 능력개발을 위한 준비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질적 기준을 생애단계별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국가 학습 목표(National Learning Target)를 재 설정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어떠한 기술과 핵심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배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교육계 뿐 아니라, 노동계, 산업계 등이 서로 밀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육성도 학교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 인적자원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 사회 통합, 개인적 성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Yu et al, 2001). 이러한 목표 중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는 사회적 자본의 육성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은 인간 자본(Human Capital)과 도덕성,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양자를 모두 개발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낱알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자본이다.

이른바 사회구조와 개인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신뢰성, 도덕성, 의사소통의 통로, 사회 규범, 인성 등의 무형적·추상적 자본 등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들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그 동안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의 미흡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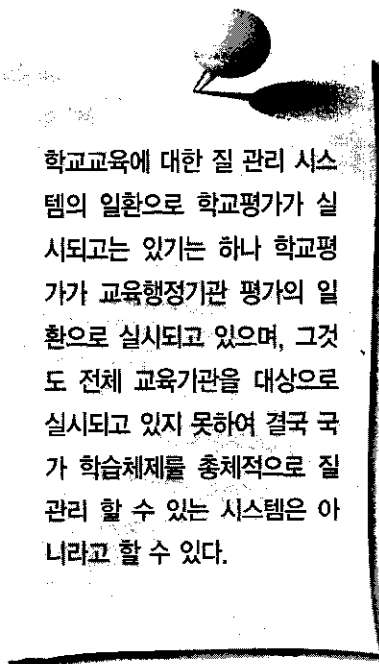
간과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축적 여부는 고비용 사회와 저비용 사회를 구분 짓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고신뢰 사회는 저비용 국가로 저신뢰 사회는 고비용 국가로 유도될 확률이 높다는 점들이 밝혀지고 있다. 신뢰를 주 요소로 하는 사회적 자본은 한국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자본이라고 본다. 일례로 IMF 위기의 내적 요인 중의 하나가 공공 부문과 민간 공히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었다는 지적이 있다(Yu, 2001).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 인적자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 기초 소양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건전한 시민의식과 공중도덕,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정신의 부족, 조직 내 융화와 협동정신의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다(박세일, 2001:3).

앞으로 학교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기능을 보다 강조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본질적 목표인 좋은 시민의 양성, 도덕성의 함양, 사회적 신뢰의 회복 등과 같은 내용이 강조될 때 사회적 자본의 육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본의 육성을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에서는 담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학교를 중핵으로 하여 가정, 지역사회 등이 서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육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교육이 고효율화를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인적자원이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이면에는 우리 학교교육의 비효율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춘 분야별 고급 전문인력 양성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자의 비중은



학교교육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학교평가가 실시되고는 있기는 하나 학교평가가 교육행정기관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것도 전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여 결국 국가 학습체제를 총체적으로 질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이나 대학졸업자의 능력은 신뢰할만한 수준이 못된다. 더욱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인재의 양성 기능은 더욱 미흡하다. 고교 교육단계에서부터 전문적 인력양성을 위한 준비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 단계에서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IV. 4기는 글

이상에서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학교교육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나 학교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행정적이고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적 차원의 학습체제에 대한 질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인적자원 개발정책이 양적 규모 확대보다는 질적 관리에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현재 학교교육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학교평가가 실시되고는 있기는 하나 학교평가가 교육행정기관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것도 전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여 결국 국가 학습체제를 총체적으로 질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학교평가가 국가적 차원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학습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질 관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위한 질 관리와 아울러 평생 학습 체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사회의 인적자원은 생애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인적자원의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의 양자에 있어 적절한 규제 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일례로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평준화 정책 하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교를 배정 받고 있다. 학교 선택권 부재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교육으로 연결되어 결국은 교육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선택권도 미흡하다. 주어진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이수하는 방식의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정원 정책, 입시정책에 있어서의 완전 자율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인적자원의 수요와 관련된 정책 즉, 노동시장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인적자원의 질적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각종 자격제도를 직접 관리(manage)하기보다는 자격 기준 설정 및 인증(accreditation)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자격제도의 범람으로 학력 인플레이와 유사하게 자격제도의 인플레이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자격제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설정하고 그것을 공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한국교육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낭비요인이 많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데, 이는 높은 대학 취학률과 군 복무라는 이유 외에도 낭비적 유희 인력층이 많다는데 기인한다.

예컨대 25만에 이르는 대학입시 재수생, 10여만 명에 달하는 각종 국가고시 준비생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인적자원의 큰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지식투입 지수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등록

건수, 논문발표 건수, 지식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등 지식 성과 지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 1999 : 38~39). 교육의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애에 걸친 인재 선발체제를 구축하고, 일회성 시험에 의한 인재 선발제도인 고시 제도의 재검토, 학벌 위주의 대학진학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직장, 가정,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이제 더 이상 지식생산 및 인재양성을 위한 독점기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생애를 통하여 자기 개발을 해 나가야 할 평생학습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학습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습해 나가는 것이 이른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1). 「지식기반사회, 인적자원이 핵심입니다」.
- 박세일(2001). 21세기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기본방향. 「미래전략연구원 3월 월례 세미나 녹취자료」.
-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1999). 「새 천년의 패러다임 : 지식기반 경제 발전전략」.
- 한국교육개발원(2000).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 _____ (2001).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의 재구조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 2001년 연구계획서」.
- Drucker, Peter F.(1995). Post-Capital Society.
- EU(2000). A memorandum on Lifelong Learning.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 Harbison, Frederick and Myers, Charles A.(1964). Education, Manpower, and Economic Growth,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 Hyunsook Yu et. al(2001).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Korea - Vision, Strategies and Tasks, KEDI, RN 2001-1.
- IMD(2001).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Mincer, J.(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ew York.
- OECD(2000a). Human and Social Capital and Sustained Growth and Development, Paris : OECD.
- _____ (2000b). Lifelong Learning as an Affordable Investment, Report prepared by the OECD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Ottawa 6~8 December 2000.
- Schultz, T.(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1, pp.1-17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글 /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donmin@ns.vedi.re.kr)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

지난 4월 3일부터 3일간 파리에서 열린 OECD 교육 장관 각료회의에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 모든 국민의 인적자원개발이 결정적인 요인임을 확인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든 국민의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에 걸친 인적자원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가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보장하는 시금석인 셈이다. 이미 1996년 OECD 교육 장관 각료회의에서 지식기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 (lifelong learning for all)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각국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이란 직업현장에 뛰어들 후 개인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과 고용, 수입, 사회 참여에 영향을 주고, 추수 학습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교육부터 접근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년간 각국에서 추진한 평생학습의 추진 경과와 방향을 점검하는 시험장이었다.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구성 요소인 지식과 기술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기관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적 자본을 개발하는 핵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동시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인 사회적 네트워크, 규범과 가치가 존중될 때 가능하다.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아울러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의식과 사회적 여건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육훈련체제는 사회 평등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문제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불평등한 접근 기회와 정보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하여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사회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는 데 있다. 평생학습 기회는 또 다른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어디에 있던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러한 현상에 기인한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평생학습은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human potential) 개발로 모든 사람에게 최대 최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지식과 정보의 특성은 새로운 학습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정보와 지식을 부단히 습득해야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했다고 할 수 있다.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높은 부가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 그러면서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의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지속적으로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끊임없는 자신의 지식을 업그레이드 하여 지식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력은 지식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생존은 지식과 정보를 부단히 흡입할 수 있는 평생학습 능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체제를 구비하여, 성인들이 전 생애에 걸쳐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자극·격려·지원하고, 스스로 고용능

력(employability)을 배양하여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식의 생명주기가 가속적으로 줄어드는 21세기에는 평생학습 실현이 국가의 국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특성은 새로운 학습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정보와 지식을 부단히 습득해야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지식과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가름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평생학습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의 평생학습을 보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제도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지식사회에 공급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도록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는냐가 개인의 발전과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기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평생학습

지난 7월 26일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단 하루 동안 5만 명 이상을 감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1990년대 초 경기침체 이후 최악의 날로 기록되었다. 바로 이틀 전인 24일에도 3만 5천 명에 달하는 대량 감원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미국과 유럽 등지의 간판급 기업들이 잇따라 감원과 공장 폐쇄 등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불기 시작한 감원 바람이 잦아들 듯 하더니 지난 6월부터 제2라운드로 돌입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탓에 구조조정이 거의 전 산업부문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 기업에서의 구조조정은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한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 영향은 구조조정에 접하는 개인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고용능력을 지니고 있는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구조조정

한 나라의 산업은 경제 발전 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와 같은 비교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돼 가는 과정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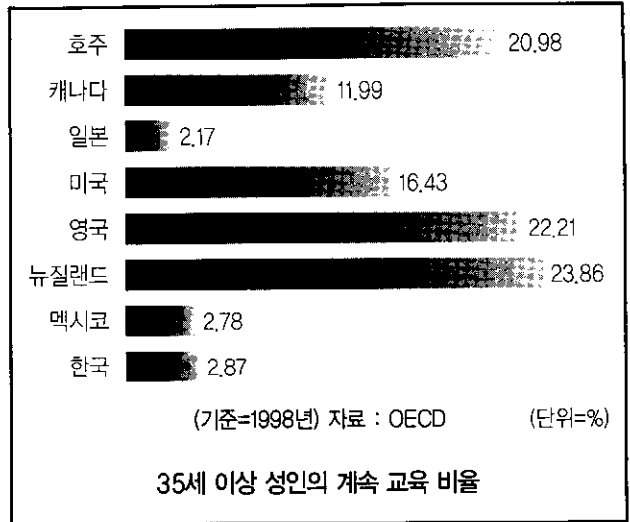
그러나 정책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restructuring)은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 여건에 걸맞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 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의 구조조정 정책을 의미한다.

IMF경제관리를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도 구조 조정, 감원, 실직 등의 용어가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평생고용이 관행화 되어 있는 아시아에서는 가장장적인 경영체제로 이직 자체가 무능의 소치로 인식되어 왔다. 평생고용의 메카인 일본에서도 최근 들어 감원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최근 기업이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 기업의 특성인 철밥통(鐵飯碗, 평생고용)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렸다. 구조조정의 마지막 보루인 감원은 한 국가로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실직을 의미한다. 관건은 본인이 속해 있는 기업 위기에 대비하여 자신의 능력을 부단히 향상하는 노력을 기울였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성인들이 능력개발을 위해 평생학습을 통해 능력개발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정책분석 2001' 보고서에 따르면 35세 인구 중 각종 평생교육기관에 등록한 비율은 2.87% 미만으로, 회원국 중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이 비율

은 뉴질랜드가 23.9%로 가장 높았고, 호주가 21.0%, 영국 22.2%, 스웨덴 19.0%, 미국 16.4%로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에서 성인 계속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젊은 세대에 비해 교육기회가 적었던 중·장년층이 한국정부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30~54세 연령층의 중등교육 이수 비율은 25~29세 이수 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에 불과했다. OECD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인교육에 역점을 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각국이 평생학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왔지만 급변하는 지식사회의 흐름을 뒤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지금보다 평생학습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한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체제 개편을 통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행과 효율성이 보다 중요하다.

- 도널드 존스톤 OECD 사무총장 -

이러한 현상은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평생동안 살아가는 데 충분하므로, 성인이 되어서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설사 배우고 싶어도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학습은 태어나면서부터

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생애 주기와 병행하여 학습의 주기가 되어야 한다는 평생학습사회론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구호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셈이다. 평생학습사회는 개인의 능력 개발이 직업세계에 진입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세계 변화의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편으로, 평생학습을 실현하면 자연히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알맞은 평생학습체제를 구비하는 것은 국가와 개인 발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과제이다.

인적자원개발로서의 평생학습체제

이념적으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학습'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용적·정책적으로는 조작적 정의에 따라 일정 영역이나 시기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의무교육을 받은 이후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OECD에서는 평생학습은 일하는 연령 기간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OECD에서 각국의 성인교육 정책을 검토하면서 제시한 성인은 25세 이상이거나 기초교육(initial education)을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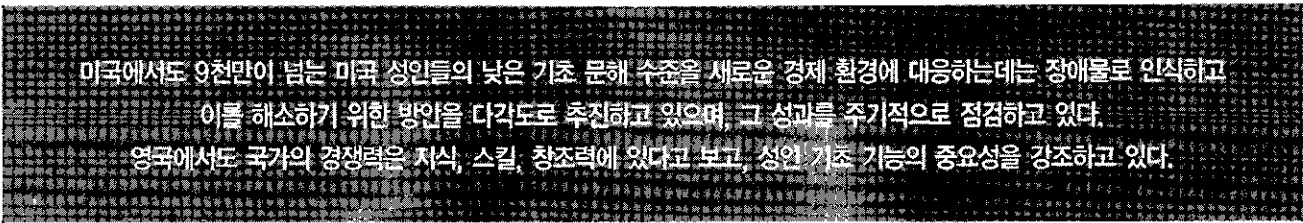
이나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을 포괄하므로, 평생학습 체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내용과 연계 체제 설정을 위한 방향 설정이 가능하다.

평생학습의 기반으로서의 국민 기초교육

국민 기초교육과정은 본격적인 인적자원개발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기초교육과정은 취업, 임금, 사회 계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학습기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이들 기초능력이 부단히 진보되므로 성인들에게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도 9천만이 넘는 미국 성인들의 낮은 기초 문해 수준을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데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국가의 경쟁력은 지식, 스킬, 창조력에 있다고 보고, 성인 기초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고민은 성인 6명 중 1명이 낮은 기초 기능 수준이라는 것에 있다.

따라서 국민 기초교육과정을 통하여 기초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핵심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특히 이들은 학교와 사회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사회적 결속력을



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OECD의 성인교육 정책 국가보고서에서는 성인학습정책에서 성인을 19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학교교육과 대비하여 정책적 정의로 평생학습을 규정하면 국민 모두가 학습하는 의무교육 단계 이후, 또는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학습하는 학교단계 이후의 학습으로 양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평생학습을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국민기초교육을 마친 고등학교 2학년부턴 해당된다. 이러한 구분은 고2부터의 교육과정은 대학이나 기초 직업교육

외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평생학습 촉진제로서의 경험학습

성인들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학습한다. 직장에서 일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학습한다. 때로는 비정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를 수강하기도 하고, 방송통신매체나 인터넷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본인의 능력을 개

기업, 국가가 성인들이 학습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학습비 부담률이 높으면 결과적으로 평생학습이 위축되게 된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성인들은 평생학습을 위해 부담할 수 있는 월평균 학습비로 10만 원 미만에 응답한 비율이 78.8%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평생학습을 위해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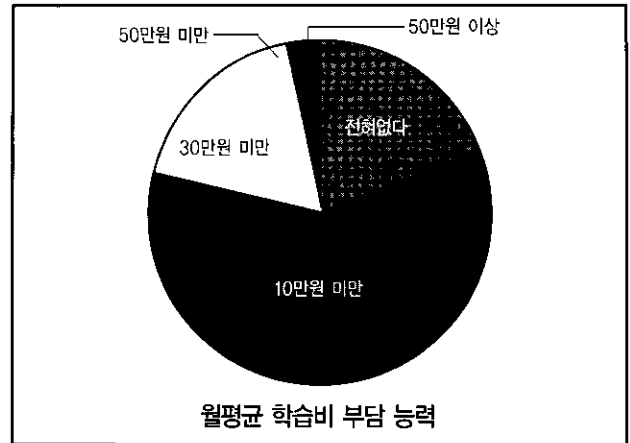
발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신의 노력에 의해 학습된 결과가 또 다른 학습으로 이어질 때 평생학습체제를 구비했다고 할 수 있다. 비형식적 학습 또는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 새로운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OECD에서도 비형식적 학습으로 획득된 능력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험학습은 일과 교육을 연결하여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의미 있는 학습내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사전 학습평가(prior learning assessment) 또는 포트폴리오 평가에 의하여 경험학습을 평가하고 학점이나 학력을 인정하여 또 다른 학습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부 과정에 국한하여 실시되고 있는 학점은행제는 교육 단계를 확대하여 교육계좌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성인들이 학습하고자 할 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업, 국가가 성인들이 학습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학습비 부담률이 높으면 결과적으로 평생학습이 위축되게 된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성인들은 평생학습을 위해 부담할 수 있는 월평균 학습비로 10만 원 미만에 응답한 비율이 78.8%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평생학습을 위해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 다른 보고서는 우리 나라 정부가 성인교육이나 직업교육 등에 배정한 평생교육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8%에 그치고 있고,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 예산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예산 중 평생교육 예산은 0.7%에 불과



하며, 여성부는 14.1%, 과학기술부 10.0%, 문화관광부 33.0%, 노동부 44.3% 등을 평생교육 예산에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만을 보면 평생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이 4.3%, 영국이 68.5%, 일본이 7.5% 등인 것과 비교해 크게 작은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도 교육비가 없어 학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학습비 부담은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제안한 개인학습계좌제와 학습휴가제는 학습비 지원이나 세제 혜택과 병행하여 운영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학습계좌제

영국은 작년부터 개인학습계좌(ILAs : Individual Learning Accounts)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 지원방안의 하나로 영국 교육고용성에서 계획·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영국 정부는 2000년에 성인 학습자들의 개별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 계좌당 50파운드씩 100만개의 계좌에 150만 파운드를 지원하였다.

스웨덴은 내년부터 개인학습계좌 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개인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학습계좌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학습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평생직업 교육을 받으면 최대 25%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국민들이 스스로 재교육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을 활용한 평생학습의 기획 확대

정부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 정보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가시적 현상으로 모든 학교에 멀티미디어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어느 교실에서나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일반 성인을 위한 정보화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속성으로 인해 성인들의 컴퓨터 소양능력은 청소년층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기능적 문맹자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연령 비율이 높을수록 기능적 문맹자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OECD는 「한국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보화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간의 업무 조정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국과 같이 전국 700곳에 ‘인터넷 접근 센터’를 세워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영국의 ICT학습센터

정보통신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국 교육고용부는 누구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2억 5천 2백만 파운드(약 47억 원)를 투자하여 700개의 ICT학습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은 전 지구를 동시에 연결하고 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식과 정보가 일순간 확산·보급된다. 그러므로 가정, 학교, 사회는 각각 교육의 장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될 때 각각이 가지는 교육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형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체제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보기술 습득과 활용을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경쟁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능적 문맹을 해소하고자 종업원을 위한 현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평생학습

지식기반사회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고용인구 재편, 세계화 추세, 정보와 통신 기술의 확산, 산업계에서의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 부각 등 변화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를 충족시키는 국가가 지식강국이다. 새로운 정보기술은 기존의 사회 체제와 구조를 흔들어 놓았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지식강국으로 선진복지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 이제 평생학습 체제 구축은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국민 각자가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적 자원에 투자를 위한 평생학습을 장려하는 유인체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과 경제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21세기에는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삶의 질과 소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평생학습은 한 사회의 체제유지를 위한 사회화의 수단이나 교육 외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종속변인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가는 독립변인이다. 세계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감원하여도 우리 나라만큼 파장이 크지 않은 것은 노동자 각자가 이미 평생학습에 의하여 취업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우리 교육으로는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공급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더라도 현재의 학교교육에 의해서 이미 배출된 인적 자원으로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이 그 열쇠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식강국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

21세기 미래 교육, 한국교육개발원이 책임집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질 높은 교육연구를 통하여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세계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한 연구기관으로
한국교육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고기능화, 고집적화 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사업분야

교육정책연구

- 유아, 영재, 통일교육분야
- 장학, 교육행정, 재정
- 학교교육평가 분야
- 국가 인력개발
- 교육행정, 재정시설
- 장학, 학교평가
- 교원교육

평생교육센터 운영

- 평생교육센터 운영
- 학점은행
- 평생교육연구

교육정보연구 및 서비스

- 교육통계조사
- 방송통신고 운영
- 교육연구정보 서비스
- 국제협력
- 한국관 시정사업연구
- 홍보출판사업

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Tel: 3460-0114

Home-Page: www.kedi.re.kr

국가교육통계로 본 인적자원의 잠재력, 학교교육

글 / 이만희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mhlee@ns.v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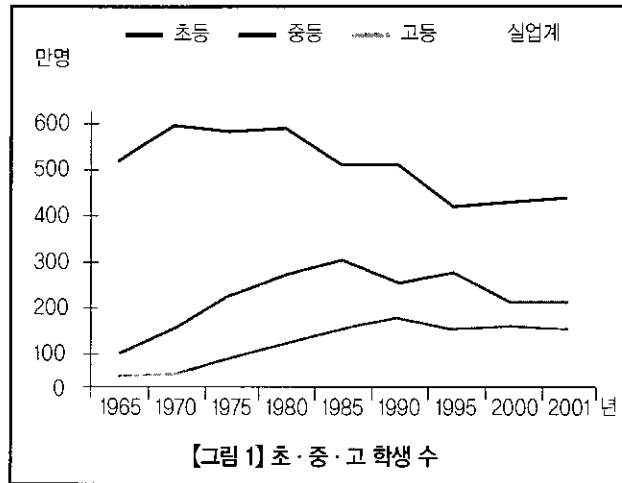
인류문명은 지가(知價) 사회, 휴먼 웨어(Human-ware) 사회로 진입하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천연자원을 투입 요소로 하는 산업사회는 조연으로 밀려나고 지식, 정보,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이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은 크게 지식·정보를 생산하는 집단, 전파하는 집단, 그리고 이를 응용·상품화하는 집단 등으로 구별지을 수 있다. 이 중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최고의 지식·정보·기술을 갖추고, 이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고, 투철한 프로 의식으로 무장된 노동력이 바로 '인적자원'이다.

휴먼 웨어 사회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적 자원의 질(質)은 국부(國富)는 물론 개인의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개인 수준에서는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 이해력에 따라서 실업률, 임금 수준이 뚜렷하게 차별화 되는, 이른바 '디지털 양극화'(digital divide)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적자원은 어느 한 순간에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를 전제로 할 때, 개인은 태어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16년간(6-3-3-4)의 정규 학교교육 과정을 거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초보 수준의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데만도 16년간이나 걸리는 셈이다. 인류문명이 휴먼 웨어 사회로 진입하면서 학교교육은 인적자원의 모태로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학교교육은 잠재적(potential) 인적자원을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제적(actual)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산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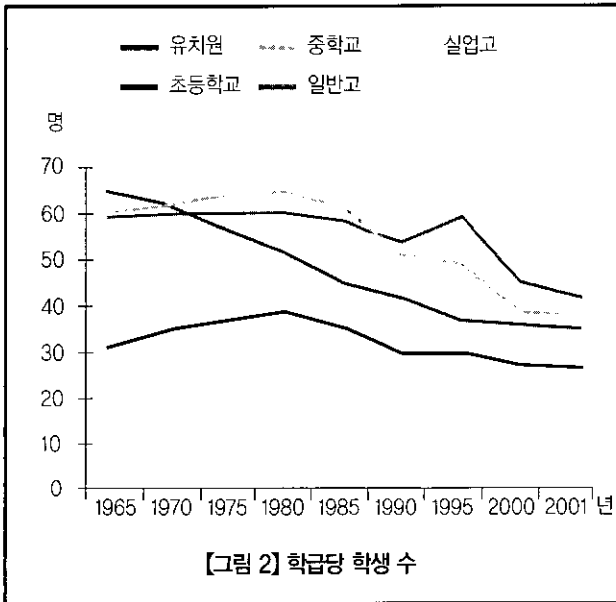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휴먼 웨어 사회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인적자원의 산실인가? 국가교육통계에 나타난 초·중·고등 교육의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적 인적자원의 산실, 즉 학교교육과 그 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총량적 학생 수는 2001년 4월 1일 현재 초등학교 4,089,429명, 중학교 1,831,152명, 일반계 고등학교 1,259,975명, 실업계 고등학교 651,108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 수는 1995년부터 완만하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중학교·고등학교(일반계, 실업계) 학생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결국 인적자원의 풀(pool)이 작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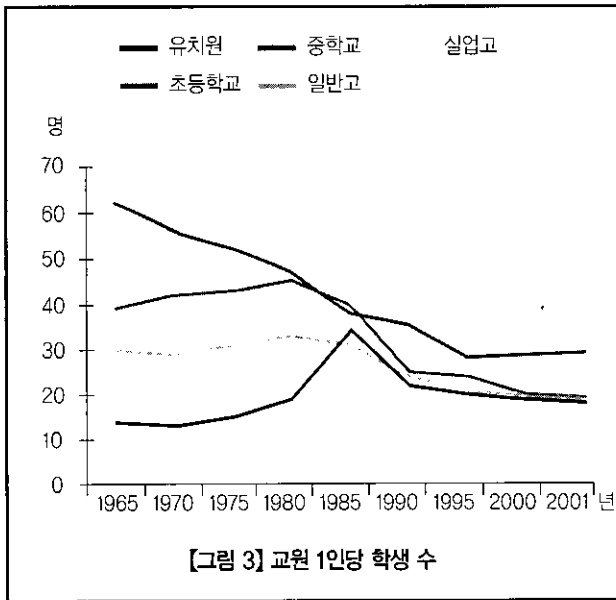


인적자원의 질은 교육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드 웨어 측면에서 볼 때, 학급당 학생 수·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이 교육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각 학교급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 4월 1일 현재 초등학교 35.6명, 중학교 37.3명, 일반계 고등학교 41.6명, 실업계 고등학교 36.4명 등을 보이고 있다[그림 2].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 4월 1일 현재 초등학교 28.7명, 중학교 19.6명, 고등학교 19.5명 등을 보이고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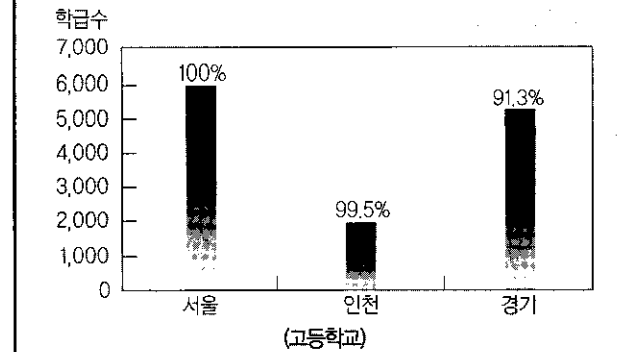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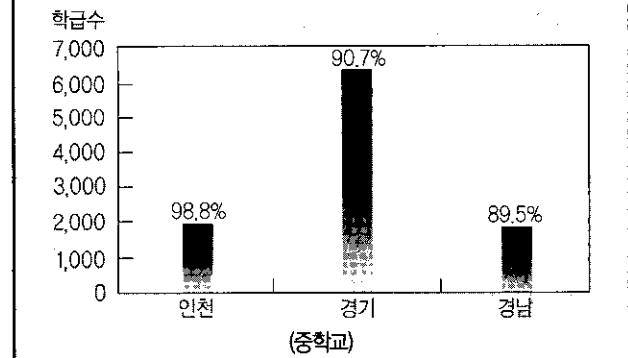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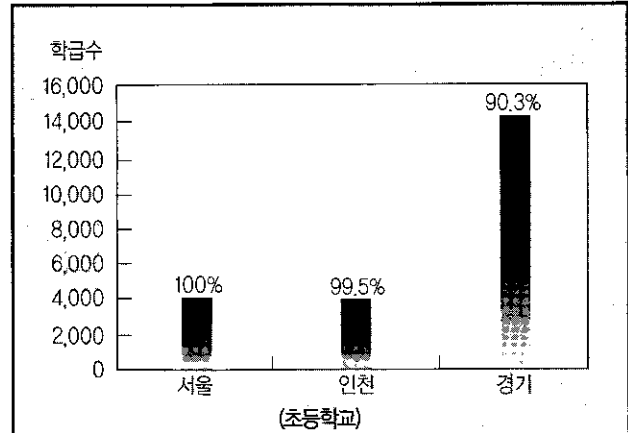
후면 웨어 사회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적 자원의 질(質)은 국부(國富)는 물론 개인의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개인 수준에서는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 이해력에 따라서 실업률, 임금 수준이 뚜렷하게 차별화 되는, 이른바 '디지털 양극화'(digital divide)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학급당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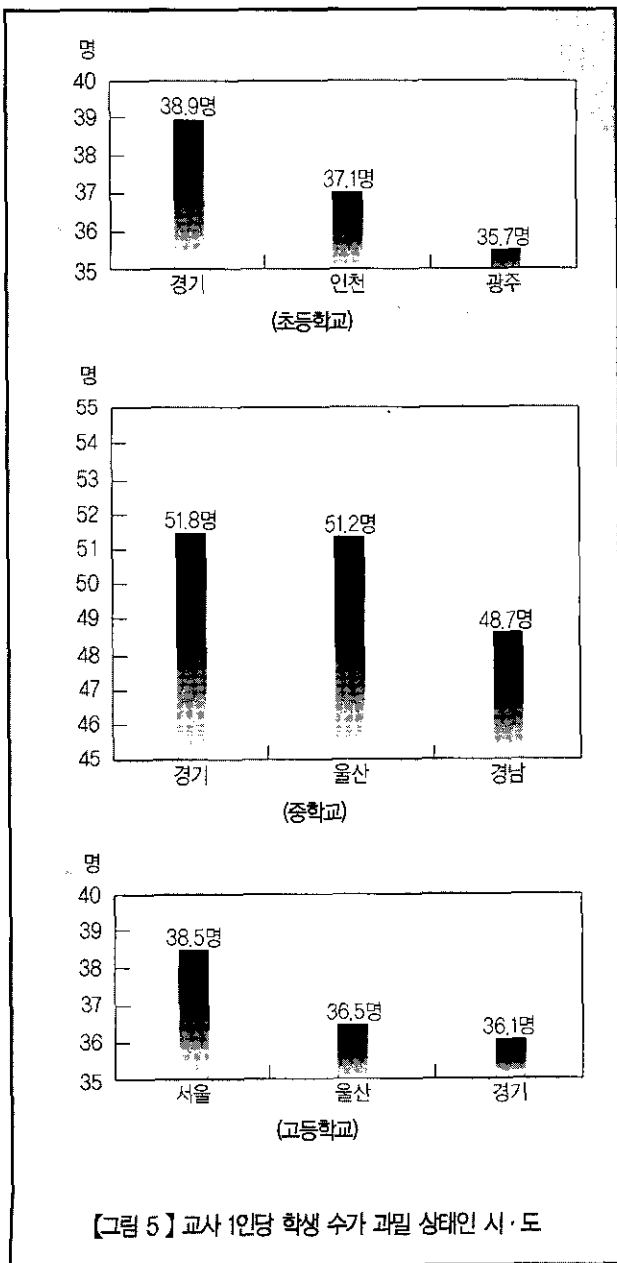


[그림 3] 교원 1인당 학생 수



[그림 4] 학급당 40명 이상의 학급 수 비율이 높은 시·도

그러나 대부분의 교원들은 이 수치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로 커다란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 지역에서의 경우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서울·인천·경기, 중학교는 인천·경기·경남 등의 경우 대부분이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고 있어 과밀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초등학교는 경기·인천·광주, 중학교는 경기·울산·경남, 고등학교는 서울·울산·경기 등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과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도 새로 개발된 신도시 지역은 심각한 과밀학급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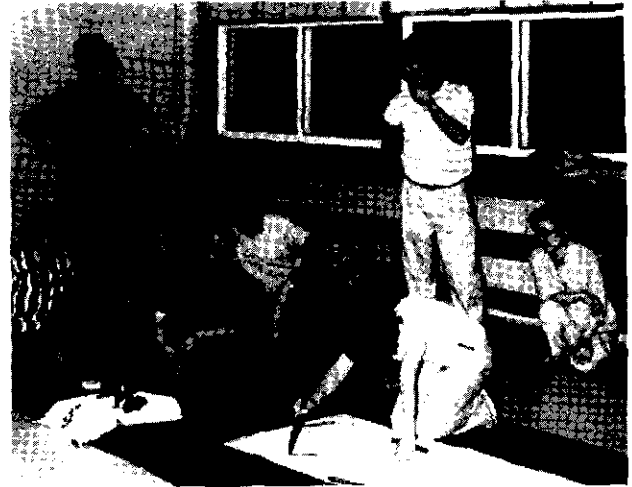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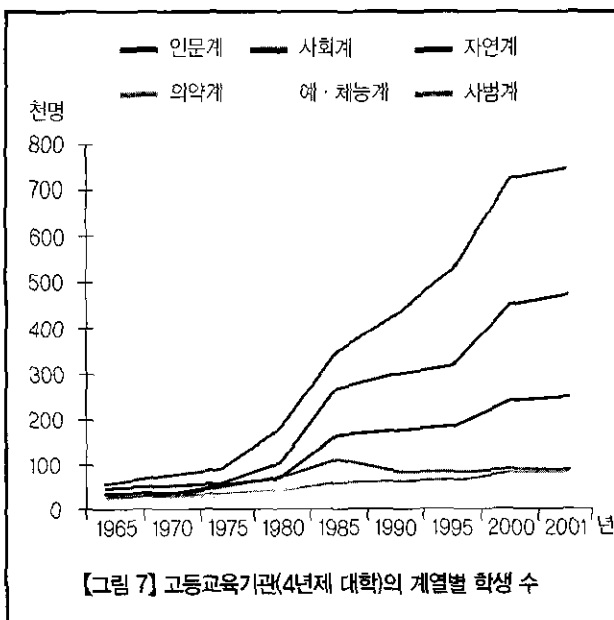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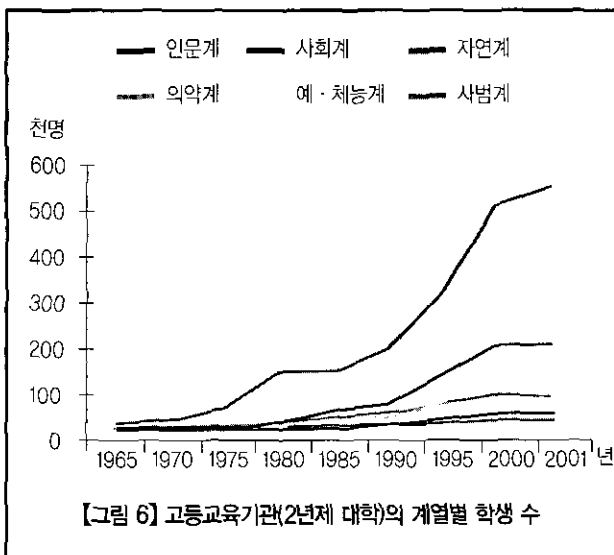
필자는 감사원 파견 근무 중(5월 24일~7월 4일) 교육환경을 파악하고자 경기도 분당 신도시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교사와 면담한 적이 있다. 이 때 교사는 “학부모의 요구, 정보화에 대응하는 학습 자료 개발 등으로 교사의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도저히 지도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인성교육은 말뿐이다. 이런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내 자식이라도 학원에 보내고 싶은 실정이다. 적어도 학급당 학생 수는 40명 이하로 낮추어져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현황에서는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교육이 불신을 받게 되고, 사교육이 범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인적자원의 질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 투자하되, 특히 인구밀집 지역과 과소지역별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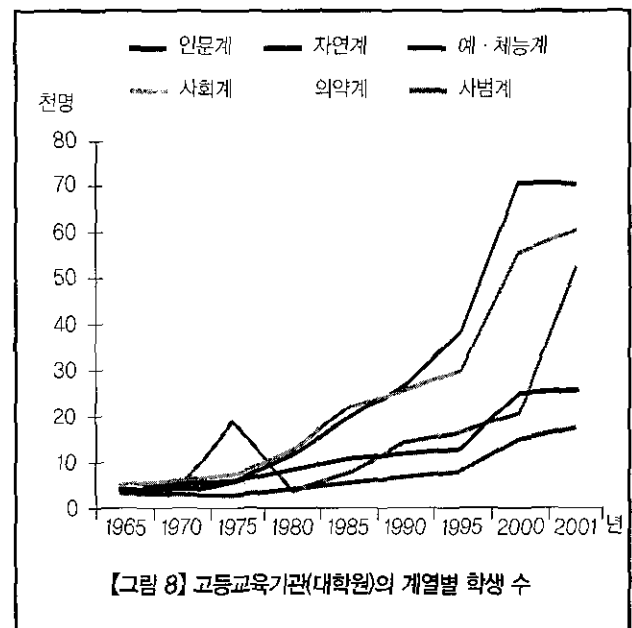
고등교육은 노동시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인적자원의 풀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4월 1일 현재 2년제 대학 952,649명, 4년제 대학 1,729,638명, 그리고 대학원 243,270명 등 총 2,925,557명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열별로는 2년제 대학의 경우, 자연계가 급속히 증가하여 2001년 4월 1일 현재 전체 학생 수의 54.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계열은 사회계(18.9%), 예·체능계(12.7%), 의약계(7.6%), 인문계(3.8%), 사범계(2.6%) 등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 계열들은 감소하거나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 2년제 대학은 자연계 중심의 직업 교육 전문 기관으로 정착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4년제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연계는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전체 학생 수의 43.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계열은 사회계(26.9%), 인문계(13.4%), 예·체능계(8.7%), 사범계(4.0%), 의약계(3.6%) 등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계열을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매우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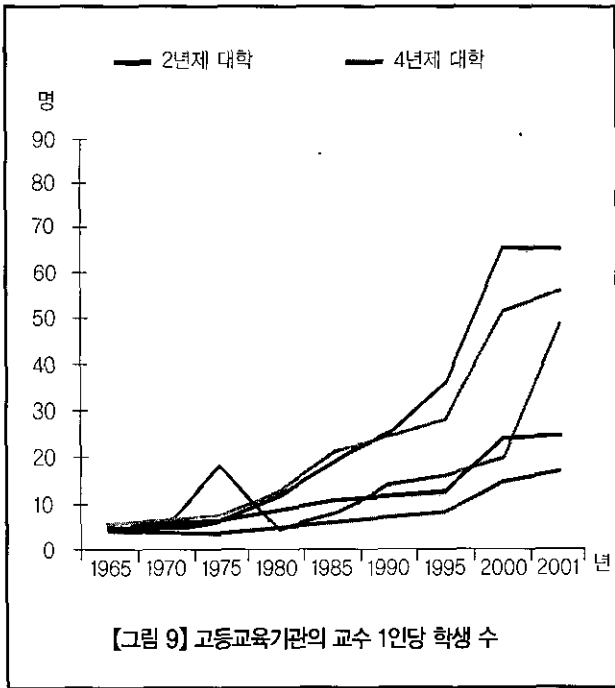


대학원의 경우는 2001년 4월 1일 현재 자연계, 사회계, 사범계가 각각 28.3%, 24.9%, 2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문계(10.2%), 의약계(7.8%), 예·체능계(6.7%) 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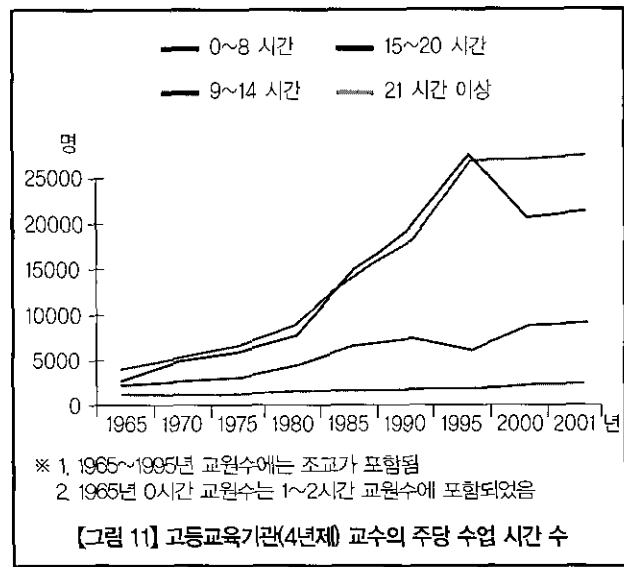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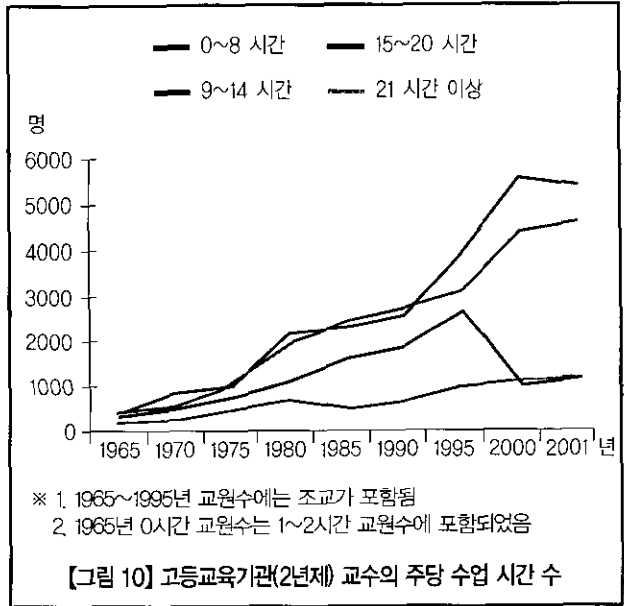
4년제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연계는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전체 학생 수의 43.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계열은 사회계(26.9%), 인문계(13.4%), 예·체능계(8.7%), 사범계(4.0%), 의약계(3.6%) 등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계열을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매우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그러나 사회계, 사범계를 제외하고는 증가세가 매우 둔화되고 있어 졸업 후의 취업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 학문이 고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정부가 기초 학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가 의문시될 정도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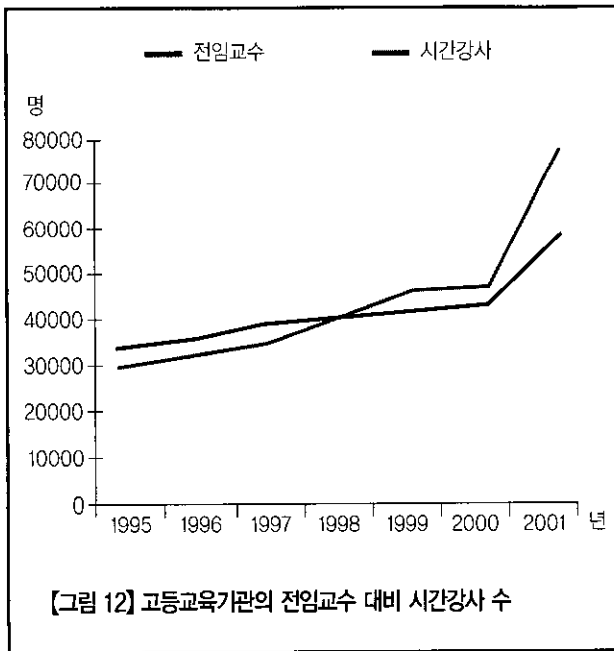


고등교육의 기초 여건은 교수 1인당 학생 수, 교수의 주당 수업 시간 수와 전임교수의 비율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다음의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년제 대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4월 1일 현재 80.1명을 기록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도 1995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39.9명을 기록하고 있다. 과연 고등교육기관



휴먼 웨어 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또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학교교육은 평생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교수 1인당 수업 시간 수는 2년제 대학의 경우 주당 15~20시간이 45.4%, 9~14시간 38.5%를 기록하고 있고, 교수의 주당 담당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림 10].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수 1인당 수업 시간 수는 9~14시간이 38.6%, 0~8 시간이 36.2% 등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업량이 늘어나고 있다[그림 11].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2001년 4월 현재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58,182명이나, 오히려 시간강사 수가 78,778명으로 급증하여 대학교육의 시간강사 의존도는 57.5%로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 12].



지금까지 우리 나라 인적자원의 산실이 될 학교교육의 여건을 살펴보았으나 초·중·고등 교육의 여건은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중등의 경우는 도시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더욱 과밀화되고 있어 교원들의 업무가 왜 과중한가, 그리고 왜 사

교육 의존도가 높은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고등교육기관도 교수 1인당 학생 수, 교수의 주당 수업 시간 수, 전임교수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건은 오히려 부실화되고 있다. 과연 교육개혁은 무엇을 남겼는가, 국가교육통계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다.



휴먼 웨어 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또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학교교육은 평생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평생교육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등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이다. 학교교육을 내실화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여지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육**

인적자원으로서의 인간자본과 사회적 자본

글 /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tjkim@ns.kedi.re.kr)

들어가는 글

인적자원이라는 개념은 왜 필요한가? 인적자원(Human Resource)이란 용어는 단위 조직(주로 기업)에서 자금, 시설, 기자재 등 물리적 자원(Physical Resource)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칭해왔다. 따라서 기업에서 인적자원을 다루는 부서는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부문과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부문으로 나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를 인력개발, 교육, 연수부로 후자를 인사부, 총무부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에서는 그 동안 분리되어 있던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이른바, 교육파트와 인사파트)를 통합하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IMF 이후 조직을 슬림화, 효율화하기 위해 두 부서가 합쳐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러한 작업이 있어 왔다. 이러한 추세는 조직을 슬림화함으로써 양적인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분리되어 있는 두 파트를 통합함으로써 질적인 효율 즉,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교육과 인사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첫째, 교육효과가 떨어진다. 즉, 교육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동기를 떨어뜨린다. 둘째, 개인의 경력개발 또는 능력개발 계획에 교육을 활용할 수가 없다. 즉, 교육 결과에 의해 실질적인 승진이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셋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기업에서 교육은 형식적인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기업들은 교육과 인사를 통합함으로써 교육받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개인의 경력 및 능력개발의 욕이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현장의 요구를 즉시 반영한 교육으로 기술 향상이나 혁신을 가져옴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한 것도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양성(이전의 주로 교육부의 기능)과 인적자원의 관리(교육부 이외의 노동부, 산자부, 과기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기능) 부문을 통합하여 이 같은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 핀란드,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정부 부처의 유관된 기능들을 통합한 추진체를 발족시킨 지 오래이다. 정부가 교육부를 굳이 인적자원 혹은 인적자원

개발이란 용어를 도입하여 신조어인 교육인적자원부를 만드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이제까지 국가차원에서의 교육정책들은 노동시장이나 수급상황 혹은 수요자들의 요구에 그리 민감하지 않았다. 과거에 우리도 경험했듯이 고성장의 산업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교육시스템으로 배출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완전고용 혹은 완전수급(full employability, labour market matching)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어 부분 고용 혹은 불완전 수급(labour market partial matching)으로 일자리 부족, 실업률 증가, 직업능력의 전이 가능성 부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대학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직업세계는 현장에서 직접 생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시스템과 직업세계와의 관계는 다시 재개념화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 관련된 제반 현상들은 인적자원 혹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재조명되어야 한다.

그러면 인적자원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인적자

대학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직업세계는 현장에서 직접 생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시스템과 직업세계와의 관계는 다시 재개념화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 관련된 제반 현상들은 인적자원 혹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재조명되어야 한다.

원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인간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보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들 개념의 의미와 그들이 우리의 경제적 복지에 주는 효과들 및 인간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선진 각국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자본과 사회적자본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이 어떻게 방향지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인적자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간자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자원이란 개념은 단위 조직, 특히 기업 현장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물리적 자원과 대비되는 것으로만 그 의미를 국한할 수는 없다. 인적자원이란 개념은 그 수준이 단위 조직이든 국가이든 더 큰 범위의 세계이든 간에 인간을 자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전반을 지칭하여 왔다. 따라서 인적자원이란 용어는 단순히 인간이 소유한 능력을 자원으로 지칭하는 의미를 넘어서 그 능력을 양성하고 활용 혹은 관리하는 시스템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생산의

세 가지 요소로서 토지, 노동, (물리적)자본을 언급해왔다. 이들 요소 중에서 노동은 물리적 자원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인적자원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 개념이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후기 산업사회 혹은 정보사회의 진입 시기인 1960년대 초부터 노동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지식과 기술은 경쟁적 우위를 가져오는 새로운 전략 무기로 대두되게 되었다. 피터 드러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생산의 핵심수단은 지식이며 그것을 소유한 지식노동자가 역사의 중심에 있다'. 이 시대에서 요구되는 인적자원은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자본(Human Capital)이란 말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개념이다.

인간자본은 개인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이나 특성들을 말한다. 따라서 인간자본은 인적자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볼 수 있다. 즉, 생산의 기본 요소로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노동

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¹⁾

그러면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자본은 무엇인가? OECD는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 외국어를 포함한 의사소통 능력
- 수리력
- 동기나 의지력, 학습능력(learning to learn, self-directed learning), 가치 판단력 등 개인 내적 기술
- 팀웍, 리더십 등 대인 기술
- 정보통신기기의 활용능력, 문제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 기술

그밖에 새롭게 도래한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인적자본의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지식공유, 팀웍, 조직내의 상호작용이나 행동 규범을 통해 사회적 협동을 유발하는 '조직 자본(organizational capital)',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태도나 정서를 고려하여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정서 자본(emotional capital)'이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학습과 획득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맥락과 독립되어서 이해될 수는 없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1) 그밖에 인적자본은 물리적 자본과 ① 투자가 발생하는 시점과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여한다든지 ② 단기간의 이익이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든지 하는 공통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자본은 물리적 자본과는 달리 소비자가 그 자본을 소유하거나 상품화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른바 인간자본은 시장에 의해 거래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해 그 소유권은 노예가 아닌 이상 함부로 거래되거나 상품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을 걸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면에서 발달한다.

- 가정과 영아기의 학습
- 유치원, 초·중등 및 대학교육, 기타 공식적인 직업교육, 성인교육
-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 혁신 활동 등을 통한 비형식적 교육 및 일터에서의 교육
- 일상생활의 삶과 시민 활동을 통한 비형식적 교육 등

인적자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적'이라는 의미와 '자본'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며,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사회적 자본은 인간 자본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어떤 한 개인만이 소유한 특성이라기 보다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며 공공의 성격을 가진다. 셋째, 관습이나 문화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다.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는 데는 최소한 4가지의 접근방식이 있다.

첫째, 문화인류학적 접근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결합(association)의 본능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후쿠야마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기원과 사회질서에 관한 생물학적 기초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규범이나 인간 동기의

근원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조직의 특징들로서 신뢰나 상보성의 규범 및 시민활동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집단활동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개인의 경제성을 증진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접근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개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활용해야 하는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본다.

넷째, 정치학적 접근에서 사회적 자본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규범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최근 World Bank의 입장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데, 지역간 혹은 계층간 빈부의 차이를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도적 역할, 사회적 배분 및 신뢰나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자본은 집단간 혹은 집단 내에서 협동을 촉진하는 공유된 규범, 가치 및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울록은 사회적 자본에는 밀착형(bonds)과 결합형(bridges) 및 연결형(linkages)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주장한다. 밀착형은 가족이나 종교집단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결합형은 밀착된 관계는 아니지만 친구, 동료와 같이 동일한 사회적 위계나 지위를 가진 관계에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연결형은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 계층간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지역사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적인 틀을 넘어서 협동하고 정보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밀착형 사회적 자본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강한 유대나 이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집단밖에 있는 외-집단(out-group) 구성원들을 배타하게 되는 역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컨대, 극단적인 밀착형 집단으로 마피아 조직, 테러 집단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호 신뢰나 협동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파괴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에 관여하고 있다.

인간자본은 개인의 학업성취도나 기술력 등으로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자본은 측정하기가 어렵다. 푸트남은 미국인들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데 ① 지역사회나 조직 생활에 대한 참여의 강도 ② 투표 등과 같은 정치 참여나 관심 ③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④ 친구관계와 같은 비형식적인 사교성 ⑤ 대인간의 신뢰와 같은 지표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이 사회적 자본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예컨대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푸트남은 개인의 태도나 주관적인 응답에 의존했는데 신뢰의 기준 자체가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비교나 문화간의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

최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고된 바와 같이 벅과 키퍼는 행동수준에서 OECD 국가들간 신뢰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즉, 50달러 상당

의 지폐가 든 여러 개의 지갑을 거리에 떨어뜨리고 얼마나 그 나라 국민들이 주인에게 그 지갑을 돌려주려 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물론 국가들간에 회수된 지갑의 숫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회수된 지갑의 수와 태도수준에서 측정된 지표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이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하며 사람들 간의 신뢰가 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회적 자본은 가정,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국가, 하위 국가 수준의 다양한 행정단위나 제도들을 통하여 형성된다.

첫째, 가정은 사회적 자본 형성의 일차적인 원천이다.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부모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신뢰나 협동, 혹은 학교 교육에서의 학습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콜맨은 가정에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로 ① 가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의 정도 ② 아이에 대한 주의나 보살핌의 강도와 질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는 사회적 자본이 일을 통하여 형성되는 실질적인 장소는 기업이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지식에 대한 혁신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점차로 협동, 학습,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들은 기업내 구성원들 간 혹은 기업간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조직 학습', '학습조직'이라는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셋째는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인 시

민사회 조직들이다. 한 지역에서의 경제적 혹은 정책수행 활동들은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시민사회나 이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들(스포츠 클럽, 각종 협의체, 봉사조직, 노동조합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밀착형 혹은 결합형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각종 제도들이나 정책들을



인간자본이 거시적인 수준에서(간접적 혹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복지 증진에 주는 효과는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효과는 인간자본의 형성에서 단순히 학교교육 자체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에 더하여 연구개발이나 혁신과 같은 부산물이 주는 영향이며 미시적인 효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추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른바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부의 생산과 복지 정책 및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넷째, 성(gender), 인종, 지역 감정 등 우리사회에서 상존하고 있는 편견의 범주들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기

능을 하고 있다. 시민활동, 정치적 참여 및 노동시장에서 성, 인종, 지역, 학벌 등의 차별과 같은 문제는 조직이나 국가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원천들은 다음과 같다.

- 세대간의 격차
- 변화하는 가치체계 : 포스트모더니즘, 개인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 등
- 공동체 의식의 약화
-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변화
- 가정의 붕괴 등

인간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복지에 주는 효과

인적자원의 구성요소로서 인간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우리들의 복지 전반에 주는 효과는 그 규모에서 실로 방대하며 종류별로도 다양하다. 이러한 효과들을 좀더 가시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인간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우리의 경제적 복지 증진에 어떤 효과를 주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인간자본 : 미시적 수준에서의 효과
미시적 수준에서 인간자본의 경제적 효과는 교육을 통해 형성된다. 교육은 고용과 수입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크루거 등은 통계적으로 평균 교육받은 헷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5~15%의 수입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인에 있어서 문자해

득률은 수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2000년 OECD의 국가간 성인 문자해득률 조사는 교육, 문자해득, 경험, 성 등 인간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변인들이 수입의 20~50%까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 인간자본 : 거시적 수준에서의 효과

인간자본이 거시적인 수준에서(간접적 혹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복지 증진에 주는 효과는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효과는 인간자본의 형성에서 단순히 학교교육 자체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에 더하여 연구개발이나 혁신과 같은 부산물이 주는 영향이며 미시적인 효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특히, 생산장면에서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는 학력이나 자격수준과 같은 형식적인 지표와 비교할 때 GDP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 사회적 자본 : 미시적 수준에서의 효과

첫째,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람들 간의 신뢰나 네트워크는 조직이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의 이익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 내(intra-firm) 혹은 기업 간(inter-firm)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협동적인 신뢰 규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협상이나 거래와 같은 마케팅 절차나 경영 프로세스에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대폭 절감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 문화

(organizational culture)는 조직구성원들 간의 정보의 공유, 희생, 협동 및 상호 학습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시켜 혁신을 가능케 하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해준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지역의 혁신 시스템(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을 촉발한다. 혁신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지식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에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지역의 생산체제나 지역노동시장의 조직과 기능에 반영된 핵심적인 지식들이나 노하우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은 학습과 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공급원이다.

한편 지역과 밀착된 인적자원 양성과 이들의 정착(이른바,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 :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시너지와 협동, 사회적 응집력을 가져오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수준, 인적자원의 질, 정보, 복지수준 등에서 지역적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들은 그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들을 자극하여 지역격차, 편견, 갈등 및 계층간의 격차 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서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개방적이거나 유동적인 노동시장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는 직업을 찾는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밀착형 사회적 자본이나 결합형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고용에 관한 자원을 구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의 실업이나 잠재적 실업의 대상인 퇴직예정자들이 자신의 구직 활동에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재취업 훈련에 치중되어 있다.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취업률은 저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노동부가 실업자 재취업교육에 대한 양 위주의 정책으로 교육생의 배출양 만을 중시했지 그들을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취업을 했더라도 개인의 적성과 무관한 일자리가 제공되었거나 임시직이어서 지속적인 사회 적응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실업자 혹은 잠재적 실업자들의 인맥을 분석하고 그들의 적성에 맞는 구직 지원활동을 펼쳐나가는 고용센터나 시스템들은,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에게 실업 수당을 주고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한 양적 결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며 효과적인 실업자 대책이 될 수 있다.

• 사회적 자본 : 거시적 수준에서의 효과

첫째,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성장, 즉 GDP의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 가치 연구(World Values Study)결과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자본, 투자, 수입 등의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인간 신뢰와 같은 측정지들이 GDP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신뢰지수들은 저축, 혁신지향 활동 및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며 시민활동,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공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킨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고품질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기업이 투자를 창출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른바 정치적, 제도적, 법적(PIL: Political, Institutional, Legal) 기반을 조성한다.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들

현재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은 초국가적(super-national), 국가적(national), 하위 국가적(sub-national)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초국가적 수준에서의 노력은 EU, WB(World Bank), Unesco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인적자본 형성의 경우, EU에 소속된 국가들은

이른바 Euro-pass system을 통해 유럽 각국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 즉, 개인의 지식과 기술 등 직업 능력 및 자격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통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그들 공동의 관심사인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서는 세계 빈곤 지역의 경제, 문화,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한 WB, Unesco 등 국제기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 왔다.

국가적 수준에서는 기술 및 자격체계(National Skill Standards, 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통하여 국가수준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질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형성에 힘쓰고 있는 영 연방 국가들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싱가포르의 경우는 인적자본 육성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개발 전략으로 활용한 사례로서 Manpower 21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의 대표적인 몇 개의 전략 산업을 선정하여 여기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천해 왔다.

한편 하위 국가적 수준에서는 좀 더 지방 혹은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인간자본·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이를 지역개발·지역혁신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OECD가 지원하는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프로그램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 유럽 각국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평생학습도시나 학습지역(learning cities, learning regions)

을 건설함으로써 지역의 인간자본 및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지역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은 전 세계적으로 170여 개 도시 및 지역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통하여 보고되고 있다.

나오는 글

초국가, 국가 및 하위국가 수준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우리 모두는 인간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 나의 인간자본(지식, 기술 및 특징 등)은 무엇인가? 나의 사회적 자본(가족, 동료나 친구관계, 인맥 등)은 무엇인가? 그 특성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나의 경쟁력은 달라지게 된다.

인적자원의 구성요소로서 인간자본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원천이며 인간자본 역시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형성된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궁극적으로 인간자본을 통하여 구현된다. 따라서 인간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작용한다. 사회철학자인 비고츠키는 인간의 마음이 사회를 통하여 형성되고 인간의 의지는 다시 그 사회적 지식을 변형시킨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은 인간자본 속에 내면화되어 존재한다. 인간은 전통적인 사회적 자본에 구속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기도 한다. 세계 경쟁력과 수월성은 우리의 문화나 사회적 자본 속에 내재되어 있다. 다만 어떻게 우리의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인간자본을 육성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이욱**

세계의 교육

G l o b a l M e s s a g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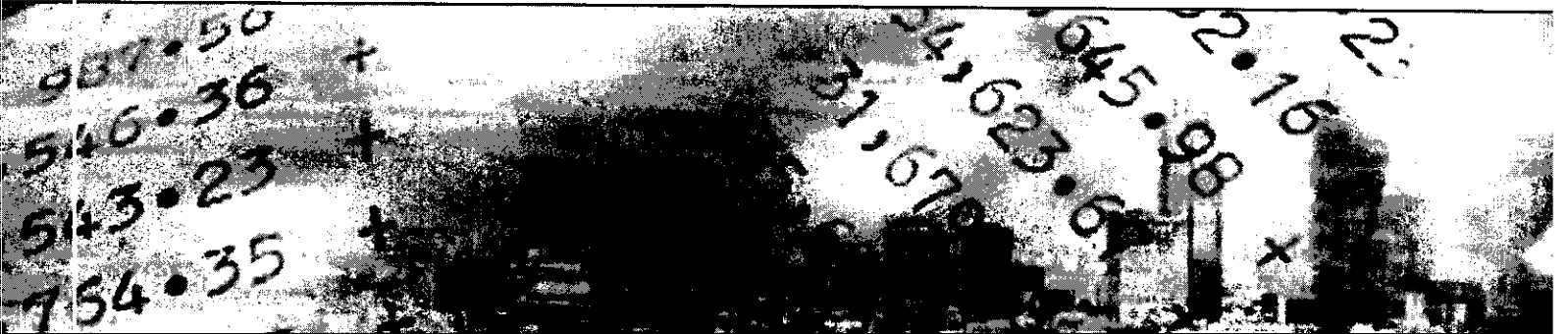
미국 미국의 탁아(Daycare)와 유아원 교육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영주 / 시카고 통신원

중국 기숙제 유치원
강영민 / 북경 통신원

독일 독일 학제에서의 낙제
장은희 / 베를린 통신원

영국 영국의 교육민영화 실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태욱 / 런던 통신원

일본 오사카의 아동살상사건과 일본의 '열린학교운동'의 향방
이정미 / 동경 통신원





미국

세계의 교육

미국의 탁아 (Daycare)와 유아원 교육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글 / 김영주 (시카고 통신원, ykim30@uic.edu)

유아 교육과 관련하여 발표된 한 연구는 미국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유아원과 같은 탁아 시설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NICHD(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 Human Development)는 영아기(Infancy)와 만 3세 사이의 자녀들의 보육(Child Care)과 유아원 등의 탁아 보육 시설의 교육적·환경적 수준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발표하였다.

NICHD Child Care로 알려진 이 연구는 지난 1991년에 약 1,300여 명의 영아들(Infants)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형태의 보육을 경험하게 되는지 조사하면서 시작한 연구로, 전미 10여 곳에서 아이들이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1991년의 미국 어린이들의 보육 양상에 대한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발달 상태를 주기적



전통적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고 기르는 일은 엄마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로 엄마들이 자녀 양육의 대부분의 몫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직업을 가지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상황으로 볼 때 더 이상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이 엄마의 일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으로 조사하여, 유아기의 보육이 아동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NICHHD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부모들은 유아기의 자녀를 일주일에 평균 33시간 탁아 보육 시설에 맡기는 것으로 드러나, 현대 미국 사회의 어린아들이 자라는데 유아원이나 놀이방과 같은 유아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 유아 탁아 시설이 어떤 수준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활동은 어린이들의 인지, 언어, 행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보육 시설은 대체로 아이들의 인지와 언어 발달에 이로움을 주지만, 그 보육 여건이나 인적·물적 환경이 좋지 않은 유아 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인지 발달과 언어 능력이 평균 수준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유아 보육 시설에의 탁아는 아동의 행동 발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개인 보육을 받은 아이들보다 유아 탁아 시설에서 보육을 받은 아이들이, 그리고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 행동 역시 유아 시설의 수준이 낮을수록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을 가기 전에 미국 어린이의 절반이상이 한 번쯤은 다니게 되는 유아원

근래 들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1995년도에 여섯 살 미만의 자녀를 둔 엄마들 중 약 62 퍼센트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여섯 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이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비율은 20년 전에는 약 40퍼센트, 그리고 85년도에는 50퍼센트를 약간 웃돌았었다. 해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의 사회 경제 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0년에 약 10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고 기르는 일은 엄마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로 엄마들이 자녀 양육의 대부분의 몫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위의 통계치가 보여주듯이 시간이 갈수록 직업을 가지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상황으로 볼 때 더 이상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이 엄마의 일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전미 10여 곳에서 약 1,300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NICHHD 연구에 의하면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엄마가 돌보고 있는 경우는 35퍼센트에 불과했다. 가정에서 엄마와 주

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아이가 만 세 살이 되었을 때에는 불과 21퍼센트에 불과해, 엄마가 담당해왔던 육아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통해 보완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아원이나 유아방, 놀이방과 같은 시설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미국 아이들의 경우 영아(Infant)들의 30퍼센트가, 만 세 살이 되었을 때에는 전체의 50퍼센트 정도의 아이들이 탁아 보육 시설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의 경우 6개월된 아이들은 엄마가 하루 종일 아이를 보살피거나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보모가 아이의 집에 와서 돌봐주는 형식의 보육을 하는 가정이 비교적 많았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유아시설이나 여러 명의 아이를 돌봐주는 집에 맡기는 식으로 자녀의 보육 형태가 바뀌어갔다. 즉, 미국의 부모들은 아이가 어릴 때에는 비형식적인 일대 일 형태의 육아 방법을 찾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형식적이고 그룹으로 아이를 돌보는 탁아 시설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NICHHD 연구에서 어린아들이 보육시설을 처음 다니거나 보모들에게 맡겨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보통 생후 4개월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유아원



반면, 극빈 가정의 아이들이 유아원을 다니게 되는 시기가 가장 늦고 이용 시간도 가장 적었다. 많은 극빈 가정에서는 엄마 스스로 아이를 돌보았으며, 보통 아이가 15개월이 되어서야 유아원에 보내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극빈 가정의 아이들이 유아원에 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이유를 이런 가정의 엄마들이 대체로 직업이 없다는 것과 정부의 보조 제도

을 다니기 시작하는 시기나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것은 가정의 경제 구조와 수입의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가정의 수입의 정도에 따라 보면 일인당 소득이 비교적 낮은 가정의 아이들이 유아원에 다니는 시기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다소 낮은 가정의 부모들은 보통 생후 3개월이 되기도 전에 아이를 유아원에 보내기 시작했으며, 주당 시간을 따져 볼 때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다른 경제층 가정의 아이들보다 많은 시간을 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비교적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의 유아원 입학 시기와 주당 이용 시간이 가장 긴

에서 찾고 있었다. 가정의 소득 수준이 아주 낮은 가정은 엄마가 직업을 갖는 대신, 정부가 제공하는 소액의 생활 경비와 아이를 낳을 경우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생활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다시 말해, 정부 보조금 혜택 대상이 되는 가정의 엄마들은 대체로 직업이 없었으며, 따라서 어린아이를 유아원에 보내야만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가정 경제 구조에 따라 보면, 엄마가 가정 경제에 꼭 필요한 수입원일 경우 육아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그리고 엄마의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 역시 다소 이르게, 생후 3개월에서 5개월에 탁아를 시작했다. 엄마의 수입이 많은 가정은 대개 놀이

방이나 기타 탁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줄 보모를 채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리고 가정에 보모를 들이는 형태의 육아는 보통 아이가 15개월이 될 때까지는 지속되었다.

어린 자녀를 보다 형식적인 보육 시설이나 아이 보는 집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아이만을 돌봐줄 보모를 구하느냐의 여부는, 부모들이 육아 시설에 자신의 아이를 맡길 경우 아이에게 오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랐다. 여러 아이들의 그룹을 동시에 돌보는 곳에서도 자신의 아이가 보살핌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공공 탁아 시설에 아이를 등록시키거나, 몇 명의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집을 이용하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전문적인 유아 시설이 보모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만 못 하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고 믿는 부모들은 되도록 가족 내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거나 개인 보모를 구하는 형식으로 탁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유아원 교육의 수준과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NICHD는 한 그룹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지, 한 명의 교사가 몇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지, 유아원의 물리적 환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유아 교사가 보육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그 경력은 얼

마나 되는지, 교사가 아이들을 보육하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가를 근거로 미국 아이들이 받는 유아원의 질적 수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많은 유아원이 권장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제 수준별로 보았을 때, 고소득층의 자녀는 비교적 양질의 보육을 받고 있었으며, 중간 정도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자녀는 그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탁아 보육 시설에 다니고 있었다. 극빈 가정의 경우 낮 시간 동안 유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족이나 친지가 돌보는 가정의 아이들이 경험하는 보육의 수준은 가장 낮았다. 그러나 공공 탁아 보육을 받는 극빈 가정의 아이들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 교육 개발 다음 호에 소개될 예정)을 통한 정부의 지원으로 오히려 중간소득층의 자녀가 받는 보육의 수준을 넘어 고소득층 자녀가 경험하는 것과 맞먹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보육 시설의 물리적·인적 환경은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우나, 시설의 환경은 어린이들이 받는 보살핌이나 교육의 질에 관계하고 있었다. 보육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탁아 보육원의 경우 교사들이 아이들의 행동에 보다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을 보였으며, 인지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교

사가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상호 작용하느냐, 그리고 유아원에서 받는 보육의 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아이들은 인지 발달과 언어 능력에 차이를 보였다.

인지와 언어 발달 측면에서 검사했을 때, 평균적으로 유아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 아이가 주당 유아원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지적 능력과 언어능력, 학교 교육 준비성이 높다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아이들의 언어 능력은 교사의 보육 활동과 아동과의 대화 방식과 관련이 있었는데, 교사가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화하는데 투자하고,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나 요구에 반응을 보일수록 아이의 언어 사용능력이 좋았다. 하지만 유아 시설에 다니는 것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환경과 보육의 질이 우수한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인지력, 언어력을 재는 표준화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반대로 유아원의 수준을 판단하는 조건에 많이 부족할수록 원아들은 평균 미달의 낮은 점수를 얻는 경향을 보였다.

더 나아가 놀이방, 유아 교실, 유아원 등과 같은 유아 시설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팀은 지능 발달을 돕고 어휘력이나 언어이해력 등을 키우는데 다소 유일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아이들의 행동발달에는 부정적 영향

을 끼치고 있었다.

낮 시간 동안 유아 보육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가족이나 부모에 의해 돌봐지는 아이들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빈도가 많다고 한다. 소위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의 행동과 유아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간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몇 해 전에 발표된 NICHD 보고서는 아이가 두 살이 되면서 유아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다소 많은 문제 행동을 보이지만, 만 세 살이 되었을 때에는 유아 시설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사이에 문제 행동에 있어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보고서는 유아원과 아이의 문제 행동과의 관련성을 다시 들추고 있다.

지난 4월 NICHD가 발표한 보고서는 유아 시설에서의 탁아 경험이 많은 아이일수록 유치원생이 된 후 문제 행동을 보이는 성향이 컸다고 했다. 어머니 유치원 교사에게 아이의 행동 성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유치원생이 되기 전에 주 30시간 이상을 유아 시설을 통한 탁아를 경험한 아이들의 경우, 그들 중 약 17퍼센트가 응답자들이 보기에 다른 아이들에게 공격적이거나 규칙을 어기는 행위가 많은 것으로 여겨졌다.

반면, 일주일에 10시간 이하의 유아원 보육을 받은 아이들 중에서는 오직 6퍼센트의 아이들만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응답자들은 말했다.

이에 더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는 유아 시설에 의한 탁아가 어린이의 행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이 연구 관련자는 유아 보육 시설 탁아를 주 30시간 이상 한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나 교실에서 행동이 단정하지 않거나 규율 위반을 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 유아 보육 시설에 의한 탁아와 아동의 행동 발달과의 관계를 보는 입장에 있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연구자는 유아원 탁아가 행동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단정적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를 별로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 연구자들도 있다. 유아원 탁아와 문제 행동과의 관련성을 가볍게 보는 연구자들은 유아원 보육의 질이 행동 발달과 관계가 있음을 지적

하며, 인지 발달과 언어 능력에 유아 보육이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유아 시설로의 탁아 자체가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유아원의 수준이 어떠하냐가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동의 문제 행동이 유아 시설을 통한 탁아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 변인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장시간의 유아원 탁아 경험이 초등학교가 된 후의 문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확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 사이의 각기 다른 해석과 아직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원 탁아와 아이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문제는 미국의 학계와 유아를 둔 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사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오늘날 미국 사

회에서 어린이들이 자라는데 유아 보육 시설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 만큼 더 중요하게 받아들

여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아동의 성장에 있어 유아기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유아 교육학자들은 태어나서 처음 몇 해 동안에 갖게 되는 경험과 환경은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어린 시절의 생활 경험은 사회성과 정서 발달, 행동 발달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다. 그리고 유아기, 아동기의 경험이 어떠했느냐는 아이들의 계속적인 성장 전반에 알게 모르게 깊이 관계하게 된다.

물론, 앞에서 열거된 아이들의 성장에 놀이방이나 유아방, 유아원과 같은 각종 탁아 시설이 미치는 영향이 가정 환경이 미치는 영향만큼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아기 때의 경험이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그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녀의 탁아를 선택하는데 있어 보육 시설의 환경과 교사의 자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나라 역시 맞벌이를 하거나 엄마가 가정 경제 수입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탁아 제도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더불어 우리 나라 유아 시설의 수준과 교육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무게있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





중 국 세 계 의 교 육

기숙제 유치원

글 / 강영민 (북경 통신원, j_ym@263.net)

반 일제, 종일제, 계절제, 학전반 등 중국의 유아 교육시설 이외에 특이할 만한 것은 기숙제 유치원이다. 기숙제 유치원이란 맞벌이 부부가 일이 바빠 퇴근시간을 유치원 일정에 맞출 수 없을 경우 아이를 맡겨두고 주말이나 주중에 한두 번씩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아교육시설이다. 기숙제 유치원은 전문적인 기숙제 유치원과 종일제 유치원에 부설된 기숙반 등 여러 형식이 있다.

북경 사범대학 부속유치원은

오랜 기숙반 운영 역사를 가진 유치원으로 갈수록 지원자가 많아져 현재 전 학급의 30% 정도가 기숙반이며, 분교에서는 절반 이상의 기숙반을 운

영하고 있다. 기숙반의 교사와 보육원은 학급당 5명이다. 교사 2명, 보육원 1명, 야간 보육원 1명, 조교사(교사를 거들어주는 사람)1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숙반의 특징은 연령에 따라 반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이나 연령비율에 따라 반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가정의 형제구조를 감안하여 고안한 방법이다. 기숙반의 활동일정 역시 필수로 아이들의 자연적인 생활리듬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기숙반의 일과는 아침 7시 기상으로 시작된다. 7시부터 7시 40분까지 아이들은 세수 등을 마치고 유희실이나 마당에서 논다. 7시 40분부터 기숙반



아이들이 한쪽에서 아침체조를 할 때 종일반 아이들은 하나 둘씩 유치원으로 등원(登園)하기 시작한다. 체조를 마치고 유희실로 들어와 손을 씻고 나면 기숙반, 종일반 모두 급식 시간이다. 이로부터 시작되는 일과는 종일반과 큰 차이가 없으나, 북경 사대 부속유치원에서는 기숙반을 위한 특별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한다.

예를 들면 3시간 이상의 실외활동 보장, 가정적 분위기를 창출을 위한 활동조직 등이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종일반 아이들이 부모들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동안 기숙반 아이들은 마당이나 활동실에서 논다. 7시부터는 아이들의 저녁식사 시간, 저녁식사가 끝나면 보육원과 교사가 8시까지 침실, 목욕실, 세면실, 화장실, 유희방이 갖추어진 '집안'에서 아이들과 놀아준다. 8시에 목욕을 하고 8시 30분부터 취침시간이다. 기숙반에는 30명 정도의 원아가 있으나 부모들이 데려갈 수 있는 시간이 자유로 되어있어서 평일에는 보통 열 명 가량의 아이들만 남는다.

중국의 기숙제 유치원 제도는 해

방전쟁 시기 즉 20세기 30년대로부터 비롯된다. 전쟁 중에 태어난 공산당 간부의 자녀와 유가족, 그리고 일부 고아들을 위해 설립되었던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을 도맡아 길러 전쟁시대 간부자제양성의 역할을 꾸준히 담당해 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이후, 모택동의 남녀평등과 실업자 소멸 사상에 따라 여성의 전면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기숙제 유치원 제도가 계속 도입되어, 전국의 대·중도시들에 기숙제 유치원이 설립되었다.

이 중에는 교육부에서 설치한 기숙제 유치원 이외에 일부 국가기관, 군사기관, 기업체 등에서 본 기관의 종업원들을 위하여 설치한 기숙제 유치원 등이 포함된다. 그러다가 문화혁



명 중에 대부분 폐지되었던 기숙제 유치원 제도가 시장경제 도입과 더불어 날로 바빠진 현대 부모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시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대부분의 대·중형 도시들에서는 80년대 이후부터 기숙제 유치원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시설과 교사조건이 좋은 기숙제 유치원에는 지원자가 급증하여 상해시 복지원에서 설립한 전문 기숙제 유치원인 中國師範幼托園은 신청자와 입학자의 비율이 10 : 1까지나 된다고 한다. 북경의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제1유치원, 북해유치원, 6/1 유치원 등 전문 기숙제 유치원들도 계속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간의 운영경험을 쌓아온 기숙제 유치원들은 현재 다양한 운영형태를 취한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했던 연경구분을 타파한 기숙사반원아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취침시간 이외에는 언제든지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게 배려한 것 등이다. 또 영양사가 정한 메뉴를 부모들에게 공개하고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루

세 끼 음식을 부모들과 함께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식을 기숙제 유치원에 입학시키는 부모들의 이유 또한 다양하다.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어서 일이

바쁜 것이 주요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아이를 한 명밖에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보호를 면하고 자식의 자

보통 기숙반에 들어와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거나 우울해지는 아이가 눈에 띄면 부모들과 상담하여 될 수 있으면 종일반으로 옮기도록 권유하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매일 집으로 돌아가지만 가끔 유치원에서 자면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역시 부모들과 상담하여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권유합니다.

립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한 부모도 적지 않다.

이밖에 형제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타인과의 사교적인 면을 키워주기위한 것 또한 주요한 이유가 된다. 유치원 교사들의 의견도 주목할만하다. 북경사범대학 부속유치원의 기숙반 담당교사 나선생님은 기숙제 유치원의 아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기숙반의 아이들은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기숙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와 빨리 적응하는 아이지요. 보통 기숙반에 들어와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거나 우울해지는 아이가 눈에 띄면 부모들과 상담하여 될 수 있으면 종일반으로 옮기도록



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역시 부모들과 상담하여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권유합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늦더라도 매일

와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사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반에도 3~5세의 30명의 아이들 중에 일주일 내내 유치원에 묶는 아이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될 수

있으면 그 아이에게 관심을 많이 돌린답니다.”

아이들의 저녁식사 중에 잠깐 인터뷰인데, 인터뷰 중에도 부모들이 속속 아이를 데리러 오고 있었다. 친

구들과 저녁을 먹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도 있고, 다같이 저녁을 먹는 것이 재미있어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도 있었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아이들은 방안에서 선생님과 함께 각종 놀이를 즐긴다. 취침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이들은 조금도 피곤한 기색이 없다. 하루종일 아이들의 떠드는 속에서 지내고 또 밤까지 아이들을 돌보려면 귀찮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필자의 물음에 선생님은 애들과 함께 노는 과정을 통하여 제때에 그들의 정서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에 이렇게 떠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고맙다고 대답했다.

날로 증가되는 기숙제 유치원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 교육부에서는 1996년 6월 1일에 [중



권유하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매일 집으로 돌아가지만 가끔 유치원에서 자면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부족하

화인민공화국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사업규정]을 발표하였다. 본 규정은 유치원의 임무가 “보육과 교육을 결합시키는 원칙하에 유아들의 지·덕·체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힌 후, “부모의 사업과 학습활동에 순리롭게 참가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덧붙인 부분이 특징적이다. 여기에 기숙제 유치원의 이념이 들어있는 것이다. 기숙제 유치원의 시설에 대해서는 “유희실, 이동용화장실, 세면실, 보건실, 교원사무실과 주방 등 보통 유치원의 필수시설 외에 침실, 격리실, 욕실, 세탁실, 교원당번실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의 근거하에 각 지방 교육청에서는 지방의 조건에 맞춰 기숙제 유치원에 관한 구체적인 설치조건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면 북경시

교육청에서는 2001년 6월에 [기숙제 유치원 관리에 대한 규정]을 반포하여, 북경시의 1급 2유형 이상의 유치

기숙제 유치원이 발전하게 된 주요 원인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시장경제의 전면도입임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다. 사회적 수요가 있는 한 기숙제 유치원은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논쟁 또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진정으로 아이들의 발전에 유리한 운영방식을 강구하는 것이다.

원들에서만 기숙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위에 상세한 설치조건을 규정하였다.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여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숙제 유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중구난방이다. 기숙제 유치원 설치 반대자들은 “그 어떤 교육시설도 부모들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숙제 유치원이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실험을 통해 기숙제 유치원이 보다 과학적인 보육/교육방법을 취한 결과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종일반 원아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보다 활성화된 운영으로 부모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자녀를 데려갈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숙제 유치원이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는 부모들의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아동학대사건 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숙제 유치원이 발전하게 된 주요 원인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시장경제의 전면도입임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다. 사회적 수요가 있는 한 기숙제 유치원은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논쟁 또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진정으로 아이들의 발전에 유리한 운영방식을 강구하는 것이다. **교육**



독일 학제에서의 낙제

글 / 장은희 (베를린 통신원, h0444gu2@rz.hu-berlin.de)

독일 학교에서는 이전부터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은 같은 학년을 한번 더 반복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보통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구별된다.

이와 같은 낙제 제도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학교 형태에서 시행되고 있다.

모든 아이들은 독일기본법에 따라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독일에도 당연히 의무 교육이 존재한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한국에서와 달리 1학년에서부터 9학년까지 학비가 전혀 없다. 다만 독일에는 2학년으로 올라갈 때부터 낙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독일 교육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제한을 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한 학생이 게을러 배우지 않거나 학습 능력의 한계 때문에 다른 동료 학생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똑같은 학년을 반복해야만 하거나 초등학교 이후 5학년부터는 다른 형태의 학교로 옮겨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평균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한 학년의 과정을 한번 더 반복해야 한다. 또한 5학년부터 시작되는 김나지움(Gymnasium)으로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한 학년을 반복하거나 레알슐레(Realschule)나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로 옮겨가야 한다.

이와 같은 낙제의 위험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이 선택한 학교 형태가 학생의 능력에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한 학년이 두 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름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 첫 학기가 끝나는 겨울에 학생들은 그 학년의 중간 성적표를 받게 된다. 이 중간 성적표를 근거로 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 학생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낙제될 위험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학생이 병에 걸려 수업 결손이 너무 많거나 다른 이유로 수업 장애를 겪게 되는 예외적 상황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학생이 원하면 부모들이 학교에 청구해 같은 학년을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에는 전 학년의 과정에서 대략 전체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한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다. 물론 진급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은 각 지방과 학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가리켜 공식적 표현으로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부른다. 이러한 학제를 통해 어떤 학생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미리 분류된다. 이와 같은 독일의 낙제 제도의 문제에 대해 이미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낙제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반대한다. 그렇지만 낙제 제도를 비판하고 학교 점수와 성적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낙제 - 결과 그리고 책임의 지정

낙제는 학생들에게 어떤 결과를 야

독일에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 가운데서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우울증, 학습 장애,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학생들은 낙제를 자신들이 어떤 일을 성취해내지 못했고, 따라서 자신을 불신해야 할 징표라고 느낀다.



기하는가? 대중 매체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 학생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을 예상할 수 있다.

독일에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 가운데서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우울증, 학습 장애,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학생들은 낙제를 자신들이 어떤 일을 성취해내지 못했고, 따라서 자신을 불신해야 할 징표라고 느낀다. 낙제를 한 학생은 낯선 환경 속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과외 수업과 부모의 후원 등 학교 외의 도움을 통해 노력을 해도 학교에서 성과가 없으면 용기를 잃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김나지움으로 진학한 학생 중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레알슐레나 하우스프트슐레로 전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그 학생들은 자신들을 받아 줄 학교를 찾아야 한다. 대개의 경우 학습지진아 학급에서 자리를 얻을 때까지 여러 학교로 다리품을 팔아야 하고 여러 번 거절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도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선생님들, 낯선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 적응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자 또는 외톨이로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좌절을 겪게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의 욕심이 원인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학생 스스로가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올바른 상담을 하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독일에는 초등학교가 4학년까지이며 초등학교를 마칠 때 선생님이 학생에게 알맞은 학교를 추천한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일 수 있지만, 대개 4학년 말에 상급학교로 가야 될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의 추천'이 학부모가 실제로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신뢰성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진급이 학생의 성적뿐 아니라, 교수·학습 구조(제도상의 조건)와 학습 태도에도 달려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술적인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낙제는 성적이 오를 수 있도록 학생들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에 대한 두려움만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독일에는 낙제가 인지·감정·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경험에 바탕을 둔 조사 결과들이 거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떻게 낙제를 이성적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대안적인 해결책을 피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교육학적으로 상세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대안 : 통합 학교와 발도르프 학교

같은 학년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 학교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벗어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대안 학교로서 통합 학교와 발도르프 학교라는 두 가지 학교 형태를 들 수 있다.

통합 학교는 김나지움, 레알슐레 그리고 하우프트슐레라는 세 가지 학교 형태를 통합한 것이며, 이 학교의 원칙은 '선발보다 장려'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김나지움 과정에서 학습을 따라가지 못할 때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년을 반복하지 않고도 학교 내에서 다른 학교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독일

에서는 이미 이런 통합 학교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통합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어떤 학교 형태가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학년에서 졸업을 하고 싶은지 10학년까지 여유를 주게 됨으로써 잘못된 결정이 시간적으로 뒤로 미루어진다. 통합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때 그때 적절한 학교 형태에 통합될 수 있는 시·공간적 여지가 있다.

통합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실패자'들이 '낙제'의 두려움없이 새로운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시 실패하지 않고 자신감과 학습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학자들은 통합학교 학생들이 세 형태로 분리된 다른 학교 제도에 다니는 같은 학생들보다 학교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아마도 학생들을 구별하려는 노력보다 장려하고자 하는 노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낙제를 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학교는 발도르프 학교이다. 사립 학교인 발도르프 학교는 부분적으로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헌법에 따르면 다른 국립 학교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다. 발도르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12년을 낙제 없이 졸업하게 된다. 발도르프 학교에는 선발 과정도 없고 아울러 통상적인 평점 제도도 폐지되었다. 이 학교의 성적표에는 각 과목마다 학생의 특징, 능력, 발전, 소질과 노력이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발도르프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독일 연방의 각 주에서 통용되는 규칙을 따라 아비투어나 중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는다.

비교 기사

독일 학제의 능력을 개선하려면 앞으로 전문가들과 교육자들의 제안을 참고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각기 다른 발육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기에 기본적인 교육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사고를 버려야 할 것이다. 만약 아이들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각자의 발육 상태에 맞추어 입학하게 된다면(그렇게 되면 아마 처음 학교에 들어갈 때 2~3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낙제는 불필요할 것이다.

‘모두에게 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주어야 한다’라는 모토에 따라 교수법과 방법론에서 동일한 나이의 아이들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는 환상을 버려야만 한다. 또는 각 아이들의 학습 속도와 능력에 따라 기본 교과 과정과 보완 교과 과정으로 나누어 배우게 하면 역시 낙제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매년 낙제로 인해 평균 이삼십 억 마르크(약 2조 4천억 내지 3조 6천억)라는 엄청난 액수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낙제를 폐지함으로써

이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작은 학급을 만들거나 더 좋은 교사 양성 등에 투자해 학생들의 반복 학습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 비교 조사에 눈길을 돌려보면, 특정한 목표에 따라 올바른 시기에 맞추어 학생들을 장려할 수 있는 조치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독일 학제의 효율을 전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가능성은 아주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영국의 교육민영화 실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글 / 하태욱 (런던 통신원, tae.ha@blueyonder.co.uk)

지난 6월 7일에 실시되었던 선거에서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둬으로써 토니 블레어 정부는 2기 집권에 성공하게 되었다. 교육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선거의 승리는 그 동안 실시해왔던 학업성취도 진작을 위한 각종 지원책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첫 집권당시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정책들을 야심차게 발표하고, 각 단위 학교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가혹하기까지 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견인해냈던 블레어 정부는 초등학교들이 이루어 낸 일정 정도의 성취를 등에 업고 2기 집권기간을 통해 중등학교에 대한 정책들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선거유세기간 동안 밝혀 왔다.

블레어가 집권 초기 주창했던 '제3의 길' 이 시사하듯 1기의 교육정책은 사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투자를 증액하는 한편, 개별화

교 간의 경쟁을 통해 하향 평준화된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통적인 좌파 정당의 이념에 굳이 얽매이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를 끌어들이서 교육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태도였다.

사기업의 투자를 교육에 끌어들이려는 첫 번째 시도는 가장 고전적인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황색 타블로이드 신문 썬(Sun)이 제공하는 학급 비치용 책에서부터 대형 슈퍼체인 테스코(Tesco)가 제공하는 컴퓨터, 나이키(Nike)가 설립한 축구강습회까지, 이제 교육은 더 이상 사기업들을 재정-시설 보충의 근원으로 삼는데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들이 이 모든 '기부'를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할리 없는 법, 모든 기부 품목에는 이를 제공한 기업체의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기 마련이다. 대규모의 기업체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잠재적 고객인 아이들의 인

식에 자사 상표를 분명하게 박아 넣는 한편, 현재의 고객인 부모들까지 확보하려는 것이다. 영국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강자인 NTL의 홍보담당 로버트 헐헤드 씨는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이다. 우리는 시민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좋은 기업으로써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하는 행위를 경건한 척 탈을 쓴 채로 은밀한 관측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당당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 영국의 학교들에 각종 통신망을 깔아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로얄 스코틀랜드 은행(Royal Bank of Scotland)은 최근 4,000명의 인력을 교육파트에 배치시켰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각급 중등학교로 파견되어 이 은행이 제공하는 교육용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정교과과정에 포함된 개인재정관리 부분 학습을 돕게 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각급 학

교의 교장들이나 교사들은 이렇듯 무료로 제공되는 각종 혜택들을 굳이 마다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런던 동쪽에 위치한 해크니의 한 교장은 이런 혜택들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기업체의 무료 제공품들의 상당수가 너무나 상업적이어서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사실 이 정도는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앞서도 밝힌 것처럼 '고전적인' 방식에 속한다.

좀 더 본격적인 교육과 사기업간의 손잡기는 교육특구(Education Action Zone)를 비롯한 각종 정책들에서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용어인 교육특구는 블레어 정부의 1기 집권 당시 가장 야심적으로 밀어붙였던 교육 정책 중의 하나였다. 교육특구란 그야말로 한 지역의 학교들을 묶은 '특별한' 구역으로 한 교육특구에는 일반적으로 중등학교 2~3개와 이를 보조하는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대략 20개 정도의 학교가 묶이게 된다.

지방교육청이나 기업체, 지역 단체의 대표 등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체들이 교육 고용성에 지원하여 허가를 얻으면 일단 교육특구가 이루어지는 셈이니 우선 갖가지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특구에 소속된 학교들은 지방교육청의 입김을 벗어나 그 특구를 운영하는 '특구 운영회의(Action Forum)'라는 기구의 결정사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해당 지역의 기업가, 지방교육청 관계자, 학교운영위원, 교사, 그리고 지역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이 운영회의는 특구에 소속된 20여 개 학교에 대한 운영 사항을 결정

하는 기관이 된다. 각 특구 운영회의의 결정에 따라 여기에 소속된 학교들은 재량대로 교사의 월급을 책정할 수도, 국정교과와 관계없는 내용을 가르칠 수도, 자유롭게 예



국가교육과정이 법제화되지 불과 10여 년이 조금 넘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국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보다는 지방교육청, 단위 학교, 교장, 교사의 자율권이 크게 존중받는 측면이 강했다.

산을 편성해서 쓸 수도 있다. 또한 이 특구 운영회의에서는 프로젝트 책임자를 채용하여 각종 대외업무 및 학교간 정보교환, 학교 운영방식의 연구와 채택 등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 교육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내놓은 연간 25만 파운드(약 5억)의 지원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75만 파운드를 기반으로,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재정적으로 밀어준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물론 조건은 단 하나, 가정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지역의 성취도가 형편없는 아이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라는 것이다. 주로 노동자 계급들이 모여 사는, 여러 모로 조건이 취약한 동네에 여러 가지 정책을 써 봤지만 학업 성취도가 전혀 높아지지 않자 나름대로 내놓은 특단의 조치였다. 사기업을 공교육에 끌어들이고, 학교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풀어 줌으로써 노동자 계층에게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복안이었다. 이 정책이 성공인가 실패인가 판별하는데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정책을 도입한 초등학교의 대다수가 일정정도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교육특구에 참여할 기업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지방교육청의 통제로

부터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지방교육청에 의해 주도되는 모순을 보이며, 중등학교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 앞으로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어쨌든 블레어 정부는 이 교육특구가 거둔 일정 정도의 성취를 발판 삼아 지난해 말부터 더욱 본격적인 사기업의 교육 참여를 기획·실행해왔다. 교육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단위학교, 심지어는 지방교육청의 경영을 위탁하는 정책을 마련했던 것이다. 교육특구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도심지역의 저소득층 자녀가 다니는 학교들과 그곳의 지방교육청이 그 일차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런던 동쪽의 헤크니 지역은 노동자들과 이민자들이 몰려 사는 대표적인 저소득 지역으로 이곳 학교들의 학업성취도 및 경영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이곳의 지방교육청은 이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인 노드 앵글리아(Nord Anglia)로 하여금 소속 학교들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은 한편, 이 교육청에 소속된 한 학교는 또 다른 업체인 CfBT로 하여금 경영을 맡김으로써 새 출발에 나섰다.

그 결과는 얼마나 긍정적일까? 최근에 나온 장학검열기관 OFSTED의 보고서에 따르면 블레어 정부는 이제 장밋빛 꿈을 꾸어도 될 듯하다. 9천만 파운드(약 1조 8천억 원)에 3년 계약을 맺고 런던의 한 지방교육청은 캠브리지 교육 서비스(Cambridge Education Services)라는 회사에 경영을 위탁한 이후 처음 받은 장학검열에서 '뚜렷한 목표와 긍정적 시각이 자리잡았다'는 매우 고무적인 평가를 받아 줬었다. 이곳 역시 1999년도 평가서에서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바 있다.

이 회사들이 어떻게 학교를 혹은 지방교육청을 경영하는가 살펴보자.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은 학교 경영의 모든 부분을 맡는다. 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면접하여 채용하는 것에서부터 봉급을 비롯한 모든 지출을 계획-집행-결산하며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기자재, 컴퓨터 설비, 학생들의 소모품까지 마련한다. 심지어는 커리큘럼의 마련과 교사들의 교수방법에까지 지침을 마련하기도 한다. 지난 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독려 아래 이미 스코트랜드를 제외한 영국 내 20여 개의 지방교육청들이 이 교육기업들과 이미 계약을 맺었거나 맺으려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 교육기업들의 위상은 증권시장에서 증명된다. 노드 앵글리아의 주가는 지난 두 달 동안 두 배가 뛰었다. 아직 이 업종에 뛰어든 기업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더 많은 지방교육청과 단위 학교들이 이 계획에 관심을 보일수록 그들이 창출해낼 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주가는 높아만 갈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런던의 한 학교만이 계약을 파기했을 뿐 점점 많은 단위학교들과 지방교육청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시장이 넓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시장이 5년 이내에 현재의 1억 6천만 파운드에서 5억 파운드 정도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무조건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교육의 마지막 선택이 될 것인가? 대답은 그다지 명쾌하지 못하다. 그 이유로 우선은 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현장의 분위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과정의 법제화되지 불과 10여 년이 조금 넘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국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보다는 지방교육청, 단위 학교, 교장, 교사의 자율권이 크게 존중받는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영국이 유럽에서 문해력과 수리력에 있어 최하위권을 맴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 이후, 영국의 교육정책은 평가와 경쟁을 기초로 한 학력증진책에 우선권이 부여되었다.

이 정책은 위에서도 지적했던 대로 일정정도의 학력수준 증진을 가져왔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자율권까지 박탈당해 주어진 내용만을 '전달'해야 하는 '단순노동'으로 전락한 교직에 대해 실망하고 조기 정년퇴임이나 전직을 희망하는 교사가 크게 늘어나게 되는 역효과를 발생시켰다. 이런 배경 아래 도입되는 사교육기업의 학교경영은 교사들로 하여금 회사가 요구하는 지식만을 기계적으로 전달해야

고 있다. 과연 이것이 그만큼의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과연 그들이 학업성취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이 의문이지만, 그것을 누가 평가할 것인가? 모두들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일반적인 사업들에 비해 이윤이 적게 남는 장사라는 데에도 또 다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윤이 적은 만큼 한 회사는 더 많은 학교나 지방교육청을 확보하려고 들테고, 준비 없이 뛰어든 학교경영은 그 만큼의 부실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사회 중심체인 학교 경영에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뛰어드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블레어 정부 2기 집권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전문학교(Special School)의 경우 역시 그 재원 마련을 일반 사기업에 기대고 있다. 따라서 영국 교육에 있어서 기업과의 협력 및 기업의 교육경영 참여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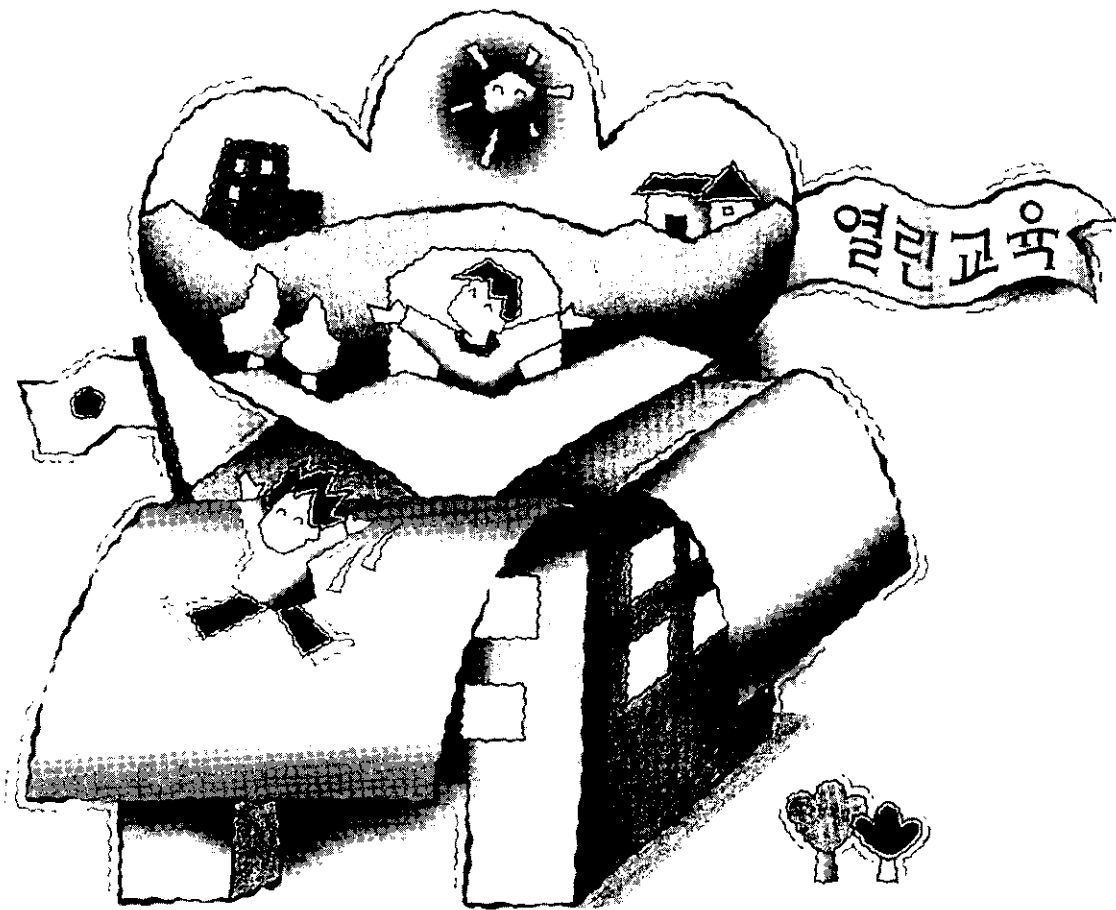
지지와 반대가 극단으로 갈리는 가운데 블레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진행되어가고 있는 이 사업 끌어들이기는 지금까지는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이 종국에 어떤 결과를 보여 줄는지, 우리도 눈여겨 살펴봐야 할 대목이 될 것이다. **교육**



한다는 박탈감을 크게 맛보게 했다. 전국 교장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의 대표인 데이비드 하트(David Hart)는 다음과 같은 말로 교단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대다수의 교장들이 그 회사들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여기

오사카의 아동살상사건과 일본의 '열린학교운동'의 향방

글 / 이정미 (동경 통신원, cbu05400@pop06.odn.ne.jp)



오사카 아동살상사건의 충격

퇴근길에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마침내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나도 모르게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모를 알기

위해 석간 신문을 사들었다.

오사카 아동 살상사건의 대략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8일 오전 10시 15분경 오사카(大阪)교육대학부속 이케다(池田)소학교에 칼

을 든 남자가 학교 1층에 자리잡고 있는 1, 2학년 교실에 침입하여 도망가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칼을 휘두르는 난동을 부려 1, 2학년 학생 8명이 사망하고 교사를 포함한 15명

이 중경상을 입었다. 범인은 정신안정제 10회분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환각증상을 일으킨 채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사회가 물질적 풍요와는 대비적으로 정신적 궁핍의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시되는 현상이다. 일본에서도 예외 없이 물질적 풍요와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눈에 띄고 있으며, 10년간 계속되는 경제불황은 젊은이들의 이러한 경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하다는 '안전 신화'를 자부해 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17세 소년의 버스 납치 등의 무차별 살상사건, 전철 안에서의 작은 트러블로 인한 살상사건 등 심각한 범죄가 계속되면서 안전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미국 학교에서의 총기난사 사건이 일본에 전해질 때마다 어디까지나 남의 나라 일로만 생각하면서 일본사회에서 학교는 아직 안전구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후의 안전구역이라고 믿고 있었던 학교에서 무차별 살상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일본의 한 소학교에서의 아동의 안전 문제

한 아이를 소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 달에도 몇 번이고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변질자가 나타났으니 주의하라는 식의 학교통신문이 집으로 보내져 온다. 대개는 인근지역의 사건이지만 소속되어 있는 소학교구에서 발생하는 때도 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측은 '큰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너무 늦는다'는 방침 아래 작은 문제도 부모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꼭 근처에 사는 친구와 같이 돌아갈 것,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할 것, 집에 돌아간 후에도 혼자서는 밖에서 놀지 말 것 등의 주의를 매일처럼 듣는다. 아이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을 우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지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면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오히려 그 반대로 신록이 우거지고 가족이 즐겁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시내 여기저기에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주거환경으로서는 무척 살기 좋은 지역이다. 또한 이 곳 쓰

쿠바학원 도시는 1970년대 중반 신구상대학인 쓰쿠바 대학이 들어서고 국내의 주요 국립연구소가 차례차례 들어서서 일본의 두뇌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항상 마음 한 편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터라 이번 오사가 아동살상사건은 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일본의 '열린학교운동'의 도입

한편으로 일본의 교육계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 주도의 '열린학교운동'을 추진해 왔다. 그 주된 계기가 된 것이 당시 나카소네 수상의 자문기관이었던 임시교육심의회가 1987년에 제출한 '임시교육심의회 제3차 답신'에서 '열린학교'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부터이다. 답신에서는 '종래의 "열린학교"는 학교시설의 지역사회에의 개방이라는 비교적 좁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쉬웠다. 그러나 앞으로의 "열린학교"는 단지 학교시설의 개방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학교시설의 사회교육사업 등에서의 개방, 학교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지역·보호자 의견의 반영 등을 비롯한 열린 학교 경영을 위한 노력, 학교의 인텔리전트화의 추진 등 학교와 그 밖의 교육·연구·문화·스포츠 시설과의 연계, 자연교실, 자연학교 등의 교육네트워크, 국제적으로 열린학교 등을 폭넓게 전개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정리하면 우선 첫 번째로 학교의 물리적 조건에 있어서 학교를 지역 사회에 개방하는 의미에서 학교의 담을 없애고, 학교내부에 있어서는 오픈스페이스 등을 설치하여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건축상의 아이디어적 측면을 의미하며, 이런 학교시설을 사회교육이나 지역 활동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보호자나 지역주민과의 의견교환에 의해 상호관계를 긴밀히 하고 지역의 교육력을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나 가정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즉 '열린학교운동'은 제1단계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가는 벡터, 제2단계로는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에 참가해 들어오는 벡터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 '열린학교운동'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이러한 '열린학교운동'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임시교육심의회 답신이 꽤 선구적인 교육개혁안이었음을 나타내준다. 그리고 이 운동은 1990년대를 거쳐 세기가 바뀐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본 교육개혁의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였다. 단 '열린학교운동'에 의한 개혁의 속도는 아주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제1단계의 학교건축의 오픈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학교의 담과 교문은 없애지

고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학교가 늘어났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복도와 교실의 벽을 없애고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는 등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학교 건축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2단계의 실천은 그다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학교의 폐쇄성이 계속 지적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으나, 1998년 중앙교육심의회가 답신 '앞으로의 지방 교육행정에 대하여'에서 '학교평의회'를 제안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열린학교운동'과 학교평의회

2000년 4월 1일부터 지역주민의 학교운영에의 참가 시스템인 '학교평의회'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학교교육법시행규칙(2000년 1월 개정)은 학교운영에 관한 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전제로 하면서, 학교운영에 관해 부모나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폭넓게 얻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에 평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설치자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학교평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학교평의회는 교장의 요청에 응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③ 학교평의회는 당해 학교의 교

직원 이외인 자로 교육에 관한 이해 및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교장의 추천에 따라 설치자가 위촉한다.

위와 같은 '학교평의회제'는 다른 나라의 학교참가제도에 비하면 아직도 부모와 지역주민의 참가에 대해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학교평의회'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교장에게 학교운영에 관한 조언을 주는 것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교육난국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부모와 지역주민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인식해 가면서 어떻게 협력체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궁리하고 있다. 현재 풀뿌리 운동처럼 여러 형태의 참가방식을 일선의 학교가 시도하고 있으며, 국가의 교육개혁정책이나 법규의 규정보다 훨씬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도 있다. 또한 이러한 실천의 뒤에는 부모나 지역주민 편에서 학교에만 자녀 교육을 맡길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있었으며, '자원봉사'라는 형태로 참여가 활발해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오사카 아동실상사건에 대한 각 학교의 반응

이와 같이 십여 년의 세월을 통해 무르익은 '열린학교운동', 특히 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하려는 의식이 높아지고 학교에서도 지금까지의 폐쇄적이었던 분위기를 일신하고 외부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바로 오사카 이동살상사건이다. 범인이 자유롭게 학교를 침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의 담을 허물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문턱을 낮춘 '열린학교운동'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발생이후 신문, 매스컴은 학교에서의 아동·학생들의 안전문제에 관해서 연일 대서특필로 보도하였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6월 15일 시점에서 전국의 국립학교(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59학교 중 112학교가 사건 후에 경비원을 배치했다고 한다.

간토 지방의 국립대학 부속 소학교 18학교의 양케이트 결과(NHK 조사 6월15일)에 따르면 사건발생 후 ① 방문자의 확인 13학교 (7학교, 이하 괄호 안은 사건 전) ② 학교 순회 13학교 (11학교) ③ 교문폐쇄 11학교 (1학교) ④ 경비원 배치 11학교 (1학교) ⑤ 감시 카메라의 설치 5학교 (2학교)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간사이 지방의 313의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NHK 조사 6월 15일)에 따르면 대책을 취한 곳이 92%를 차지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방문자의 확인 체제의 재검토 (59%) ② 낮에는 교문 폐문

(17%) ③ 감시 카메라의 설치 (5%) ④ PTA에 협력요청 (56%) ⑤ 경찰에 순회 요청 (53%) ⑥ 교사와, 자원봉사자가 순회 (43%) 등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조사는 尾木直樹 '열린학교와 안전을 생각한다' ② -열어서 보호하는 방향으로-'주간교육자료' 718호 에서 인용)

열린학교운동이 흔들리고 있다

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대책으로 낮에 교문을 폐쇄하고 학교방문자를 확인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유사한 사건의 연쇄적인 발생을 막고 아동·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해진 것이지만 이로써 학교의 문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실제로 학교의 학부모회인 PTA의 역원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돕는 활동을 하기 위해 이전에는 자유롭게 학교의 PTA실을 드나들었으나 이제는 학교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신문이나 매스컴의 보도에서도 이제 막 활발해진 '열린학교운동'이 위축되고, 지역주민의 수업참관이나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서 도입된 시간)'의 성과를 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발표하는 공개연구수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학교의 안전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지역과 보호자에게 학교를 한층 더 개방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모와 지역의 자원봉사자가 일상적으로 학교의 교육실천에 참여하고 학교에 드나들어서 오히려 외부의 범죄자가 침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건발생 직후 아사히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린 것을 발견했다. '이번 사건으로 "열린학교운동"이 침체되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팀을 짜서 순회해서라도 그러한 범죄자가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학교를 지켜야 할 차례이다.' 이 기사 속에서 학교·지역주민·가정이 같이 힘을 합쳐 보다 나은 학교교육을 지향하려는 의욕을 발견할 수 있다. 뿌리내리고 싹트기 시작한 '열린학교운동'은 이러한 의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가속될 것 같다. **교육**

‘교육개발’ 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보냅니다!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의 담임선생님께 「교육개발」을 보냅니다.

▶ 한국교육개발에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자녀들의 담임교사, 오신 곳 조그마한 학교에 ‘교육개발’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 교육개발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신청자의 이름으로 기증됩니다.
- ▶ 7능구좌 종류는 1구좌 이상으로 자유로우며 1구좌(1년 정기구독료)는 2만 5천원입니다.
- ▶ 서점에서 날권 구입 가격은 4,500원입니다.
- ▶ 외진 곳이나 모교에 ‘교육개발’을 기증하시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 회비 납부처 (예금주: 한국교육개발원)
 - 농 협 369-01-010147
 - 외환은행 296-22-00296-3

▶ 문의처
137-791 서울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홍보출판팀
‘교육개발’ 편집실
TEL 02-3460-0235, 0411
FAX 02-3460-0151, 0116
E-mail : keditor@ns.kedi.re.kr
‘교육개발 보내기 운동 가입신청서’는 엽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기입 후 팩스나 우편, 통신으로 우송 요망)

■ ‘교육개발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 | | | | |
|--------|---------|--------|---------|--------|--------|
| 김숙희(2) | 곽병선(20) | 고민훈(2) | 김유태(1) | 김정래(5) | 김정원(1) |
| 김정자(1) | 김창환(3) | 권수경(1) | 류방란(4) | 박성주(4) | 서혜성(2) |
| 서한숙(1) | 손용택(1) | 오송재(1) | 우수진(2) | 유효순(1) | 윤여각(3) |
| 윤인철(3) | 예철해(2) | 이규향(2) | 이경희(5) | 이순희(5) | 이신애(3) |
| 이윤미(3) | 이은숙(1) | 이은영(1) | 이정규(1) | 이현주(4) | 임소현(3) |
| 정인식(2) | 전인식(1) | 정수현(2) | 정영순(10) | 정재기(5) | 정종진(1) |
| 정태희(1) | 지기섭(1) | 천성문(2) | 채경은(5) | 최돈형(3) | 한유경(4) |
| 홍영란(1) | | | | | |

()안은 부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사의 역할

글 / 김진성 (구정고등학교 교장, moolae@hitel.net)

21 세기를 맞아 세계 각국은 교육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것은 단순한 학교교육의 차원을 넘어 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하여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은 교육부와 노동부를 교육고용부로 통합하고, 일본의 종래의 문부성에 과학기술청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교육 개혁 작업부터 시작했다고 외신이 전하고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01년도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조사 대상 49개국 중에서 32위로 발표되었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은 41위, 중·고교는 42위, 경제계 요구에 대한 교육 수준은 44위, GNP 대비 교육비 지출은 39위로 49개국 중 바닥권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부존 자원이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길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경제 성장의 과실 배분에 있어서는 교육 부문을 소외시켰다.

이제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됨으로써 학교교육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의 정착·개발과 기획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차관보 제도와 인적자원정책국이 신설되었으므로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인적자원개발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종래의 교육 기능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인적자원개발이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측면보다는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교육이라고 하면 국가나 사회



우리 나라가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길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경제 성장의 과실 배분에 있어서는 교육 부문을 소외시켰다. 이제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의 정착·개발과 기획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의 필요성보다 개인의 성장·발달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은 결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큰 부담이었다. 국가는 그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만 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란 골치 아픈 존재였다. 맬더스의 인구론을 보면 “식량은 산술 평균으로 증가하나 인구는 기하 급수로 증가한다”고 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어떻게 하면 그 거대한 인구를 먹여 살리느냐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인구가 곧 자산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인구가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구가 국가의 부담이 되느냐, 자산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여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흔히 더 큰 것을 추구하다가 귀중한 작은 것을 놓쳐 버리는 사례가 있음을 자주 경험한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뛰다가 학교교육이라는 소중한 것을 외면하거나 등한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 자치라는 이름으로 학교교육은 시·도 교육청 소관 사항이라 하면서 이양해 버리고,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떠넘기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자치와 학교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넘길 것은 안 넘기고, 안 넘길 것을 넘기는데 있다.

예컨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 자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앙 단위의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장학 지도를 없애 버렸다. 우리 나라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처럼 지방마다 교육 과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리 나라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챙기고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도 교육청에 넘겨 줄 것은 이러한 것보다 예산, 인사권 같은 것이라고 본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다. 교육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교

육인적자원부에 따지지 교육감을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기획업무 뿐만 아니라 이를 추진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존재해야 한다. 종래의 장학지도가 부활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실업고 취업 지도반 교사들의 이야기다. 졸업생 취업을 위해 기업체를 방문하면 이구동성으로 “기술은 우리가 다시 가르칠테니 인간으로서의 기본 교육만 철저히 해 보내 주십시오. 학교 성적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측은 학교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의 우리 나라의 실업 교육의 모습을 보여 주는 단적인 하나의 사례라 할 것이다. 공고·상고·전산고의 실업교육에 대한 기업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실업고에는 자기의 능력과 소질을 살려보겠다는 뜻으로 입학한 학생이 거의 없다 보니 기능도 위

자원의 질을 높이려면 그 출발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학교교육에 대한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흔히 오늘의 학교 붕괴 현상을 두고 교사들의 무관심, 무능력, 태만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교사들의 그러한 경향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교육여건을 시정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돌을 던질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교사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언제까지 남을 탓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된 것을 계기로 교사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새롭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국제화 사회, 고령화 사회, 정보화 사회다. 국제 경쟁력에 뒤지지 않는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자국의 실력만 추구해서는 살아가기 어렵다. 지구촌 사회에 적응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우리 교육의 취약점은 창의력과 공동체 의식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수재, 천재들이 법을 전공해서 정치 지도자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행정관료가 되고, 학자가 되었지만 외국인이 보는 한국인의 준법의식을 최하위 수준이다. 수재, 천재를 경제학자, 기업인 경제 관료로 만들어 냈으나 국제적 신인도는 말이 아니다.

떨어지는데다가 책임감, 성실성, 협동심도 약하다.

오늘날 실업고가 갖고 있는 설비 시설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시설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19세기 시설에 매달리다 사회에 나가 기업체에서 21세기 첨단 시설을 만나게 된다. 이런 구조 아래의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그런 교육 시설 여건을 갖추지 못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기업에 인력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전문대학은 실업고의 재탕이라는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대는 학력 인플레이 현상의 하나라는 것이다. 취업 연령만 늦어져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실업고에 없는 교과, 실업고에서 할 수 없는 교과를 특성화 하는 전문대학 육성이 필요하다. 국가의 인적

출도 알아야 한다. 글로벌 에터켓을 지키는 국제 시민으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21세기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의미한다. 세대간의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고령화 체험 학습’을 통해 이것이 내일의 내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경로효친을 인륜의 문제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내 자신의 일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다. 지난 날의 산업사회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시대였다. 지금의 정보화 사회는 인간성 파괴의 시대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남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갈등을 겪으면서 이를 이겨내고, 인내심도 기르고, 자립심도 키우는 것이다. 오늘의 청소년은 어려서 오직 기계하고만 놀 뿐 인간과 인간이 피부를 맞닿으면서 노는 기회가 별로 없다. 게임기, 놀이기계, 계산기, 오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 등 문화 기구와 함께 생활하다보니 남

과 더불어 함께 지내는 생활 자체가 익숙치 못하고 혼자 외로움을 느낀다. 남과 함께 어울려 놀아보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 공동체 의식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이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체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의 민주화'란 깃발 아래 많은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산성화된 토양이 어느 정도 바뀐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틈새에 교사들의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 풍토가 서서히 조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리라. 이제 민주화 못지 않게 능률화, 전문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우리 교육의 취약점은 창의력과 공동체 의식을 자라나는 세대에 게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수재, 천재들이 법을 전공해서 정치 지도자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행정관료가 되고, 학자가 되었지만 외국인이 보는 한국인의 준법 의식은 최하위 수준이다. 수재, 천재를 경제학자, 기업인 경제 관료로 만들어 냈으나 국제적 신인도는 말이 아니다.



문제의 뿌리를 캐보면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교사들은 그들에게 창의력을 심어주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 협동심, 사명의식, 국제 예절, 위기 관리 능력을 심어주지 못했다. 과외에 길들여지고 타율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있는 것은 극히 불행한 일이다.

지금 우리들의 경쟁 대상자는 나라 밖에 있는데 우리들은 이웃 학교와의 입시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학교 현장에 토론 문화, 준법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모든 교사들이 모든 교과를 통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요구하는 책무성이라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문제가 하루 빨리 해소되도록 선생님들이 힘써야 한다. 오늘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학생들보다 앞서가거나 최소한 같이 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격과 새로운 출발이 자칫하면 학교교육을 소홀히 할 수도 있겠다는 노파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업무가 확대되다 보면 기존 업무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문제 해결에 재정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데 비경제부처의 장들이 모여 인적자원개발 문제를 폭 넓게 논의한다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또 인사권을 장악치 못한 교육부총리가 부처 이기주의로 유명한 중앙 행정조직을 장악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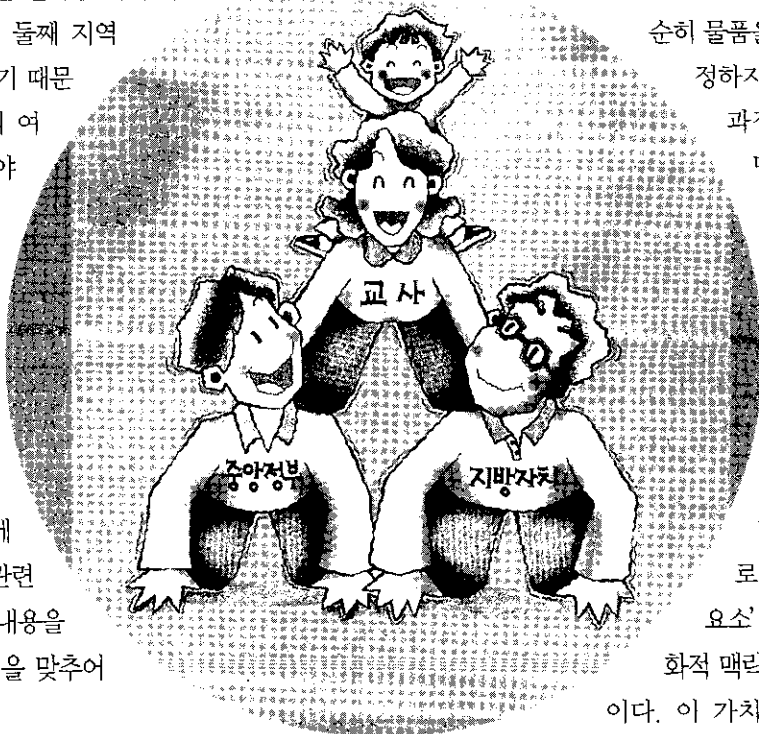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위에서 흐르는 물이 순리를 타고 내려와야 하겠기에 한 말씀 드린다. **교육**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략

글 / 윤여각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전문위원, ykyuned@yahoo.co.kr)

I. 들어가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문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학계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첫째 어떤 정책이든 그것은 결국은 지역 차원에서 구현되어야 하고, 둘째 지역마다 여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셋째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없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윤여각, 2001a : 25). 여기서는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립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그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영의 맥락에서 발전된 개념이라는 점 때문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문제로 수렴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인적자원개발이 논의되는 맥락은 기업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을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으로서의 인간'으로 규정하고, 생산을 단순히 물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한정하지 않고 '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면, 국가인적자원개발은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가치를 산출하는 인간의 개발이 된다. 여기서 인간을 개발한다는 것은 인간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요소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요소'는 사회 경제적 여건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리 규정되는 것이다. 이 가치 있는 요소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OECD, 2001b : 18).

II. 지역인적자원 개발의 의미

김태기(2000 : 90-91)는 [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 전략]을 구상하면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첫째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둘째 생산적 복지, 셋째 국가의 혁신, 넷째 정부의 행·재정 혁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았다. 이처럼 국가인적자원개발은 국가 전체의 운영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이 경영학 또는 기업경

이렇게 보면, 지역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역의 모든 부문에서 가치산출 과정에 참여하는 인간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토대로 지역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경쟁력을 토대로 지역은 발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발전을 기반으로 국가는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인적자원개발에서 지역인적자원개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역의 모든 부문에서 가치산출 과정에 참여하는 인간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토대로 지역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경쟁력을 토대로 지역은 발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발전을 기반으로 국가는 발전할 수 있다.

받은 필수적인 요청사항이며,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선언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지역은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교육, 학문, 종교 등 모든 부문이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작동하는 하나의 체제이고, 다른 지역과 더 나아가 세계와 교류하는 하나의 체제이다. 이 체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이 체제 속에는 그들이 활동하는 수많은 장들이 있다.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개발한다는 것이고, 이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요소들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들이 활동하는 장이 최적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서 그 사업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가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지방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여건을 갖추는 것도 논의가 될 수는 없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이든 지역인적자원개발이든 인적자원개발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양성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향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이다. 전자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직업을 가지기 이전에 미래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개발하는 것이고, 후자는 직업을 가진 이후에 새롭게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후자는 특히 OECD와 UNESCO를 중심으로 계속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최돈민·이해주·윤여각, 1998). 또한, 후자는 '인적자원관리'라는 개념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여기서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의 배치와 활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적자원의 배치와 활용은 향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인적자원을 배치하되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적소

에 배치하고, 인적자원을 활용하되 그 요소들을 좀더 개발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인적자원관리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윤여각, 2001a : 5).

이렇게 보면,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의 구성원들이 직업세계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정책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에서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역 구성원이지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방정부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며, 관련 주체들과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최재송, 2001 : 81). 사실, 이것은 지방정부의 기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논의는 결국은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III.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

우리 나라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 방향과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2001)에서도 '지역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방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이상일(2000)은 이에 앞서 실리콘 밸리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임규진 등(2000)도 충청남도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참조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정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인적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하고, 둘째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반과 여건의 조성 없이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반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종합적 점검

지역인적자원개발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이전에도 지역에서는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 있었고, 이 활동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지역에서 인적자원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기초 통계정보에 대해 조사한다. 여기에는 지역의 인구분포, 교육훈련기관 현황과 취학(원)률, 직업과 직종 현황, 취업률과 실업률, 지역 구성원의 교육훈련 정도와 수준, 직업성숙도 등에 대한 통계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초 통계정보가 부실하다면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직무별 전문성 수준을 분석한다. 직업 내에는 다양한 직무들이 있다. 지역 구성원은 직업 내에서 다양한 직무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직무에 어떤 전문성 수준이 요구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직무별 전문성 수준에 대한 기초 자료가 없다면 지역인적자원개발은 구체성을 가지기 어렵다.

셋째,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을 분석한다. 지역 구성원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장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구성원이 교육훈련기관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직장으로 이행하게 되는가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교육훈련기관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직업세계에 적합한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도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직장의 교육훈련 지원실태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직장에서 구성원들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일차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규모로 직장에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는가도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직장 구성원의 역량 발휘와 증진을 위한 직장의 운영실태를 분석한다. 직장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직장 내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기관이나 단체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가 여기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직업별 직무별 인적자원의 경력개발 경로를 분석한다. 직업별 직무별로 인적자원이 어떤 경로를 거쳐 경력을 개발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면 개인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교육훈련기관들의 영역별 수준별 연계실태를 분석한다. 이것은 인적자원개발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차원에서 교육훈련기관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교육훈련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의 분담실태도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 실태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먼저 지역의 다양한 맥락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들이 어떻게 산출되고, 가공되고, 공유되는가를 분석한다. 그리고,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그러한 정보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는가를 분석한다.

열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행정 지원실태를 분석한다. 먼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행정 차원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직장, 교육훈련기관, 연구소, 지방정부 등 인적자원개발 관련 조직들의 동반자 관계를 분석한다.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은 어느 한 주체가 전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동반자 관계를 맺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참여해야만 지역 인적자원개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 가지 더 부연하면, 지역인적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면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국내·외 비교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지표의 활용을 통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평가체제 구축

지역인적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될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평가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특성화를 통한 전국화와 세계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은 국가,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작동하는 체제이다. 이미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고, 지구촌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바로 지역의 전국화이고 세계화이다. 한 지역이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역은 특성화를 통해 특성화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각 부문이 서로 연계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민관협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직장의 요구를 교육훈련과정에 반영하고 교육훈련결과를 직장에서 반영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양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동반자 관계에 있는 다양한 민간조직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민간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관협력 아래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는 중

합계획에 따라 관련조직들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계획의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기관에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협동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후의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없다면 지역인적자원개발은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단계에서도 민간조직의 참여가 필요하다.

3.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반과 여건 조성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반과 여건의 조성 없이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지역 구성원이 쉽게 접근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하며, 흐름에 대한 파악과 전망이 가능하도록 누적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능력 중심의 관행을 형성해야 한다. 학력이나 학벌 보다는 지역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이 형성되지 않으면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셋째, 평생학습을 장려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평생학습에 대한 강조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구성원들의 인식이 갑자기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평생학습을 장려하고, 평생학습의 결과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때 평생학습은 촉진될 수 있다. 그 정책수단의 하나가 개인학습계좌제와 학습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1 : 29).

넷째,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논리적 필연은 지역을 평생학습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의 특수성이나 여건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이지만,
지역인적자원개발이 인적자원개발의 큰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의 구축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으며, 그 실태가 바로 평생학습사회이다(임규진 외, 2000 : 164; OECD, 2001a; 이병준, 2001 : 6).

IV. 나오며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을 단위로 한 인적자원개발이다. 이때 지역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이상일, 2001 : 29).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참여하되 세부적인 지침으로 인하여 오히려 인적자원 개발에 불필요한 규제가 수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윤여각, 2001b : 21). 또한, 중앙정부는 지역이 특성화 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하며, 전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의 특수성이나 여건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이지만, 지역인적자원개발이 인적자원개발의 큰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내용들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서도 여기에는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총론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그것이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각론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의미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는 양자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교육**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1).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
 김태기 외(2000). 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NHRD 비전과 추진전략 연구팀.
 윤여각(2001a).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비전, 목표, 과제: 종합적 검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워크숍 자료.
 윤여각(2001b).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모델과 방향'에 대한 토론.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지역 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방안.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이병준(2001).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모델과 방향 : 산업·고용·교육·문화의 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지역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방안.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이상일(2000). 실리콘 벨리의 인적자원개발. 한국노동연구원.
 이상일(2001). 인적자원개발 지역정보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지역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방안.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임규진 외(2000). 충청남도 인적자원개발·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최돈민·이해주·윤여각(1998).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열린교육체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재승(2001).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협력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역인적자원개발 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개발 제8차 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2001). 지역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방안.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지역인적자원개발 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개발 제8차 정책포럼 자료집.
 OECD(2001a).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OECD(2001b).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생식적 성에서 양성평등의 성으로

글 /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phj@ns.chedi.re.kr)

이 글은 학교 성교육에 대한 연재의 마지막회로서 우리나라의 성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앞서 살펴본 세 나라의 성교육 실태를 통해 우리의 학교 성교육에 시사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제안하였다. 「편집자 주」

학교 성교육의 위상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매매춘, 원조 교제 등과 같은 사건들이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청소년들의 성행동이나 성교육 수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해야 하는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건전한 성문화를 형성시켜 주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성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일찍부터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 줌으로써 오히려 성적 호기심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그릇된 성지식과 성적 표현이 담긴 각종 음란물과 영상 매체가 범람하는 환경에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성충동을 유발시켜 성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점차로 성은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 교육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 학교, 지역 사회가 연계적으로 협력하여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나 바람직한 태도를 일찍부터 길러주는 등 학교가 적극적인 성교육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성교육이 활성화된 미국, 영국 등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물론 성교육 실시와 관련된 체계적인 법적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다, 학교 현장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더욱 내실있는 학교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성교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서울시 교육연구원은 1983년 교사용 성교육자료를 발간하여 일선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앞서 교육부(당시 문교부)에서도 1983년에 교사용 성교육 지도서를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83년도에 개발된 성교육 지도서는 과거의 '순결' 교육만을 강조하던 성교육에 서구의 개방적인 성교육 영향을 받아들여 인간의 성장·발달에 따르는 성 현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취급한 첫 번째 자료였다. 그 후 1990년도에 교육부가 개발한 성교육 자료는 1983년에 개발된 성교육 지도서에 비해 성교육의 목표가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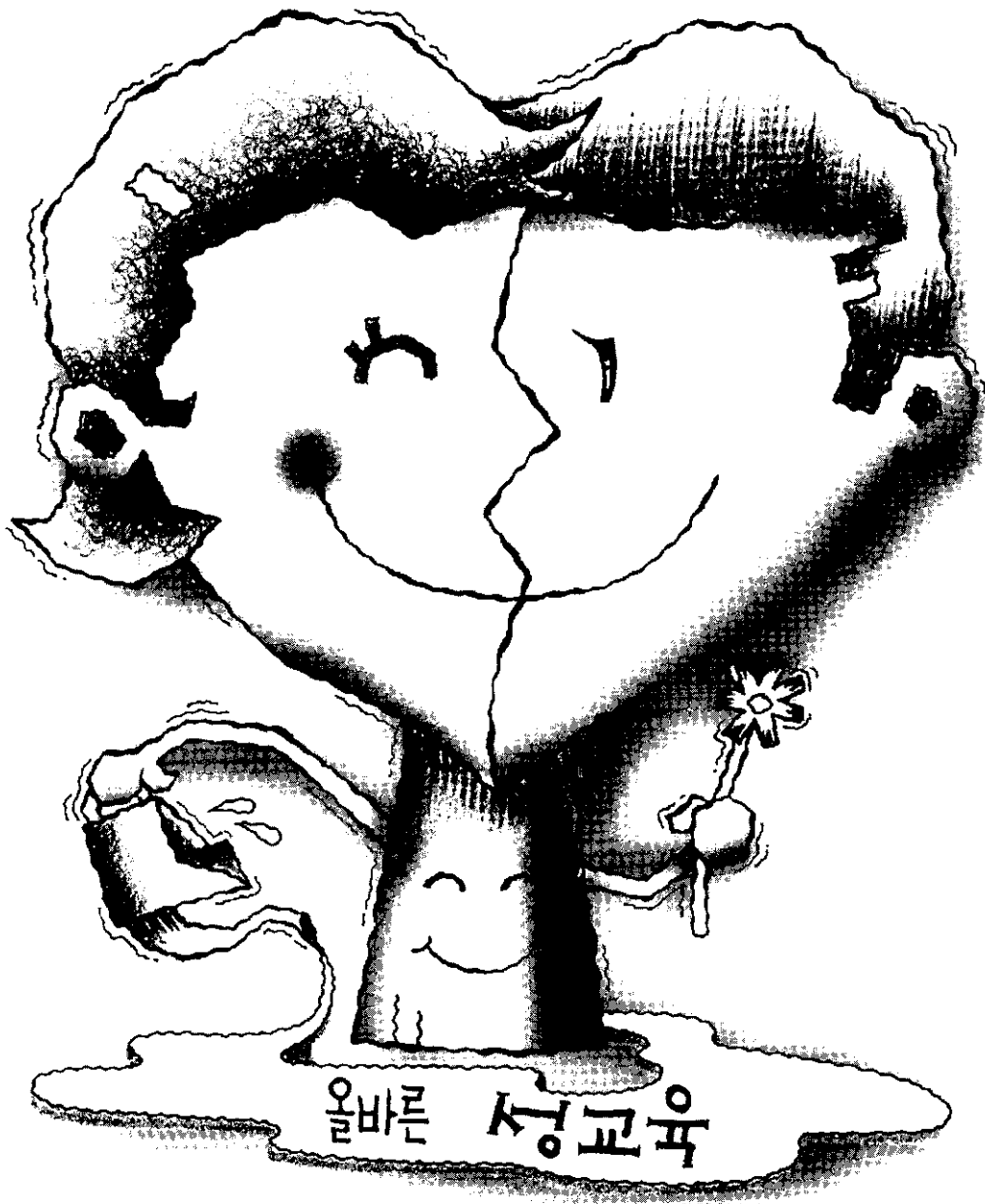
이와 함께 교육과정 속에서도 공식적으로 성교육이 다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성교육과 관련한 6, 7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기본지침을 보면, 성교육은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그리고 특별활동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들 시간 이외에 재량활동 중 창의적 재량 활동에서의 범교과 학습에서 성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학교 성교육은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교과목이나 특별활동, 결강 시간 등을 통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극히 피상적이고 비체계적인 성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2000년 학교 성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 간의 연계적이고 체계적인 틀 속에서 성교육 지도 지침 및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교 현장의 성교육 담당 교사 또는 관련 교과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 지도 지침 및 자료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과 활동은 법적, 행정적 체제가 마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정부 차원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





2000년에 개발된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용 성교육 지도 자료는 성에 관한 신체적, 생리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의 성역할과 사회적 정체감의 확립, 양성 평등적인 성의식의 확립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음으로써 성교육이 인간의 삶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에 이르기까지 학교현장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기틀을 마련한 첫 번째 시도로서 학교 성교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성교육의 목표의 내용

학교 성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2000년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간의 연계적인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된 성교육 지도 지침 및 지도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학교 성교육의 목표>

2000년에 개발된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용 성교육 지도 자료는 성에 관한 신체적, 생리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의 성역할과 사회적 정체감의 확립, 양성 평등적인 성의식의 확립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음으로써 성교육이 인간의 삶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지도자료는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성교육이란 '인간 존중, 남녀 평등의 정신에 기초하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 태도와 가치 등과 관련된 교육 활동'이라는 전제 하에 제작되었으며 학교급별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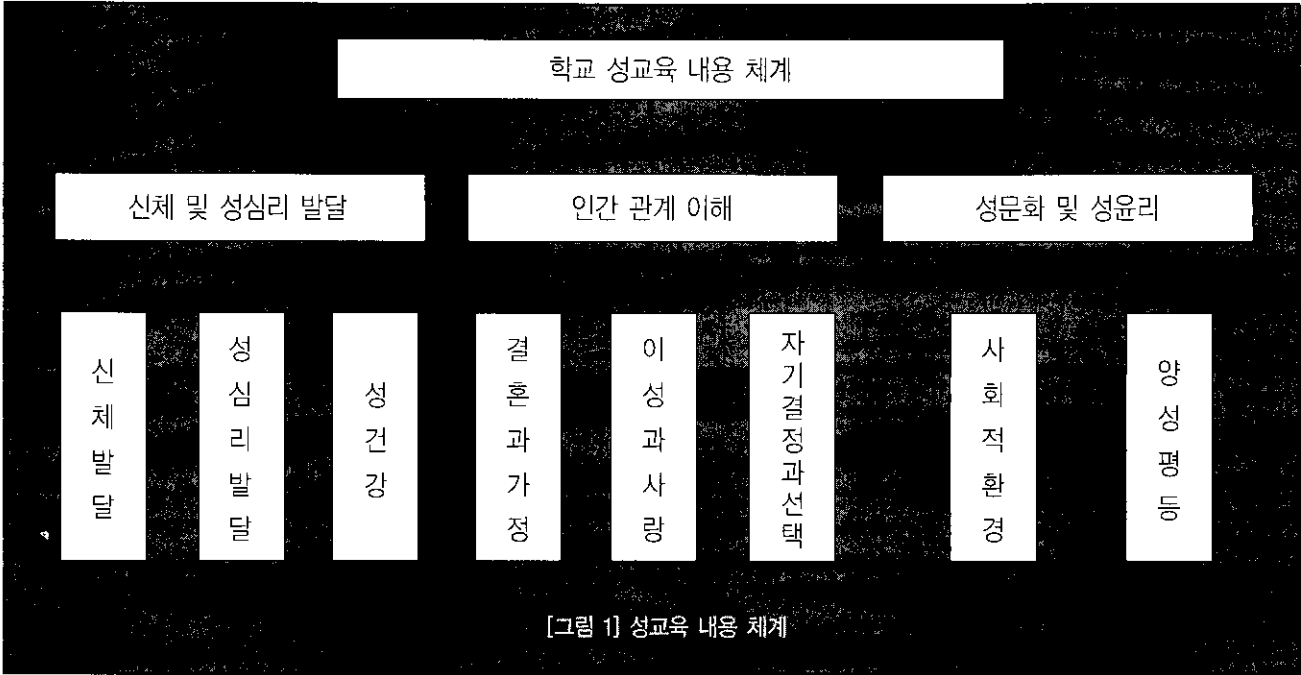
<표 1> 학교급별 성교육의 목표

학교급	기본 목표	세부 목표
초등학교 저학년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 남녀의 신체·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책임있는 성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하고 원만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 신체적·심리적 발달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신체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 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신체·심리 발달 영역). 2.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지니고 가족관계와 동성이나 이성 친구관계를 형성하면서 올바른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인간관계 이해). 3. 양성 평등적 성 역할의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성 정체성과 성 문화 및 성 윤리 의식을 형성하여 성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성문화 및 성윤리 영역).
초등학교 고학년	남녀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원만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며 양성 평등한 성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책임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 신체적·심리적 발달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기른다(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 2.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동성·이성)를 이루어 나가며, 올바른 의사 표현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인간관계 이해 영역). 3. 양성 평등한 성역할의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성 정체성과 성윤리 의식을 형성하여 발생 가능한 성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성문화 및 성윤리 영역).
중학교	성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 남녀의 신체적·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책임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하고 원만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 중학교는 사춘기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신체적 변화와 이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 2. 결혼과 가족 관계, 친구와 이성관계 등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인간 관계 이해 영역). 3. 양성평등에 입각한 성역할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성역할을 형성함으로써 남녀간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책임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성문화 및 성윤리 영역).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서 서로 다른 인격체와 만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과 관련된 정보, 성적 의사결정의 기술과 가치, 성의 주체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책임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1.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2.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인간관계 교육을 실시한다. 4. 성문제를 예방한다. 5. 성적 의사결정력을 키운다. 6.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심어준다. 7. 성표현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갖게 한다.

<학교 성교육의 내용>

각급 학교별 성교육 지도자료는 설정된 성교육 목표에 기초하여 신체 및 성심리 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문화 및 성윤리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세 개 내용 영역은 다시 다음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과 인간관계 이해 영역은 3개의 하위 영역으로 성문화

및 성윤리는 2개 영역으로 분류되며 이와 같은 체계 속에서 학교급별로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맞는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성교육 지도자료 작성을 위해 구성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성교육 내용체계안을 예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학교급별 성교육 내용 체계안

학교급	영역	신체 및 심리발달	인간관계이해	성문화 및 윤리
초등학교 저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과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자신의 소중함 - 임신과정 - 출산과정 - 출생근원(부모, 자신) ● 신체의 구조와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의 신체 구조와 차이 - 신체변화 - 성장발달의 개인 차이 ● 아동기 심리 특성 ● 생식기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의 필요성과 청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의 의미 ●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나의 출생근원 - 가정에서 성역할 - 부모의 책임과 역할 ● 우정과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우관계 - 남녀의 우정과 사랑 ● 이성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교제의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정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고정관념 ● 사회에서의 성 역할 ● 성폭력
초등학교 고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의 존중 ● 태아의 묘제 ● 유전과 생명체 ● 신체 발달의 차이 ● 제2차 성징 ● 생식기 보호 ● 동성 ● 절경 ● 이성의 생리적 변화 ● 에이즈 ● 사춘기의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 부부 ● 가족 ● 우정 ● 이성친구 ● 올바른 의사결정 ● 효과적인 자기 주장 ● 거부하는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 대중매체 ● 음란물 ● 성차이 ● 성 고정관념 ● 양성평등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의 신체 구조와 변화 ● 남녀의 신체 구조와 생식기 위생 ● 남녀 호르몬의 역할과 2차 성징의 발현 ●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요? ● 건강한 임신과 출산 ● 인공임신 중절(낙태) ● 나는 누구인가? ● 이성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 성욕을 조절할 수 있을까? ● 성병 ● 에이즈 ● 잘못된 성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은 왜 할까요? ●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 우정과 사랑 ● 이성교제 ● 이성간의 예절 ● 성적 행동의 자기 결정의 중요성과 그 책임 ●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 ● 자기 의사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이 무엇인가? ● 성폭력 우리가 지켜요 ● 성폭력 후에는 이렇게 ● 대중 매체속의 성정보 바로알기 ● 포르노의 영향 ● 성상문화-심대 매매춘의 문제 ● 사회에서의 성역할 ●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 ● 남녀의 협력과 조화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의 구조와 변화 ● 발달단계적 특성 ● 청소년기의 고민과 갈등 ● 임신과 피임 ● 성관련 질병 ● 이상 성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교제 ● 사랑 ● 사랑과 성적 행동 ● 성행동과 성적 의사결정 ● 결혼 ● 가정과 자녀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성폭력의 원인 및 피해자 지원 ● 대중매체의 성, 포르노 ● 성상문화-청소년 매매춘 ● 성차: 남성과 여성의 갈등과 다름 ● 성역할 및 성역할 정체감 ● 성역할 사회화 ● 심장행위의 영향 ● 양성 평등적 학교 및 사회

학교 성교육 발전을 위한 제안

앞에서 살펴본 세 나라의 성교육 실태와 성교육의 목표·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나라 학교 성교육에 시사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성교육이 활성화된 국가들의 경우에도 성교육이 독립된 교과로 존

미국, 영국, 일본 등 성교육이 활성화된 국가들의 경우에도 성교육이 독립된 교과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정부 차원에서 성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성교육 실시와 관련한 법적 체제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역 단위 차원에서 성교육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요구된다 하겠다.

재하지는 않으나 정부 차원에서 성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성교육 실시와 관련한 법적 체제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역 단위 차원에서 성교육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요구된다 하겠다. 즉, 성교육을 정규 교과화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관련 교과를 통해 체계적으로 성교육 시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창의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법교과 학습을 통한 재량활동 시간을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 성교육 시간으로 배정하는 등 학교에서의 성교육 실시, 성교육의 방향과 목표, 운영 체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시, 도 또는 학교차원에서 이를 토대로 성교육 내용 구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에서 살펴 본 세 나라의 경우 국가나 정부 관련기관들의 성교육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심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개발, 상담서비스, 교사 연수 등에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성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교육 교육과정, 성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 성교육 교사 양성과 연수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나라마다 성교육 실시와 관련한 다양한 지도방법과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실제적인 성교육의 효과를 기하고 있다. 모든 교과학습의 경우에도

내용에 따라 다양한 지도방법과 전략이 필요하듯이, 성교육의 내용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지도보다는 토론, 역할놀이, 사례연구 등의 다양한 지도 방법과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비디오나 영화 자료 등 다양한 매체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 - 부모(가정) - 지역사회간 성교육 연계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성의식은 학교생활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행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제 일차 집단으로서 가정이다. 그리고 제 이차 집단으로서 학교와 사회를 들 수 있다. 남녀(딸과 아들)의 차별 의식, 부모(남녀)역할, 사랑(부모와 형제자매)과 행복, 예절과 존중, 자기 의사표현 등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서는 제 일차 집단인 가정(부모 형제)생활로부터 먼저 배우게 된다. 그리고 현재 지역사회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가진 곳으로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은 보건소, 전문의료기관, 상담기관 등의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가정(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간에 상호 연계를 가진 협의체를 학교 내에 구성하고 정기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학교 성교육에 관련된 각종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

〈참 고 문 헌〉

- 김혜원·이해경(2000), 성교육 지도지침 및 자료개발 연구-고등학교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교육인적자원부.
 박효정(2000), 외국의 학교 성교육 사례, 학교 성교육 내실화·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성교육 세미나 자료, 교육부.
 박효정·박선환·서명숙(2000), 성교육 지도지침 및 자료개발 연구-중학교-수탁연구 CR 2000-24, 한국교육개발원.
 조연순·김정효 외 3인(2000), 성교육 지도지침 및 자료개발 연구-초등 고(4~6년)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교육인적자원부.
 현주·박효정·이재분(1993),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읽기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보고 RR 93-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관련 세계의 연구

글 / 김정자 (한국교육개발원 전산정보팀장, kza@ns.kedi.re.kr)

교수프로그램의 일관성

미국의 각 학교들이 그 동안 추진해 온 개혁 노력이 어떠한 이유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 연구를 소개한다. 이 연구는 '교수프로그램의 일관성'이라는 개념을 빌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연구결과

-교수프로그램의 일관성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학교 내 있을 때를 말한다.

즉 공통의 교수체제가 구축되어, 이를 바탕으로 학년간 교육과정 연계성 유지, 교사간 교수전략 공유, 학생평가, 교사평가, 교사채용 등이 이루어진다.

- 위와 같은 공통의 교수체제하에서의 교수프로그램의 일관성 유지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

- 교수프로그램의 일관성에서 상위권에 있는 학교의 특징은 학교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공통의 교수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근거로 교수전략, 평가, 학년간 교육과정의 연계성 유지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교수 프로그램의 일관성에서 하위권 학교의 학교장 특징은 교사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권과 결정권을 부여하여 교육과

정 자료와 교수전략 및 평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과제명

School Instructional Program Coherence: Benefits and Challenges

● 연구자

Fred M. Newmann(University of Wisconsin) , Betsy Ann Smith(Michigan State University) Elaine Allensworth(Consortium on Chicago School Research), Anthony S. Bryk(University of Chicago)

● 연구기관

Consortium on Chicago School Research(미국)

● 연구데이터

이 연구는 Chicago시의 초등학교 222개교에 근무하는 교사, 총 5,358명(학교 당 25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 연구발표시기 : 2001. 1

● 출처

www.consortium-chicago.org

《charter school과 공립학교》

미국의 공립학교가 그간의 charter school과의 경쟁을 통해서 도움을 받

기도 했지만 피해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연방 교육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4년간에 걸쳐 수행된 연구에서 5개주(Massachusetts, Arizona, California, Colorado주)의 49개 학교구를 대상으로 현지학교 방문, 학교구의 교육담당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 등을 통해서 charter school이 이웃 공립학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각 학교구의 공립학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추진 charter school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새로운 학교의 설립, 교육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지역학교의 교육구조 변화 초래 등이 charter school이 공립학교 시스템에 끼친 영향으로 나타났다.

- charter school과의 경쟁으로 공립학교의 입학률이 줄고, 따라서 학교구의 예산도 줄면서 기구 축소, 직원 해고 등을 겪었다. 또 이러한 학교구(charter school의 허가권이 복수인 주의 경우는 charter school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겨냥한 경쟁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charter school의 허가권이 있으면서 예산

에 변동이 없는 학교구는 charter school 을 하나의 또 다른 학교 선택권이나 교육 개혁을 촉진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 연구과제명

Challenge and Opportunity: The Impact of Charter Schools on School Districts

● 연구자

John Ericson, Debra Silverman, Paul Berman, Beryl Nelson, Debra Solomon

● 연구기관 : RPP International

● 연구비 지원

U. 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 연구발표시기 : 2001. 6.

● 출처 : www.ed.gov

《P-16 개혁운동》

유치원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의 공교육 협력체제 구축 운동 - 이른바 미국의 P-16 개혁운동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다. 이 연구는 그 동안 미국의 교육계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온 학교급간의 연계·협력 운동을, 선두주자인 New York시를 비롯한 Georgia주 등의 P-16 개혁운동의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P-16 개혁운동의 목적은 상급학교로의 성공적인 이동을 위해서 교육시스템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 즉 학교급간에 교육기준과 기대를 상호 연계하고, 공동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호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연구결과

- 현재 미국의 24개 주에서 P-16 개혁운동 노력을 추진하고 있고, 이 가운데 21개주는 지난 5년 동안 P-16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 조사결과 New York시가 P-16 개혁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지난 25년간 추진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예를 들면 City University of New York와 161개 공립고등학교와의 상호 연계 프로그램(13,000명 참여), 즉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 머물면서 대학교의 학점을 인정하는 과목을 이수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Georgia주의 PREP 프로그램, 그리고 University of Texas와 초등학교, 중등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연구과제명

Building a Highway to Higher Education : How Collaborative Efforts are Changing Education in America

● 연구자 : Neil Scott Kleiman

● 연구기관

The Center for an Urban Future (미국)

● 연구발표시기 : 2001. 6.

● 출처 : www.nycfuture.org

《미국 대도시학교의 학업성취도》

미국 대도시 학교들이 그간의 개혁 노력을 통하여 각 주마다 설정한 각각의 교육성과목표 기준에 근거해 어느 정도 교육성과를 달성했고,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나를 알아본 연구를 소개한다. 이 연구는 미국 최초로 도시학

교의 교육성과 달성 정도를 제시한 연구로서, 35개 주에 있는 55개 학교구를 대상으로 하여 수학과 읽기의 학업성취도의 결과를 학교구별로, 학년별로, 또 인종간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비교·분석하여 각 주(States)가 목표 로한 교육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를 밝혔다.

● 연구결과

- 수학 교과에서는 대도시학교구의 92%가, 또 읽기 교과에서는 80%의 학교구에서 반 이상의 학년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고, 인종간의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대도시학교의 학생 당 교육비가 국가평균치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고, 주(States)가 지출하는 대도시학교의 교육예산이 15.2%에서 14.1%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성과 향상의 이유는 높게 목표한 교육기준, 강력한 리더십, 수업시간 연장, 수준급 교수, 강한 책무성, 지역사회의 지원, 효율적인 학교경영 등에서 연유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연구과제명

Beating the Odds: A City-By-City Analysis of the Student Performance and Achievement Gaps on State Assessments

● 연구기관

Council of the Great City Schools (미국)

● 연구발표시기 : 2001. 5.

● 출처 : www.cgcs.org

K E D I 연구보고서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CR 2000-19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 방안연구

연구책임자: 이희수 / 공동연구자: 백은숙, 방명숙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운영 방안

RR 2000-12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운영 방안

연구책임자: 임두순 / 공동연구자: 최상근, 예철해



교육통계정보의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RR 2000-13

교육통계정보의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만희 / 공동연구자: 한유경, 심용기, 김정겸, 김창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 연구

CR 2000-20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백은순 / 공동연구자: 이남철, 이희수, 오혁진, 류경숙



평생학습지원체제 종합 발전
방안 연구(1)

RR 2000-1

평생학습지원체제 종합 발전 방안 연구(1)

연구책임자: 이희수 / 공동연구자: 박인중, 백은순, 서해애, 유균상, 최둔민, 홍영란



창의적 지식생산자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 교육 활성화 정책 방안

CR 2000-1

창의적 지식생산자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 교육 활성화 정책 방안

연구책임자: 조석희 / 공동연구자: 김홍원, 장영숙, 임희준, 최승원, 김종득

CR 2000-28

초·중등학생의 사이버상에서의 상호작용 양상 분석

연구책임자: 류방란 / 공동연구자: 정민승, 이종태



CR 2000-6

유아교육 투자우선지역 선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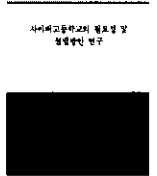
연구책임자: 나정 / 공동연구자: 유희정, 김정래, 김안나, 박은실



CR 2000-32

사이버고등학교의 필요성 및 설립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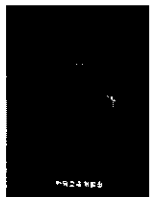
연구책임자: 최상근 / 공동연구자: 전인식



CR 2000-48

OECD 국제 교육 지표 개발 -교육과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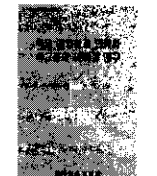
연구책임자: 한유경 / 공동연구자: 백영실, 김성은



RR 2000-8

학교 경영환경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십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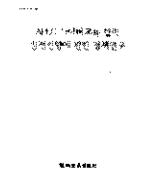
연구책임자: 유현숙 / 공동연구자: 김동석, 고전



CR 2001-5

APEC 사이버교육 협력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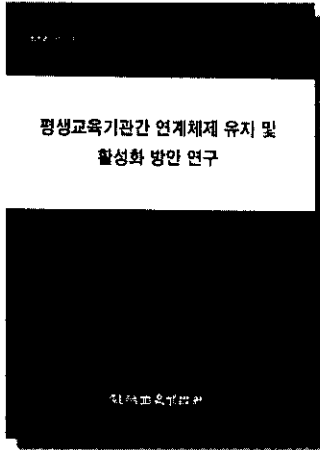
연구책임자: 강숙희 / 공동연구자: 최성희, 정수정



연구보고서 열람 및 구입문의
02)3460-0407

CR 2000-19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희주
공동연구자 : 백은순, 방명숙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평생교육법 시행과 때를 맞추어서 지역평생교육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간에 수평적·수직적 연계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론적으로는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체제와 지역평생교육 시스템에 관한 국내·외 문헌들을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평생교육 연계체제 구축 동향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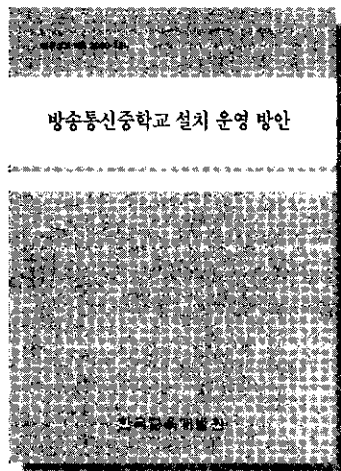
생교육기관간 연계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여 평생교육관련 기관간의 연계체제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 방안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간 정보유통 및 자원활용을 극대화되도록 연계체제를 구상함으로써 평생교육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RR 2000-12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운영 방안

연구책임자 : 임두순
공동연구자 : 최상근, 예철해



이 연구는 중학교 졸업학력을 원하는 성인들을 위하여 방송과 통신의 방법으로 중학교 과정을 이수케 하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59세 이하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성인들(약 250만명 추산)과 중학교 중도 탈락자를 위한 국가수준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설치를 위한 수요자(1,897부)와 전문가(1,070부)의 의견조사(총 3,172명)를 실시하였다.

의견 분석 결과,
첫째, 방송통신중학교 설치를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둘째, 전국적으로 설치·운영할 것

과 가급적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셋째, 중학교에 부설보다는 기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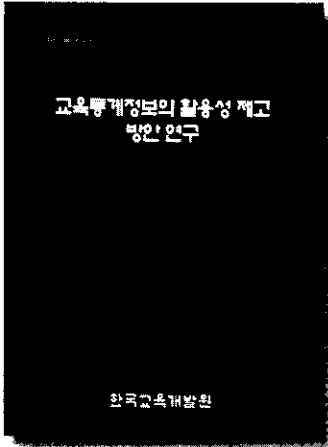
넷째, 성인 학습자를 위한 전용 교과서를 사용할 것을 바라며,

다섯째, 수업 연한은 3년제를 절반이 찬성하지만 2년 6학기제도 다수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관계 법령(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및 동 시행령 등)의 개정과 정비가 시급하다.

RR 2000-13

교육통계정보의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만희
 공동연구자 : 한유경, 심웅기,
 김정겸, 김창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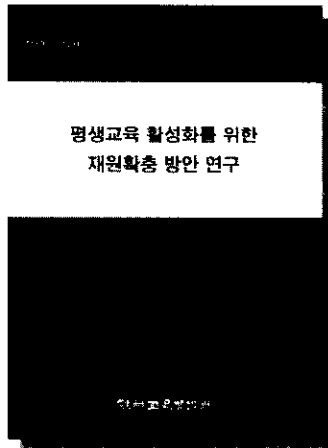
이 연구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통계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통계연보를 바탕으로 활용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수요자 요구형'의 다양한 교육통계정보 자료집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일환으로 교육체제와 교육통계정보의 상관성 분석, 우리 나라 교육통계정보 활용에서의 문제점 분석, 교육통계정보의 활용 현황 분석,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의 교육통계정보 자료집 분석,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통

한 활용성이 높은 항목의 산출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교육통계정보를 널리 활용하는 데 충족되어야 할 필요충분 조건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CR 2000-20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백은순
 공동연구자 : 이남철, 이희수,
 오혁진, 류경숙



본 연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재원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평생교육재정의 개념 및 구조; 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 예산 현황 분석;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평생교육재정 현황; 평생교육재정 소요; 그리고 평생교육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비하여 평생교육분야에 사용되는 재정이 매우 열악하고, 각 부처별로 평생교육관련법이 70종에 달할 정도로

부처별로 예산을 각기 집행하고 있어 부처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평생교육 재정현황분석에서는 각 부처별 평생교육예산과 정부부처 평생교육예산의 기능별 분석 등이 제시되었다. 재원확충 방안으로는 정부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평생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연계체계도 수립되어야 한다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RR 2000-1

평생학습지원체제 종합 발전 방안 연구(1)



연구책임자 : 이희수
 공동연구자 : 박인중, 백은순,
 서혜애, 유균상,
 최돈민, 홍영란

본 연구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새로운 평생학습지원체제 모형을 제시하고자 총론과 각론의 형태로 나누어 2개년도에 걸친 종합적 연구이다. 1차년도에 진행된 본 연구는 기초 연구 및 총론적 성격의 연구로서 평생학습의 대내외 환경 분석, 평생학습의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 기구의 활동과 동향 분석,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우

리 나라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델파이 조사, 세미나·토론회·전문가 협의회 개최, 출장 및 면담 조사, 사례 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 제언으로 평생교육에서 평생학습 지원 체제로의 점진적인 이행노력이 필요하고, 평생학습의 이념으로서 자아실현, 사회적 결속, 경제적 경쟁력 제고와 같은 세 가지 이념의 균형 유지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CR 2000-1

창의적 지식생산자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 교육 활성화 정책 방안

연구책임자 : 조석희
 공동연구자 : 김홍원, 장영숙, 임희준,
 최승연, 김종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창의적인 과학지식을 생산할 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 교육체제를 확립하고 그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가 무학년제로 실시되는 영재학교의 설립·운영방안, 국내 일반대학, 과학기술원, 외국 대학으로의 진학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영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발된 창의적 지식 생산 능력이 손색없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까지 구안 제시하였다.

과학영재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적 측면과

지원의 측면으로 나누어 체제 구축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교육제도적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단선형의 집중적 과학영재 교육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피라미드형 과학영재 교육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과학 영재교육의 지원체제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영재교육 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학영재 교육제도가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과학영재들을 지도하면서 동시에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를 하도록 제안하였다.

CR 2000-28

초·중등학생의 사이버상에서의 상호작용 양상 분석

연구책임자 : 류방란

공동연구자 : 정민승, 이종태



이 연구는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사이버공간이 초·중등학생들의 일상 생활을 재구조화할만큼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양상과 그 안에 스며있는 문화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이버 공간에 탐닉함으로써 인간관계가 결핍될 것이라는 기성 세대의 우려와는 달리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된 장으로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상에서의 활동을 크게 세 영역, 즉 1) 인기 연예인 특히 가수의 팬클럽 활동, 팬픽, 야오이 2) 일상적인 채팅과 동호회 활동 3) 학교 생활에 관련된 학급 사이버 카페나 반학교

사이트 활동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사이버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게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만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다양한 실험과 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며, 비슷한 생각과 취향을 가진 청소년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보여주는 왕성한 학습 욕구를 이끌어내어 이를 의미있게 표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CR 2000-6

유아교육 투자우선지역선정 연구

연구책임자 : 나 정

공동연구자 : 유희정, 김정래,
김안나, 박은실

본 연구는 유아교육 수혜율이 낮은 지역에 우선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유아교육 진흥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유아교육 기회의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다.

각 지역의 유아교육 수혜율, 인구 통계학적 지표, 경제적 지표의 세 가지로 유아교육 투자우선지역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취원율이 낮은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국가적 차원의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통계적인 방법과 지역 확인 면담 및 협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유아교육 투자우선지역은 전국 180개 지역 교육청 중에서 40개 지역이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은 3개 지역,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27개 지역, 그리고 최우선 기준인 통합 취원을 한 가지 조건에만 부합하는 지역은 10개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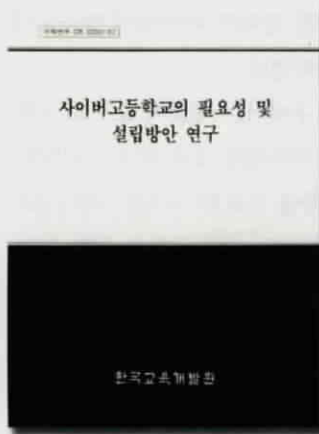
이올러 본 연구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각 시·도의 통합 취원율 평균을 기준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유아교육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시·도 차원에서도 유아교육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CR 2000-32

사이버고등학교의 필요성 및 설립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최상근

공동연구자 : 전인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도래한 무한 정보시대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국민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교육 방법과는 다른 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그 요구는 자기주도적 학습, 원격교육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평생 교육의 확대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교사가 훌륭한 안내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교사는 자신의 앞의 세계 속에 학생들을 가둬둘 것이 아니라 넓은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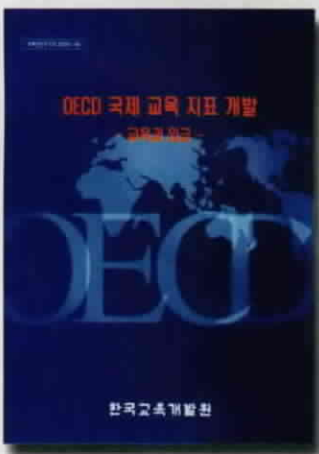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교육은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평생학습을 통한 끊임 없는 지식충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부터 사이버 교육을 익히고, 추후 필요할 때에는 다시 지식을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고등학교는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고등학교가 사정이 있어서 정규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 교육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CR 2000-48

OECD 국제 교육 지표 개발 - 교육과 임금-

연구책임자 : 한유경

공동연구자 : 백영실, 김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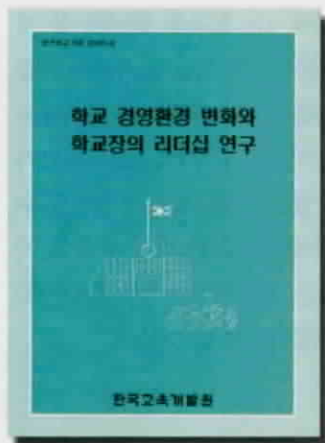


『OECD 국제 교육 지표 개발: 교육과 임금』 연구는 OECD 국제교육지표 사업단(INES: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내의 네트워크 B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표 중 '교육과 임금'에 관한 지표를 산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네트워크 B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양식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여 작성한 후, 지표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5~64세의 성별에 따른 학력별 상대임금, 30~44세의 성별에 따른 학력별 상대임금, 30~44세 및 55~64세의 학력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를 살펴보고, 각 항목별 추이를 분석하며, 각 항목

별로 국제비교를 하므로써 교육과 임금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치를 가능하였다. 또한 교육과 임금이 있어서 성별과 학력에 이어 중요한 변수인 임금과 연령간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교육과 임금에 관한 국제교육지표 개발 결과는 우리 나라의 학력 및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는 우리 나라의 교육과 임금 수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및 노동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R 2000-8

학교 경영환경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십 연구연구책임자: 유현숙
공동연구자: 김동석, 고전

본원의 2000년 기본과제인 『학교 경영환경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십 연구』는 학교 내·외적 경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리더십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경영환경을 정보화, 지식기반화 등 외적 환경변화와 학교교육조직, 교육프로그램, 교육운영, 교원조직의 변화 등 교육내적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최근의 리더십 패러다임 변화를 심층분석하였다. 아울러, 학교장의 법적·제도적 권한과 직무 및 인력구조 분석, 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통한 학교장 리더십에 대한 인식과 요구 분석 등을 토대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학교장의 리더십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초·중·고등학교 6개교를 선정하여 학교장의 리더십에 대한 자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연구진이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관찰과 면담을 통하여 리더십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이 요구되는 학교장의 리더십을 교육적이고, 다양한 학교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설정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 능력과 기술, 특성, 직무 등을 제시하고 있다.

CR 2001-5

APEC 사이버교육 협력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연구연구책임자: 강숙희
공동연구자: 최성희, 장수정

APEC 사이버교육 협력사업은 우리나라가 2000년 5월 APEC 인력자원개발실무그룹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중 12개국의 찬성으로 APEC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다. 이 협력 사업은 APEC 인터넷봉사단 사업과 사이버 교육네트워크(ACEN) 구축·운영 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이 두 사업은 2001년도에 출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이 협력사업의 타당성 조사연구(feasibility study)로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APEC 인터넷봉사단 사업과 ACEN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 APEC 회원국들이 어느 정도의 관심과 참여의사가 있는지, 또 그들의 참

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APEC 21개 회원국들의 교육정책결정자, 교사, 교장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APEC 회원국들이 인터넷봉사단 사업과 ACEN 사업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감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원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짓말
제임스 W. 로웬 지음 /
이현주 옮김 / 평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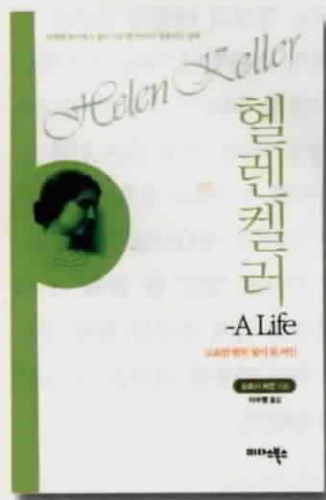
이 책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미국 역사교과서 12권이 백인 위주의 역사와 유럽중심주의로 쓰여지면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생략되고 왜곡되었으며 놀랄만한 오류들로 훼손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추수감사절에 관한 진실을 살펴보면, 과연 순례자들이 순전히 영국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와서 그렇게 평화스럽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는가? 아메리카 대륙을 휩쓸었던 역병으로 인해 전혀 면역력이 없던 인디언들이 거의 초토화되고 난 후에 거의 힘들이지 않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그들은 신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럼, 왜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가르친 결과는 무엇인가?

윌슨 대통령이 주장했듯이,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이상국이다”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의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1984년』의 조지 오웰은 “현재를 통제하는 자가 과거를 통제한다”라고 하면서 역사가 쓰여지는 방식을 누가 결정하는가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부유한 자본주의자가 주요 텔레비전 방송망, 대부분의 신문과 항의를 잠재우고 불평등 기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빈민가 사회의 정수를 흡수해 버린 것이다.

헬렌켈러
도로시 허먼 지음 / 이수영 옮김/
미다스북스



이 책은 공식적 보도사진 뒤에 감추어진 헬렌의 ‘숨은 모습 찾기’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 그에 따르면 헬렌은 평범한 삶을, 사랑과 성을 꿈꾼 평범한 여성이었고 남편과 아이를 갖고 싶어했다. 그러나 세상의 바람 때문에 그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왜곡됐다. 그는 남들과 똑같은 개인적 행복의 소망을 미뤄둔 채 고통받는 사람과 소외된 사람을 위해 살아야만 했다.

헬렌을 이해하는 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림자 인물’이 있다. 자기 안에 갇힌 헬렌을 세상 속으로 이끌어내고 평생 그의 눈과 귀가 되어준

사람, 애니 설리번. 이 책은 불우한 유년기를 포함해 세밀한 삶의 부분까지를 헬렌과 동등하게 비추어낸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이용했으며, 애니는 헬렌에게 평생을 바친 ‘희생물’이 아니라 헬렌을 이용해 명예와 기회를 얻으려 했다는 일부의 시각 역시 저자는 냉정하게 들여다본다. 그러나 결론은 전통적인 해석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두 사람은 마치 부부와 같은 친밀감으로 서로에게 의지했다. 서로 만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서 애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그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애착의 대상을 찾았다.”

생명의 원리

철학적 생물학을 위한 접근

한스 요나스 지음 / 한정선 옮김 / 아카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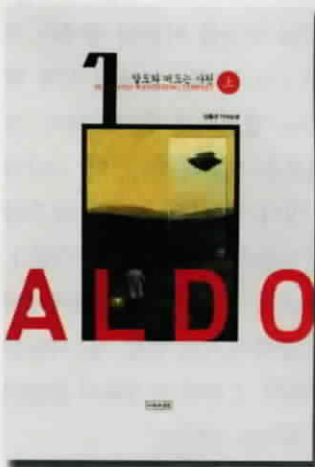
이 책은 일차적으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생명의 기본적인 양태, 조건, 능력, 가능성 등을 생각해 봄으로써 생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또한 20세기 철학의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생물학·인공지능학적 체계이론 등의 자연과학과 대화하면서 생명을 포괄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자연과학이 제시하는 분석적 자료들을 수용하고 검토하면서도, 자연과학적 생명이해가 빠질 수 있는 유물론적·기계론적 생명이해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빠지기 쉬운 추상적이고 인간중심적

인 생명이해와도 비판적인 거리를 취한다. 그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생명체적 체험과 정신이 증거해 주는 자명한 사태들, 즉, 자유, 초월, 삶의 의지, 살면서 경험하는 죽음에의 위험 등을 기술하며, 이것을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유추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명의 신비를 푼다고 자처하고, 생명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이 시대에, 『생명의 원리』는 우리가 생명에 대해 어떤 모험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알도와 떠도는 사원(上·下)

김용규 지음 / 이론과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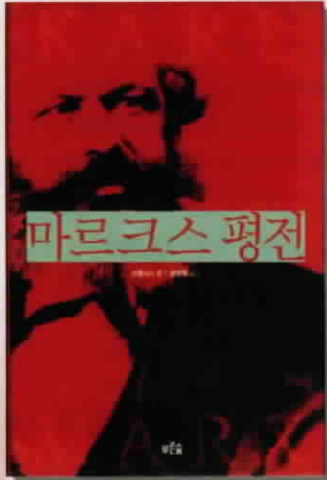
철학을 소설 형식을 빌어 썼다면 자칫 지루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추리와 환상 소설의 기법으로 쓰여져 있어 절묘하게도 책을 손에서 뗄 수 없을 만큼 읽는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작가가 의도한 바대로 소설을 재미있게 읽다보면 어느새 어려운 철학, 사회 사상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근대화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 즉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이성이 어떻게 신으로 등극했으며, 그 특성과 한계는 무엇이고, 그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역

할은 또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폭력으로 변했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가 바로 주제이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는 영생의 비밀과 강신술 같은 신비적 수단이나 계몽 프로젝트 같은 이성적, 과학적 수단이 아니라 자유, 평등, 사랑, 희생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만이 구현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작가는 주인공 ‘알도’를 통해 이 세상을 보편적 가치 추구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따뜻한 시선을 이 소설에 담아 놓았다.

마르크스 평전

프랜시스 윈 지음 / 정영목 옮김 / 푸른숲



이 책은 20세기 역사를 만든 신화 속의 성자이자 악마, 박제화된 마르크스의 초상에 피와 숨결을 불어 넣어주는 책이다. 마르크스는 철학자, 역사가, 경제학자, 언어학자, 문학 비평가, 혁명가였으나 더 중요한 사실은 마르크스 역시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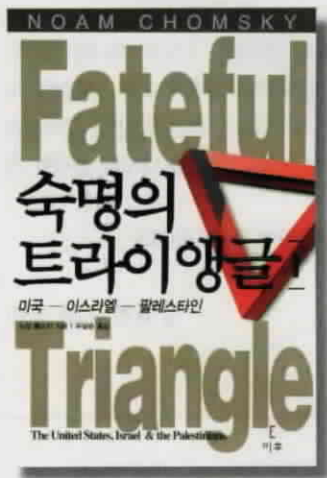
스탈린의 소련에서 마르크스는 세속적인 신의 지위에 올랐다. 저자는 필요에 따라 신격화되기도 하고, 모든 악의 근원으로 악마처럼 폄하되기도 한 위대한 사상가를 피와 살을 지닌 인간으로 복원시킨다. 생활인으로서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가장, 아내를 배반했던 남편, 부친의 장례식조

차 외면했던 탕자, 몇 푼의 돈을 얻기 위해 친척과 친구들에게 수없이 구차한 편지를 썼던 궁핍한 신사, 자식 셋을 질병 속에 죽어가게 했던 가난한 아버지였지만 그런 수많은 인간적인 약점과 고통이야말로 그의 거대한 사상을 배태한 토양이었다. 그렇기에 그가 산 삶의 구체성을 이해하지 않고서 마르크스의 사상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책은 수많은 약점을 지닌 허약한 인간의 모습과, 시대의 모순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그 모순에 대해 처절하게 투쟁한 거인의 삶을 함께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숙명의 트라이앵글

미국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노암 촘스키 지음 / 유달승 옮김 / 이후



이 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중동문제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 책에서 촘스키는 중동문제가 종교적, 인종적 갈등이기 전에 그 중심에 미국이 자리하고 있는 복잡한 정치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 삼각관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살살이 파헤침으로써, 우리에게 어려워만 보이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 특별한 관계를 옹호하고 고착하는 또 다른 삼각관계인 지식인, 정치가, 언론의 본질을 파악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세 당사자는 숙명의 트

라이앵글에 서로 맞물려 파멸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한다.

자신의 주장을 정교화하면서 촘스키는 주류 미디어의 설명에 내재한 신화와 왜곡을 벗어난다. 그는 이 책에서 문명화된 백인 사회가 저지르는 야만적이고 공공연한 인종차별주의, 어찌면 악명 높은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보다 더 악질적인 모습으로 가득한 현실의 조각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모으고 있다.

중동정치에 대한 촘스키의 기념비적 저서인 이 책은 중동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대외정책,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책이다.



폐교의 활용방안을 알려주세요

지 난 호에 소개 된 <사이버 교육과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글을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최근 일선학교 중엔 정보교육을 강화한다고 방침을 세우는가 하면 정보교육 전문학교로 계열 전환까지 한 학교도 많지만, 대부분 실용적 기술 교육에만 치중할 뿐 윤리교육의 비중은 그다지 크게 두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무조건 막고 보자는 식의 사이트 규제 또한 도리어 불법사이트의 우후죽순격 양산과 각종 유해물의 난립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지 않나 생각하네요. 점점 무분별해져 가는 사이버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확고한 법적 잣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식이 하루 빨리 정립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과 주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입니다

강진규 (대전 중구)

현 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다뤄주세요

별 로 두껍지도 않고 쉽게 열어서 볼 수 있는 「교육개발」은 내용이 많지 않고 재미있어서 접자마자 끝까지 읽어버렸답니다. 그렇지만 <특별기획>의 경우, 전문가들에 의한 내용뿐이라서 무조건 수용밖에 되지 않는 상태이니, 포럼이나 토론형식을 통해 독자들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었으면 해요.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특별기획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영화, 비디오, TV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엇이 어떤 면에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거나 좋은지 몰라 아무거나 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현재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좋은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전에 비교교육학회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니, 우리교육에서 교과서가 교육에 미치는 힘은 엄청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내용도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서영 (충북 청원)

새로운 교수모형과 연구동향이 궁금합니다

W BI, ICT 활용교육 등 요즘 정보화 교육은 필요불가결한 교수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동향이나 현장경험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지적과 대안들은 독자들의 답답한 심정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좋은 칼럼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접하기 힘든 사이버 교육에 관한 저명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는 사이버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버 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또한 참신한 기사였습니다.

항상 교육개발 편집위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다음 호엔 교육전반에서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교수모형(수업)ex : 협동학습) 그리고 최근 연구동향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진강 (경남 창원)

한글 문화의 위치를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주어 좋았습니다

이 번 호에서 좋았던 칼럼은 '인터넷 세대의 한글쓰기'였습니다. 저는 채팅이나 이메일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인터넷 상에서의 한글은 너무나 많이 변형되어 있어 그 뜻을 이해하기조차도 힘들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평소애 이런 경우를 접할 때마다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확한 국어를 배우고 알아야 하는 초등학교생들한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지나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칼럼을 통해 우리 한글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 좋았고, 정보화라는 첨단과학만을 쫓아가기 보다는 한번쯤 우리에게서 한글 문화의 위치를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주어 좋았습니다.

늘 교육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임선 (서울 성북)

「교육개발」은 한국교육의 명쾌한 해답서입니다.

불투명한 오늘의 한국교육, 세계의 교육현장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냈고 「교육개발」은 그 사례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염려는 「교육개발」을 읽는 중에 사라질 것입니다.

- 구독방법
지정된 계좌로 입금후 "가입신청서"를 팩스나 우편, 통신으로 우송
- 연 회비 : 1구좌당 25,000원 (격월간)
- 입금계좌 : 369-01-010147(농협) / 296-22-00296-3(외환은행)
-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문의처 : (우)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홍보출판팀
Tel. 02-3460-0235, 0411 · Fax. 02-3460-0151
E-mail : keditor@ns.kedi.re.kr

당신이 KEDI 도서회원이라면

한국교육개발원의 모든 연구결과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교육의 종합적인 연구 산실로서 각종 연구보고서와 교육 교재 및 학습자료 등의 간행물을 계속하여 발간·배부함으로써 한국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본원의 연구 산출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교육 관계자 및 기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1987년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각종 간행물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회원 자격 및 특전
 - (1) 회원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짐.
 - (2)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6회), 「한국교육」(연 2회) 우송
 - (3) 당해연도 「연구보고서」 10여종 우송(익년도 3월중)
- 가입 방법 :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 연 회비 : 1구좌당 120,000원
- 입금계좌 : 011916-0006202(우체국) / 070-01-0379-171(국민은행)
-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문의처 : (우)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홍보출판팀
Tel. 02-3460-0408, 0234 · Fax. 02-3460-0151

연구보고서! 이제 CD-Title로 만나세요

한국교육개발원은 2000년도
연구보고서를 CD-Title로 제작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 이제 CD-Title로 만나세요.

2000년 연구보고서 시리즈

www.kedi.re.kr

KEDI Research

◆연구보고서 (I) -기본연구과제

평생교육의 혁신적 접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연구
21세기 교육복지 발전 방안 연구
고등교육 학생수요 분석 연구
교원직급 및 자격제체 개편 연구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분석
한국 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
학교경영 환경의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십 연구
초·중학생의 자적 정의 발달수준 분석연구
교육재정 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확보방안 연구
평생학습지원체제 종합발전 방안 연구(1)
방송통신대학교 설치 운영 방안
교육통계정보의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육효과 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II) -정책방안제시 연구

유아학교 모형 개발 연구
창의적 지식생산자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정책 방안
제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급별 시설공간 요건 분석 연구
초·중등 사학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원 양성·연수기관 인종거구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영재교육담당 교원의 양성 및 임용방안 연구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 발전 방안
교육분야 부패방지대책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 연구
경기도 고교 인시제도 개선 연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 체제 개혁 방안 연구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방안 연구
자율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초·중등학교 예산 총액배분 방안 연구
사내인정자격 등 경험학습의 평가인정 및 학점인정 방안 연구
사회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학교운영 방안 연구
- 학교주5일제 도입과 실행방안 -

◆연구보고서 (III) -기초 및 현장 조사·분석 연구

과외 교습 실태 조사
2000학년도 신설 교육대학원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
과외 교습 실태 조사(II)
「교직원진흥협방안」수립을 위한 국민여론 수렴 사업 보고서
교육대학교 운영 실태 분석
학교종합평가사업 종합보고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현황 조사 연구
초·중등학생의 사이버상에서의 상호작용 양상 분석
유치원 모의평가를 통한 유아교육평가모형 확립방안 연구
복합 교육관계 법령 분석 연구
OECD/INES 고등학교 국제조사 시행을 위한 기초 연구
학부제 운영성과에 관한 분석 연구
초·중등학교 표준 교육비 산출연구

◆연구보고서 (IV)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부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초등학교 기초기본 학습 부진학생 판별도구 개발 연구
중학교 기초기본 학습 부진학생 판별도구 개발 연구
고등학교 기초기본 학습 부진학생 판별도구 개발 연구
영재교육과정 개발 연구(1)
영재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초중 영재학교/영재학급용-
성교육 지도지침 및 자료 개발 연구(중학생용)
중요우형문화재 관련분야 제2차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특적예정자 재취업 및 고령자 직업재조성교육 프로그램개발연구
2000 국제교육백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컴퓨터 통신헌학 시스템 개발 연구
OECD 국제 교육 지표 개발 -교육과 임근
교육기본통계조사 사업 보고서
교육통계정보DB활동 업그레이드 및 전산기기 유지관리 사업
교육통계정보DB활동 웹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사업

CD 구입문의 : 한국교육개발원 전산정보팀
TEL : 02-3460-0407, 0411 (book@ns.kedi.re.kr)
4개 1세트 100,000원 (날개 구입시 각 30,000원)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개발 2001년 9·10월호 동권 129호 2001년 8월 20일 발행 국립중앙도서관 등록번호 00102718 등록년월 2001년 4월 11일 권4500권